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5, No.2, 2013

5집 2호 · 201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차례

특집

- 김경일 |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중국 3
- 박동훈 | 동북3성과 한반도 경험의 비전과 과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내실화의 관점에서 26
- 장즈창 | ‘거대분단’의 극복과 이상적 동아시아의 가능성:
‘한중 인문유대 강화’가 지역의 미래에 주는 의미 54

논문

- 정은미 |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74
- 김상무 | 내적통일 관점에서의 독일 통일 이후 중등 역사 교과서의 동
독사 서술에 대한 평가 105
- 김대식 | 종교 간 고통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과 유동적(liquid) 종교
..... 150
- 기타지마 기신 | 일본 불교의 평화실현 운동:
조도신슈(淨土眞宗)의 반(反)원전 및 반(反)야스쿠니
운동을 중심으로 181

서평

- 강성현 | 폭격은 제노사이드다:
폭격의 역사로 본 대량학살의 구조 219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중국*

김경일 (베이징대학)

국문요약

냉전이 종식된 후 동북아는 다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는 여전히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구조는 한반도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지정적(地政的) 의미”가 약화되고, “지경적(地經的) 의미”가 부각되면서, “소극적 평화”를 “적극적 평화”로, “불확실한 요소”를 “확실한 요소”로 전환시킬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통일은 근대 이후 줄곧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또한 한반도가 명실상부하게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연결점이 되어 동북아 경제의 일체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한반도야말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국의 굴기와 한반도의 통일 간의 관계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관계라 할 것이며, 양국 관계의 정확한 정립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큰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평화통일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북핵, 한중관계, 지정학, 지경학

* 중국어 원제는 “對於韓半島統一的中國的認識和對應”이고, 안소현(연세대학교 강사)이 번역함.

I. 들어가며

근대사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몇 차례 변화는 모두 전쟁을 통한 것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를 가져왔고, 1905년 러일전쟁은 일본이 구축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 질서의 발단이 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은 동북아 냉전 질서 체제를 고착화하였다. 이들 전쟁은 모두 한반도에서 시작되었거나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중국의 정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냉전이 종식된 후 동북아는 다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는 여전히 한반도를 구심점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가 가져온 동북아 지역의 안전에 대한 고민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의 주변 환경의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그 위협이 중국의 영토·주권·생존 보장 문제까지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구조는 한반도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지정적(地政的) 의미”가 약화되고, “지경적(地經的) 의미”가 부각되면서, “소극적 평화”를 “적극적 평화”로, “불확실한 요소”를 “확실한 요소”로 전환시킬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근대 이후 줄곧 중국에 영향을 미쳤던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또한 한반도가 명실상부하게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연결점이 되어 동북아 경제의 일체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I. 한반도와 중국 관계의 역사적 정립

많은 학자들은 한반도가 일찍부터 외적의 중국 침입을 제어해주는 일종의 “완충국” 역할을 하였다고 여긴다.¹⁾ 그러나 해양 세력이 한반도를 통과하여 중국대륙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있기 전까지 한반도의 중요성은 결코 지리적 완충 역할 측면에 있지 않았다. 고대 중원(中原)의 정권을 위협했던 것은 주로 북방의 소수민족이었다. 중원 정권이 경계하였던 것은 한반도와 이들 소수민족이 연합하여 중원 정권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중원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와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실로 적지 않았다.”²⁾

고대 중국과 한반도와의 관계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면, 고대 중국의 정세가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체로 중국이 통일되고 번영하였던 시기에는 한반도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고, 양국의 관계도 밀접하였다. 성당(盛唐) 시기의 당과 통일신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 중국의 정세가 혼란스럽거나 왕조 교체 시기일 경우에는 한반도 또한 혼란에 빠지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하였고, 양국의 관계에도 파란이 일어났다. 중국의 원명(元明) 교체시기나 명청(明清) 교체시기가 그러하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안정된 발전적인 관계가 성립한 것은 중국의 성당(盛唐)과 한반도의 통일신라 시기로부터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조 예치 체계(天朝禮治體系)”의 형성 또한 이 시기 양국 간의 밀접한 관

1) Robert R. Simmons 著, 林建彦, 小林敬爾 翻譯 『朝鮮戰爭と中ノ關係』(東京: コリテ 評論社, 1976). p.6.

2) 黃枝連, 『東亞의 禮儀世界—中國封建王朝與韓半島關係形態論』(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 p.27.

계에 힘입은 것이다. 그 후 중국과 한반도의 상보적 관계는 바로 이 체계에서 전개되어 나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중국 봉건왕조 질서 유지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체계는 사실상 당시의 국제질서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에 강대한 정부가 있어서 그것을 둘러싼 지역에 국제질서를 제공하고, 한반도와 중국 간의 평화 및 전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³⁾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 체계는 결코 순조롭게 발전해나가지 못하였다. 중국의 정국에 변화가 발생하여 왕조가 바뀌거나 신규 세력이 교체되면 기존의 체계는 크게 동요될 수밖에 없었고, 양국 간의 관계 변화에 따른 충돌이 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당조(唐朝)가 멸망한 후의 오대십국(五代十國) 시기에 고려와 송조(宋朝)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였는데, 그 결과 고려와 거란 사이에 충돌이 있게 되었다. 더욱이 원조(元朝)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원은 무력으로 고려를 정복하고자 하였고, 고려는 원에 대항하였으나 결국은 정복당하였다. 양자의 관계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가 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체계 내의 관계가 아니었다. 게다가 “몽고인은 유학과 예치주의를 숭상하거나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므로” 문화적으로도 소통하기 어려웠다. 양자의 관계는 “많은 부분이 ‘천조 예치 질서’라는 큰 틀 안에서 전개될 수 없었다.”⁴⁾

원명(元明) 교체시기에 이르러 고려의 공민왕은 반원친명정책(反元親明政策)을 실시하였으나 친원파(親元派)의 반대로 고려 조정은 친원(親元)과 친명(親明) 두 파로 양분되었다. 이에 명조(明朝)는 고려에 압력을 가하였고 양국은 다시 긴장 관계에 놓였다. 고려 왕조는 요동정벌(遼東

3) 위의 책, p.109.

4) 위의 책, p.183.

征伐)을 단행하였으나 반대파 이성계(李成桂)가 철병(撤兵)하여 정변(政變)을 일으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파로 멸망하였다.

명청(明清) 교체시기에 조선은 처음에는 명과 후금(後金)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취하였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는 친명배금 정책(親明排金政策)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후금으로부터 청조(淸朝) 초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대한 두 차례 정벌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상으로부터 한반도와 중국은 비록 당(唐) 중엽 이후 함께 하였으나, 한반도는 늘 중국 정세의 영향을 받아 왕조가 바뀔 때마다 거의 매번 진통을 겪어야 했고, 그런 다음에는 새로운 질서 체계로 재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그러한 진통은 모두 구 체계를 유지하거나 신 체계를 건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다. 그리고 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든 신 체계를 건립하기 위한 노력이든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설사 왕조가 달라진다 하여도 예치 체계의 본질적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일단 체계가 확립되면 쌍방은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욱이 체계의 중심 국가인 중국은 체계 유지를 왕조 이익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였다.⁵⁾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중국이 반식민지 봉건사회(半植民地 封建社會)로 전락하여 국제적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면서 “천조 예치 체계”는 유명무실해졌고, 게다가 열강들이 한반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1880년대 초, 청의 주일공사관 참찬(駐日公使館參贊)이었던 황준헌(黃尊獻)은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 조선에게 러시아에 대한 대비에 주의해야 하는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가까이 하고,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과 연대해야

5) 김경일·홍면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 논형, 2005).

한다”고 권고하였다. 1881년 만인의 조선 유생이 상소를 올려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미 “천하를 호령할 수 없었다.” 당시 중국에게 조선의 문제는 중국 한 나라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은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조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했다.

그 후 근대사로 접어들면서 전개된 역사는 중국의 주변국 가운데 중국의 정세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 한반도임을 보여준다. 1894년 한반도에서 시작된 “청일전쟁”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붕괴를 가져왔고, 중국은 한반도의 무대에서 퇴출되어 중국과 한반도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가 되었다. 1905년 역시 한반도에서 시작된 러일전쟁은 일본의 조선 병탄을 가속화하였고, 동시에 조선은 중국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결과 중국은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타이완(臺灣) 해방의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수십 년 동안 단절을 겪어야 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대, 한반도의 안정 여부와 한반도의 자주 독립 국가 성립 여부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안전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계된다. 이는 역사가 내린 결론이자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Ⅲ. 전후 한반도 문제의 여정과 중국

전후(戰後) 미국과 소련의 세력 쟁탈로 인하여 한반도는 인위적으로 분할되고 한반도의 남북 정치세력은 결국 분열되었다. 전후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기울인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다. 중국은 청일전쟁을 비롯하여 러일전쟁, 중일전쟁을 겪으며 한반도의 지정적 중요성을

절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은 각각 자신들이 지지하는 한반도의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하며 전후의 한반도와 중국 관계를 구상·기획하였다. 그런데 전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략 범위 안에 귀속시켜 한반도의 지정적 중요성을 다시금 상승시켰다. 이는 본래 중국이 원치 않았던 상황일 뿐 아니라 가장 우려하였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적 환경은 결국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국은 서방진영과 장장 몇 십 년 동안의 냉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의 정부를 건립하였을 때, 쌍방의 목적은 결코 세력 균형을 유지하거나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았다. 남북한은 모두 몇 천 년의 역사를 지닌 통일국가가 분열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고, 통일은 당연 남북한이 추구하는 지고무상(至高無上)의 목표였다. 남북한 공히 지니고 있었던 강렬한 통일 염원은 남북한 관계를 제로섬 관계가 되도록 하였다. 남북한 모두 상대방을 “위법집단” 내지는 “괴뢰집단”으로 간주하고, 북한은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을 제기하며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남한은 “북진 통일론(北進統一論)”을 제기하며 잃은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였다.⁶⁾ 심지어 북한은 헌법에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1970년 헌법을 수정하기 전까지 바뀌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바로 남북한의 제로섬 관계가 가져온 전쟁이었다. 냉전 시기, 남북한 양측은 또 다른 제로섬 게임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체제 경쟁”이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냉전 시기 남북한 양측의 역량 비교에서 생겨난 변화 또한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제로섬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양측은 통일 문제로 길

⁶⁾ 김경일·홍면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 긴 줄다리기를 전개해야 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 해, 제네바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사안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미국과 소련 두 진영에 나누어 속한 남한과 북한 또한 각각의 통일정부 건립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양측의 평화 공세는 사실상 한국전쟁 이전 견지하였던 각각의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 남북한은 여전히 각각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1950년대 한반도 평화통일 논쟁은 어떻게 통일정부를 건립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양측은 사실 무력통일 방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1960-1970년대에 이르러 남북 양측은 위에서 말한 체제 경쟁에 돌입하여 다른 방식의 제로섬 게임을 전개하였다. 남북한은 경제 건설, 국방 건설 등에서 격렬하게 경쟁하였다. 남한의 박정희(朴正熙) 정부는 “선 경제, 후 통일” 방침을 내세웠고,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 방침을 내세웠다. 박정희 정부가 실현한 “한강의 기적”의 주요 동력은 남북한의 “제로섬 게임”으로부터 나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양측은 한편으로는 경제 건설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성격의 “통일”을 모색하였다. 남북한은 1972년 “7·4공동성명”에 합의하고 처음으로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의미를 지닌 선언으로 남북한 쌍방이 무력 통일 방침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표명한다.⁷⁾ 같은 해 북한은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의 실제 당사자임을 제기하고 처음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⁸⁾ 그러나, 미·소 냉전 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북한·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를 통한 남북한 평화통일

7) 김경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특집: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북한학연구』 제1호(2005), p.9.

8) 『人民日報』, 1974년 3월 26일.

의 실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단지 또 다른 형식의 대결을 의미할 뿐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평화의 진행에 영향을 미쳐왔던 미국과 소련의 대항 형세가 사라지자 러시아와 한국, 중국과 한국은 국교를 수립하였고, 냉전 시기의 이른바 “북방 삼각 관계”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미국·일본·한국의 “남방 삼각”은 북한과 계속 대치하는 상태로 있어 냉전 체제는 여전히 잔존하였다. 남북 대결에서 열세에 놓여 있던 북한은 “냉전 체제”를 조속히 벗어나고자 미국·일본·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의 발걸음을 가속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고위 회담을 진행하고, 일본과 8차에 걸쳐 관계 정상화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남북 기본 합의서”의 체결,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이로써 한반도 냉전 체제의 종식이 목전에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평화의 분위기는 일소되었고 한반도에는 다시 암운이 드리워져 전쟁 국면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이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국과 평화 공존하는 것이 결코 한반도의 남북 간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 문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냉전 종식 후에도 미국은 냉전 시기의 “남방 삼각” 관계, 즉 미·일 및 한·미의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계속 북한 문제에 개입하였는데, 이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것으로 단지 북한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거점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어쩌면 미국이 이 지역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전주가 될 수도 있다. 1994년 북·미 간 체결한 제네바 합의의 경우, 미국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하나는 미국이 북한에 “연착륙”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곧 붕괴되리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제네바 합의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획기적 의미를 지닌 성과였다. 북한은 핵 협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미 간 “임시협정”을 체결하여 이로써 휴전협정을 대신하자는 뜻을 제의하였다. 북한에게 1953년 체결한 휴전협정은 단지 북·미 간 체결한 협정일 뿐이었다. 북한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또한 오로지 미국과 담판하고자 하였는데, 그 의도는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었다.

당시 한국·미국은 4차 회담을 열어 평화 시스템 구축 문제를 토론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이에 중국은 다시 한반도와 관계한 국제 협상에 참가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비록 이미 한국과 수교를 맺었고, 한국과 우호적인 정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에 기울어져 있었다. 4차 회담에서 중국은 대립 종식과 관계 개선, 평화적 공존, 한반도의 자주·평화 통일 실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에게 평화적 수단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평등·호혜 원칙의 기초에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며 군사적 신임 조치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군비를 감축할 것을 촉구하였다.⁹⁾ 4차 회담은 6차례 개최되었으나 미국과 남북한 각자의 목적은 달랐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남한은 4차 회담의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4차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으므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그다지 서두르지 않았다. 4차 회담은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는데 이는 각국이 추구하였던 목표가 달랐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1차 북핵 위기가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북한·일본 관계에 해

9) 『光明日報』, 1999년 1월 24일.

동의 기미가 보일 때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2차 핵 위기 또한 남북한 고위 당국자 회담과 북한·일본 고위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어 북한의 외교 전략 중심이 미국을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전 방위 외교로 전향되는 시점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한 및 북한·일본 관계가 미국이 설정한 구조 밖에서 개선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를 봉쇄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9.11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중국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6자 회담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미국·러시아·일본 및 남북한이 한 자리에 앉아 논의하는 6자 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의 매개가 된 것은 북핵 문제이고, 근본적인 동기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이라는 각도에서 보자면, 6자 회담은 사실상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국이 힘을 겨룬 무대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건립은 북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그 서막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6자 회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나타내는 “9.19 공동선언”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의 윤곽을 그려내었는데,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미 및 북·일은 관계 정상화 실현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며, 쌍방 혹은 다자의 방식을 통하여 에너지·무역 및 투자 영역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시스템 건립과 동북아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논하였다.

근대사 이후 한반도가 줄곧 동북아 질서 변화의 진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건립도 한반도를 핵심 지역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전쟁 방식과 달리 동북아는 평화적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길고

긴 반복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는 북핵 문제를 매개로 하여 6자 회담의 형식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존재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통일 진행 및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위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국이 한반도를 줄곧 자신의 전략 범위에 포함시켜 한반도를 동북아 전략의 거점으로 삼아 냉전 체제 속에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는 동북아의 강대국 관계를 굴절하여 반영하는 동북아 국제 정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핵 문제는 이미 “북핵”이라는 그 자체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북·미 관계”의 범주 또한 벗어나서, “강대국 관계” 차원의 움직임이 이끌어냈는데, 6자 회담이 바로 그 결과이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가 있게 된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한반도에서 그들의 전략적 역할을 없애고,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약화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각 측의 힘겨루기 중 전개될 것인데, 때로는 상당히 격렬한 대결을 겪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힘든 교섭·조정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6자 회담이 여러 해 동안 불발된 상황은 상호 교섭과 조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는 더욱 곤경에 빠져들었다. 3차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을 다시 금 흔들어 놓았고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일 관계, 한·일 관계, 남북한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가 날로 긴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동북아 국제 정치의 운행이 연동함을 나타낸다. 북핵 문제로 인한 위기는 동북아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국제 관계는 다시 북핵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동북아는 새로운 차원의 교섭과 조정에 접어들게 되었다.

IV. 한반도 통일 진행의 향방과 중국

한반도의 분열은 미국과 소련의 외적 요인과 남북한의 내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이다. 즉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가 교차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긴장되면 이에 상응하여 국제 관계 또한 변화가 있게 된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역시 급격히 긴장된 것이 그 한 예이다. 반대로 남북한 관계가 완화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관계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 모두 알다시피 두 차례 북핵 위기는 모두 남북 관계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을 때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말하자면, 한반도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남북 간의 화해 문제이기도 한 동시에 국제 관계가 다시금 조정되고 재정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사 이후 한반도의 역사를 둘러보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가 각 시대에 지녔던 “지정적 의미”에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는 지정적 의미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것이다. 그 의미는 “어떤 지리 환경이 어떤 국가의 전략적 목적의 범위나 시야에 들어감으로써 나타나는 가치”인데, 이는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의 유기적 결합”으로, 한 지역이 나타내는 지정적 의미는 인류 발전의 시대적·지역적 정치 상황이나 국가 간 전략 지향의 충돌 상태 등 요소와 관련이 있다.¹⁰⁾ 다시 말해, 근대 이후 한반도는 열강의 전략적 목적의 범위나 시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정적 의미가 부각되었

¹⁰⁾ 金景一·金強一, “朝鮮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的影響研究”, 『延邊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41卷 第4期(2008), p.38.

고, 또 이로 인해 연이은 강대국 간의 충돌과 전쟁이 있게 되었다. 19세기 말, 러시아는 극동으로부터 태평양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남하 전략을 세웠고, 한반도는 이에 러시아의 전략적 판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은 중국 침략을 위해 “북진 전략”을 세웠고, 한반도는 이에 다시 일본의 전략적 판도 안에 들어가서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통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한반도를 자신의 전략 안에 포함시켰다. 또 멀리 유럽의 영국 또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한반도의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최소한 러시아·일본·중국 삼국의 전략적 판도가 교차하였던 한반도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이 끝난 다음 한반도의 비극은 다시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판도 속으로 들어간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를 인위적으로 분할·점령하였고, 결국에는 한국전쟁과 60여 년의 분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냉전 종식 후, 한반도는 다시 동북아 국제 정치의 초점이 되었는데, 이는 강대국의 전략이 여전히 한반도에 머물러 있다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거점이다. 미국이 이 거점을 이용하여 미일·한미 간 동맹을 강화하여 막 굴기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는 여전히 부각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의 동북아 국제 정치는 바로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다. 강대국 전략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수 있는 관건은 한반도가 여전히 분열 상태에 놓여 강대국이 개입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강대국의 전략은 한반도에 발을 붙이기 힘들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는 분명 약화되거나 소멸될 것이다.¹¹⁾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 진행은 중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가 부각될수록 동북

아에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에든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한반도라는 거점에 의탁하여 미일 동맹 및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군사협정”을 촉구하여 중국에 막대한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후 미국은 북한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7함대를 “중국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 일컬어지는 서해(黃海)로 진입시켰다. 미국의 함대 위협을 두고 어떤 이는 심지어 “항장(項莊)이 검무를 춘 의도는 유방(劉邦)을 죽이는 데 있었던” 것과 같이 미국에게 실제로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의심한다. 이로부터 보건대,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가 부각될수록 미국이 전략을 펼치는 데에는 유리해지고, 중국에는 불리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사 이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연루된 결과로 중국의 영토·주권·생존이 위협 당하였던 국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대 이후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의 강화와 부각에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적 의미”를 약화하여 점차 소멸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의 궁극적인 약화와 소멸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통하여 완성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바로 “지정적 의미가 약화·소멸되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¹²⁾

과거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말할 때, 대부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한반도에서 교차·충돌하고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을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약화하려면, 중점적으로 말해야 할 것은 “해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이 한반도를 교량으

11) 위의 책, p.42.

12) 위의 책, p.44.

로 화합하고 융합하며 발전한다는 측면일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적극 부각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부각한다는 것은 사실 협력과 공동 이익과 발전을 부각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진행 과정은 바로 그 “지정적 의미”를 약화하고 “지정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정적 의미”는 “지정적 의미”와 다르다. “지정적 의미”는 전체 국력의 대항과 경쟁을 강조하지만 “지정적 의미”는 지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 이익과 국제 관계를 모색할 것을 강조한다. 오늘날 세계적 추세는 지정적인 것으로부터 지정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의 수요가 정치·군사 및 의식상태를 초월한다.¹³⁾ “지정적 각축” 또한 “지정적 각축”을 대체하고 있다.¹⁴⁾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은 세계 발전의 추세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이 “지정적 의미”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교류와 협력 가운데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도 부합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진행을 논할 때, 그 주체는 한반도의 남북한이다.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내적 요인이다. 다른 국가는 단지 외적 요인일 뿐으로 외적 요인은 내적 요인을 통하여 작용한다. 중국은 줄곧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며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의 화해 협력, 그리고 자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¹⁵⁾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 여부는 남북한의 경제 교류와 협력에서 결정되는 바가 클 것이다.

13) 韓銀安, “淺析地緣經濟學,” 『外交學院學報』 第 75期(2004), p.73.

14) 위의 책, p.70.

15) 『新華社』, 2013년 6월 28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북한 관계의 본질은 “제로섬 관계”이다. 이러한 “제로섬 관계”에 의지하여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남북한은 체제가 달라 더욱 어렵다. 그리고 어떠한 “신뢰 관계”를 설립하더라도 정권 교체에 따라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북한이 세운 “신뢰 관계”가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일소된 것이 그 한 예이다. 그러나 경제적 협력은 이와 다르다. 경제는 그 자체가 신뢰를 기초로 운행되고 신뢰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남북한이 함께 설립한 개성 공단을 예로 들면,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을 때에도 공단은 상대적으로 평온하였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개성 공단이 폐쇄될 상황이었으나, 남북한은 결국 살려 내었다. 이는 정권 교체가 정치·군사 관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제 관계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시작점은 바로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지경적 의미”를 부각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진작 일로에 있는 동북아 지역 경제가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동북아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욕망을 극도로 활성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의 대규모 경제 협력 내지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 체계 건립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이 설정한 전략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프로세스에서 북한의 경제를 회복·발전시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북한의 경제 발전 여부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의 시장 경제 요소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 진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재촉하기 위해서는 마찬

가지로 북한의 지정적 요소를 약화하고 지정적 요소를 더 많이 말해야 하며, 아울러 북한의 자원에 의한 변화를 더 많이 말해야 한다. 만약 북한에 대한 정책이 지정적 요소에 치중해 있다면, 언급하는 내용은 대부분 북한에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거나, 북한과 대항, 심지어 충돌하는 측면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만약 지정적 각도에서 북한에 접근한다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공동의 이익 및 발전 측면을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근래 중국은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행,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기초설비건설·자원개발이용·농업 등 영역에서 북한과의 실무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있는데, 이는 곧 지정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근래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핵무장과 경제건설 병진”이라는 노선을 제시하였다. 과거 일찍이 1960년대 북한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말은 ‘병진’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국방건설 측면에 치중하였다. 북한의 군사비용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여 1961년 2.8%에서 1967년에는 30.4%에 달하였다. 현재 북한은 다시 “핵무장과 경제 병진 노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둘은 서로 충돌하므로 ‘병진’하기 힘들다. 핵무기를 위해서는 서로 대항하는 긴장 국면이 필요하고,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안정된 국면이 필요하다. 양자는 함께 성립될 수 없으므로 북한은 어느 한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세로 보자면, 북한의 당면한 과제는 경제발전이다. 북한 또한 한반도의 “지정적 의미”를 부각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0년대 이래로 국가적 전략 중심을 점차적으로 경제건설 측면으로 옮기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경제 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이다. 북한이 처한 국제적 환경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구비하기 어렵게 하므로 경제 강국의 목표

에 이르기까지는 산재한 어려움이 너무도 많다.

북한의 3차 핵 실험 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외국 특히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일부는 이 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변화가 생겨 비록 이전과 같은 정책이지만 효과는 다르다고 여긴다. 그들이 보기에 북한이 위기 조성 국면에서 갑자기 대화로 전향하게 된 것은 중국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심지어 중국이 이미 한국 주도의 통일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마치 한국의 대북 정책이 중국의 대북 정책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듯하다. 중국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 착오나 오판을 방지하는가는 현재 한중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변화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일부 한국 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전략상의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북한이 다시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의 대북정책 또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른바 질적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대화와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일부 한국 학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과 손을 잡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여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에서 말한 바대로, 중국은 예전과 변함없이 남북한의 자주 평화 통일 실현을 지지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자주 평화 통일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한다. 하나는 통일의 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하며 무력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일은

만드시 자주적이어야 하며 외세 주도의 통일 진행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1840년대 아편전쟁으로부터 중국은 반봉건·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여 한때 “동아시아의 병자(東亞病夫)”로 불린 적이 있었다. 거의 한 세기 반에 달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및 한반도는 번영·강성한 중국을 본 적이 없다. 한반도는 20세기 초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전쟁 후에는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및 중국은 자주적 내지는 통일된 한반도를 본 적이 없다. 오늘날 중국의 굴기와 함께 한반도는 통일 프로세스에 진입하였는데, 이제 양측은 근대 이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모종의 위협이나 우려를 느끼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로, 양측은 쌍방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강대했던 중국은 한반도에 위협을 조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빈약한 중국이 한반도 정국에 위협으로 작용했다. 마찬가지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한반도야말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국의 굴기와 한반도의 통일 간의 관계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관계라 할 것이며, 양국 관계의 정확한 정립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큰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접수: 2013년 11월 20일 / 심사 : 201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6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국문논문

김경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특집: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북한학연구』 제1호(2005).

김경일·홍면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 논형, 2005.

외국어단행본, 외국어논문

Simmons, R. Robert 著. 林建彦, 小林敬爾 翻譯. 『朝鮮戰爭と中ソ關係』. 東京: コリャ 評論社, 1976.

金景一·金强一. “朝鮮半島의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의影響研究.”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1卷 第4期(2008).

韓銀安. “淺析地緣經濟學.” 『外交學院學報』 第75期(2004).

黃枝連. 『東亞의禮儀世界—中國封建王朝與韓半島關係形態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

언론 매체

『光明日報』

『新華社』

『人民日報』

Korean Peninsula's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and China

Jin, Jing-Yi (Peking University)

Abstrac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Northeast Asian region entered a period of new order which has been unfolding with the Korean Peninsula on its ce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riginated from the still existing Cold War structures and the remaining Cold War structure originated from the disruption of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ultimately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 Thus,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significance" will weaken and "geoeconomic significance" will stand out, changing "passive peace" into "active peace", "uncertain factors" into "certain factors".

For China,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means complete resolution of the issues that have kept on influencing China since Modern age which also means that Korean Peninsula will take the crucial role in economic integration and building up new order and in Northeast Asia by becoming linkage of marin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economic zone. It is not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but the disrupted Peninsula that threatens China's security. The rise of China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the most stable relationship in Northeast Asia. The clear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will work as a positive energy in constructing the new order in Northeast Asia.

Key words: Peaceful Unification Process,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North Korean Nuclear, Korea-China relation, geopolitical, geoeconomic

김경일(金景一, Jin, Jing-Yi) —————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 지역연구센터(地域研究センター),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거쳤으며, 현재 베이징대학 외국어단과대학(外國語學院) 조선언어문화학과(朝鮮語言文化係) 교수이다. 주요 저술로는 『中國朝鮮族文化論』, “淺論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的三個層面”,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등이 있다.

역자: 안소현 —————

현재 연세대 강사이고, 중국고전문학을 전공하였다. 최근 논문으로 “완적 영희시 연구” 등이 있다.

동북3성과 한반도 경협 의 비전과 과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내실화의 관점에서

박동훈 (연변대학)

국문요약

2009년 원자바오 총리 방북을 계기로 중국 동북3성과 북한간의 국경경제협력에 한층 더 심화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핵문제는 갈수록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중 경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인도, 기업위주'의 경협방식도 기업의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무역, 투자가 과도하게 지하 자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사회의 시장인식 부족으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투자 원동력이 높지 못하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의 시각에서 볼 때, 한·중 양국은 각자 이익에 기반을 둔 선순환적 공조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북중경협, 동북3성, 한중협력

I. 서론

최근 들어 한국이 중국 동북3성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동북3성이 중국 4대 성장축으로 부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 시장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동북3성은 자연스럽게 관심 지역이 된다. 둘째, 2009년 이래 동북진흥책과 북·중 경협이 연계되어 협력 양상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면서 북·중 간 '경제밀착'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후자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한국은 한반도 특유의 정치구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일단 한국은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필요하지만, 북·중 경협의 지속적 증대가 이러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중 경협은 북한 시장세력 확대 및 개방적 사회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 시각 또한 함께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은 상반되는 인식 속에서 북·중 경협의 주요 현상인 동북3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엇보다 동북3성과 한반도의 경협문제를 중국-북한-남한이라는 3자 간의 상호 연계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북·중 경협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현재 안고 있는 과제들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중 협력 강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북·중 국경 협력의 국제정치경제

중국 동북3성은 북한과 1,318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그동안 북·중 교류의 주요 창구로 작용해 왔다. 2000년대 이후, 특히 2009년 북한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동북3성과 북한 간의 경협이 보다 활성화 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9년 중국이 북·중 국경지역 개발을 공세적으로 펼치게 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 첫째, 중국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 경제 부문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2008년 11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정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2009년 ‘창지투 계획’·‘랴오닝 경제벨트 계획’ 등¹⁾ 국가전략 수준의 지역 개발 계획이 십여 건 발표된다. 둘째, 동북지역 국경개발 사업은 국가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장기간 추진되었던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UNDP 주도로 추진된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젝트(TRADF)’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고 2003년 동북노공업기지 진흥계획과 함께 2005년 ‘대두만강 지역 협력(GTI)’이 재차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시각은 여전히 관망적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선 일국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강행하여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갖게 된 것이다.²⁾ 셋째, 북한의 지리적 전략 가치 때문이다. 정치면에서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한반도 정세 불안정이었

1)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창지투 계획’, ‘랴오닝 경제벨트 계획’을 통칭하여 동북 국경지역개발이라 부르기로 한다.

2)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 단과대학(經濟管理學院) 리종림(李鍾林) 교수 인터뷰, 2012년 7월.

고, 또한 경제 측면에서 보아도 지역 개발의 경우 북한이라는 문호를 확보하여 지역 개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³⁾ 물론 안보 측면에서 한반도는 줄곧 외세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는 전통 인식이 작용했다는 점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환언하면, 중국의 동북 국경지역 개발은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 국면을 조성해야만 국제협력도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중국의 국경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는가. 첫째, 이는 경제 개선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라는 점과 연관된다.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토대로 정치 강국, 핵무기를 기반으로 군사 강국임을 자처할 수 있었지만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강국 건설 과업은 오히려 요원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후계체제를 구축할 필요성 때문이다. 2008년 8월 와병 이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인지한 김정일은 2009년 1월 김정은 후계자 지명을 하달하고, 점차 후계체제 구축에 들어섰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인격적 지도력을 가지지 못한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정일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내·외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난과 2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2009년 이래 미국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변함없었고, 남북관계

3) ‘창지투 기획’ 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에 의하면, 애초의 개발 계획은 주로 창춘(長春)과 지린(吉林) 지역에만 집중되었다 한다. 그러나 두만강 지역 대외통로 확보를 전제로 한 개방도 제고가 없이는 개발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다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연변-훈춘지역이 포함되면서 ‘창지투 기획’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도 MB정부 등장 이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협력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오로지 중국밖에 없었다. 바로 이 시점에 중국이 대규모 국경지역 개발을 제시하면서 북한은 북·중 국경지역 개발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북·중 국경 협력은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역 협력 국면을 이끌어 냄으로써 동북지역 발전과 동북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북한의 경우 핵실험 이후 경제 강국 건설, 후계체제 구축 등 내부적으로 대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찌 보면, 북한의 국경개발 참여는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사업이 그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처한 국제적 상황 및 내부적 인식 변화가 궁극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Ⅲ. 동북3성과 북한 간 국경 협력의 전개

2010년부터 정식 개시된 북·중 국경 협력은 애초부터 상당한 협조관계를 이루며 진행되어왔다. 중국 정부는 국경개발 계획을 2009년 7월과 8월에 이미 인준하였으나, 원자바오 총리 방북 이후인 11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대대적인 내부적 동원과 대외홍보를 전개했으며, 이 시점(12월)에 김정일은 18년 만에 나선시를 방문하고 이듬해인 2010년 1월부터 일련의 대외개방 조치를 실행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북한은 북·중 국경 개발에 어떠한 참여형태를 보여 왔는가. 여기서는 주로 국경 협력을 위한 북한의 여러 정책 조치와 구체적 영역에 나타난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대외개방 정책의 변화

북한은 2010년 이후로 대외개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실시해왔다. 북한은 2010년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한 이후 2010년 1월 15일에는 20년 만에 기반시설·기초공업·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 1월 27일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 데에 이어 7월 8일에는 외국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합영투자 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2010년 8월에 이뤄진 김정일의 제2차 방중을 계기로 10월에는 나진·신의주 공동개발에 관한 북·중 협정이 체결되었다. 2011년 5월 하순 파격적 대중 행보였던 김정일의 제3차 방중 이후, 6월 8일과 9일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착공식과 나선 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착공식이 진행되었다.⁴⁾ 이를 배경으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은 수정된 지 2년도 채 안 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다시 거의 신규 수준으로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등 10여 개의 외국인투자관계법들을 신규 공포 또는 수정했다. 이들 법규들은 투자기업 특혜조치, 국제법 기준 수용 등 대부분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친화적’ 조치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⁵⁾

4) 이 착공식을 통해 황금평·위화도 총 16km²의 부지에 양국은 정보산업·관광문화산업·현대농업·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와 상업센터를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나선 무역지대의 경우 주로 원정리-나선시 도로보수 공사, 나진항을 이용한 중국 내 화물 운송, 나선 시범농업지대, 연간 생산 100만 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 건설과 나선 지역 자가용 운전 관광 항목 등이 약속되었다.

5) 2011년 11월 29일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기업법 등이 수정 보충되었으며, 12월 김정일 사후에도 불구하고 12월 21일에는 외국인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파산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법령들이 수정 공포되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 평가는 배종렬, “최근 개정된 북방특구

2010년 이후 북한 경제개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하 ‘10년 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해외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경영관리 기법 및 해외자본을 받아들여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로 ‘나선-청진-김책’의 동북축과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축을 중심으로, ㉠ 자원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산업 분야), ㉡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분야, ㉢ 금융 등 분야에 대한 건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물론 기술과 자본이 극히 궁핍한 상황이므로, 북한은 주요 대상들을 국가 예산과는 상관없이 10년간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외부에서 유치해 개발한다고 하였다.⁶⁾ 개발 사업은 애초 국방위원회 산하의 ‘조선대풍 국제투자그룹’과 내각 산하 ‘합영투자 위원회(이하 ‘합영투위’)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⁷⁾ 그동안 자본 유치 실적이 미진한 탓에 김정일 사망 이후 대외경제 관련 조직체계가 개편된 결과, 대풍그룹은 합영투위 산하의 국으로 통합되었다. 그 대신 2012년 연초에는 합영투위 산하 해외 유일 투자 유치 전담부서인 ‘조선투자사무소’가 중국 베이징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제의 개혁·개방성: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2년 봄호 (2012), pp.49~77; 유현정,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정비 평가,” 『세종정책연구』, 2012-18(2012) 참조.

- 6) 박희진, “김정일 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북한경제전망: 거점개발과 반개혁의 이중주,” 『KDI경제리뷰』, 2012년 5월호(2012).
- 7) 조선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리수영)은 내각 산하기관, 조선대풍그룹(총재 박철수)는 국방위 산하 기관으로 알려짐. 합영투위는 통상적인 외자유치를, 대풍그룹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목적성 사업을 위한 외자유치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짐. 김치관, “북, 제한조치 대폭 완화된 투자법을 올해 공포,” 『민족21』, 제120호(2011).

2. 북중 국경 협력 실태⁸⁾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된 일련의 경제조치 아래 현재 북한의 국경 협력 참여는 어떠한 상황을 보여 왔는가. 여기서는 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유치, 인적교류 영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간접자본 건설

중국 정부는 ‘창지투 계획’에서 일찍 동북 변경지역 경제개발구 건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 및 러시아 원동지역 항만을 경유하는 대외통로 확보를 2012년까지 일차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 항만을 경유하는 대외통로 확보는 중국 동북지역 개발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정부는 창지투 선도구 계획 100대 중점추진 사업 중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으로 통하는 도로, 철도 및 통상구 다리 등 교통 기반시설 건설에 총 160.5억 위안(약 25억 달러)을 투자하여 국내 구간은 2015년까지, 북한 내 구간은 2020년까지 완공할 것을 계획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중을 연결하는 중요 세관인 권하(圈河, 취안허)-원정리 교각 건설이 이미 완공되었고, 원정리-라선 지역을 잇는 2급도로도 2012년 현재 이미 개통되었다.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는 2010년 착공을 시작하여 18억 위안(약 2.8억 달러)이 투자되어 2014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도문(圖們, 투먼)-청진 철도(171km), 도문-나진 철도(159km)에 총 32.78억 위안을 투자하

⁸⁾ 이 부분의 내용은 박동훈, “김정은 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포스트 마오 시기(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2013) pp.197~200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는 등 10여 개 대외통로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다.⁹⁾

항만 개발의 경우, 2012년 9월 1일 연변 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은 북한 항만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진항 해운항만 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연간 하역능력 700만 톤인 청진항의 3, 4호 부두를 30년간 공동 관리 및 이용하기로 합의했다.¹⁰⁾ 다롄 창리그룹(大連創立集團)은 2008년 나선항 제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확보한 데에 이어, 2009년부터 석탄 부두 개조 건설을 진행했다. 2010년 중국 해관총서의 비준 아래 “국내 화물 국제 운송(內貿貨物跨境運輸)” 무역 형식의 해상운송 통로를 확보하고, 2011년부터 훈춘광업집단 석탄 50만 톤을 1호 부두를 통해 중국 상해 등 지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0.4만 톤이 운송된 이후 석탄 가격 변동, 특히 권하-원정리 도로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특구 건설의 측면에서 보면, 2012년 8월 장성택 방중을 계기로 라선경제무역관리위원회와 황금평·위화도 경제구관리위원회가 각각 설립되면서 양 지역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상기 공동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¹⁾ 예컨대, 2011년

9) 중국 연변대 림금숙(林今淑) 교수 인터뷰, 2012.7.3.

10) 청진항은 동항과 서항으로 구분된다. 동항 1, 2호 부두는 아직 대외에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하이화 그룹이 임대한 부두는 조건이 다소 열악한 서항의 3, 4호 부두이다. 하이화 그룹은 현재 6천만 위안을 들여 3, 4호 부두 개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2015년까지 수만 톤에 불과한 청진항 물동량을 100만 톤으로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1) 예컨대 중국 포털사이트 싸우후 닷컴(sohu.com)은 2월 14일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빌려 “중국 지도부는 이번 북핵 실험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대북 단독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나선, 신의주 황금평 공동개발에 관한 재토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韓媒：中國取消朝鮮羅津特區會議或爲制裁朝鮮,” 『搜狐』, 2013년 2월 14일; <<http://news.sohu.com/20130214/n366067796.shtml>> 참조.

나선특구에 100만 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던 야타이그룹(亞泰集團)은 원래 2012년 8월 14일 북한 라선시인민위원회와 투자합작 MOU를 정식 체결하고, 합작기한을 50년으로 정하여 2013년부터 생산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9월 현재까지 이 사업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¹²⁾

2) 투자유치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서 경제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공장가동률 저하(30% 이하)와 원부자재 및 전력 등 생산요소들의 만성적 결핍으로 경제회생의 내적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비록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마련했지만 핵심힘으로 인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경제회생의 유일한 대안으로밖에 될 수 없는 상태였다. 앞서서도 논의되었듯이 북한은 2012년 이후 대중 투자유치를 높이기 위해 대풍그룹을 합영투위에 통폐합시키고 해외 유일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조선투자사무소’를 중국 베이징에 설립함으로써 해외기업 대북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³⁾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실제로 북한이 유치하고자 하는 투자항목들을

12) 야타이그룹 소개에 따르면, 2013년 9월 8일, 라선시 인민위원장 조정호 일행이 야타이그룹을 방문하여, “양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야타이그룹 시멘트 공장 건설항목 추진을 가속화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한다.

13) ‘조선투자사무소’는 조선합영투위의 대외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 신용을 담보로 투자 항목의 합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 시장, 투자 항목, 투자 유치 관련 정책·법규에 대한 설명과 시장 고찰 등 대북 투자 제반 절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자 한다. 朝鮮投資事務所; <<http://www.cestcenter.com/firm.aspx>> (검색일: 2013년 9월 30일).

파악하기 위해 중국 단둥 화상 해외투자 유한공사(中國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에¹⁴⁾ 공개된 유치계획 항목 158건에 대해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실제 계획하고 있는 유치항목들은 광산·물류·가공/제조·어로양식·유통·금융·관광·기반시설·가공구 등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항목 수로 볼 때 경공업·광산업·농수산업·서비스업·화학공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표 1> 북한의 투자유치 항목 추이 (2010~2012.7)

분류	농수산업	광산업	서비스업	경공업	화학업	합계
항목 수	18	49	14	68	9	158

출처: 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 (<http://www.cxtzw.com>)

경공업의 경우 품목별로 종이·인쇄, 식품가공, 의류·신발, 가전제품·전기기기, 조명, 플라스틱 제품 생산 등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내수를 전제로 하되 수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햄버거·비누·껌·조미료·생활용세제·태양에너지 온실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생필품 생산은 평양 지역에 투자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광산 개발의 경우, 철·금·동 등 10여 종의 광산 관련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개발대상 지역은 주로 함경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

¹⁴⁾ 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는 대북 경제협력 민간단체와 대북경협 사업단위(事業單位, 국가기관 성격)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기존의 사업 우세를 빌어 북한 투자유치 항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북한 투자관련 자문, 시장조사 연구, 협의 및 계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 <<http://www.cxtzw.com>> (검색일: 2012년 12월 10일).

안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현장탐사를 통한 자원량 평가 및 투자기업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투자규모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 방식은 북한이 노동력과 자원 및 부분 시설을 제공하고 중국 측이 자본과 기술·설비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측이 단순히 광물을 채굴해가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채굴, 가공, 운송 체계까지 구축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은 내수와 대중 수출을 동시에 도모하고 투자금 상환은 보통 보상무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평양 지역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현대화 호텔 건설 방면, 육·해 운수와 물류센터 건설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평양 지역에는 택시·공공버스·LPG 충전소 등의 방면에도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예컨대 중국 측이 100대 정도의 택시·버스 차량 및 부품을 제공하면 북한이 이를 보상무역 또는 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¹⁵⁾ 뿐만 아니라, 북한은 현재까지 도시 교통운영에 관한 합작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중국 기업 측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상징할 수 있는 생필품 및 서비스 분야 투자를 평양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기득권층에 우선적으로 보다 나은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을 향한 북한의 투자유치 희망 분야는 전방위적이다. 그러나 중국을 향한 북한의 이러한 희망사항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政府引導, 企業爲主, 市場運作, 互惠

15) 실제 2013년 현재 중국 화타이그룹(華泰集團)은 북한과 1000대 규모의 승용차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미 100대 공무용 차량 및 300대 택시용 차량이 수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共贏)”이라는 국내 시장 운영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면서, 무엇보다 시장 기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시각에서는 북한의 정책·정치적 위험부담을 항상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¹⁶⁾ 중국은 시장 기제에 기반을 둔 기업 위주의 방식으로 북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예컨대, 김정일 시기 나선항 4, 5, 6호 부두 50년 사용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중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설이 회자되었을 때 중국은 직접적 개발 원조보다는 기업을 내세워 30억 달러 규모의 나선특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다.¹⁷⁾ 2012년 8월 장성택 행정부장 방중 시에도 북한이 중국에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요구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나,¹⁸⁾ 중국은 결국 9월 22일 민간기구인 중국해외투자연합회가 대표로 북한 ‘북경투자사무소’와 협의를 체결하고 30억 위안 규모의 ‘대북투자전문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차원의 대북투자는 항상 ‘가시 돋친 장미’로 비유된다. 기업 위주의 방식은 수익성 문제가 동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개척지

16) 예컨대 북한 김일성종합대 최영옥 교수에 따르면 “(나선경제무역)지대 내의 하부구조정비와 관련한 투자수요만 보더라도 초보적으로 수십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그의 개별적 계획대상들의 대부분은 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실태를 보면 연평균 외국인 투자액은 몇 천만 달러정도이며 그것마저도 계약단계에 있고 실제 실현된 것은 연평균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문별 투자총액의 68.5%가 서비스부문에 27.2%가 생산부문에, 4.3%가 하부구조부문에 투자되었다.”고 한다. 최영옥,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현 실태와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 두만강포럼 2013 발표 논문 (2013년 10월 21일).

17) “張成澤訪華受關注 傳要向中國借10億美元,” 『大公報』
(http://www.takungpao.com/news/content/2012-08/16/content_943432.htm) (검색일: 2012년 9월 10일).

18) “10억弗 규모 차관 장성택 中에요청,” 『조선일보』, 2012년 8월 15일.

북한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는 있어도, 미숙한 제도적 기반과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정책적·정치적 위험부담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2012년 장성택 북한 행정부장의 방중에 즈음하여 중국 언론에 공개된 시양그룹(西洋集團) 사건이 그 단적인 예였다.¹⁹⁾

물론 북한도 투자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2012년 8월 시양그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명의로 9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관련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으며, 9월 9일에는 홍수로 갇혀있는 중국 투자자들을 김정일이 직접 비행기를 파견하여 구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전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2년 9월 22일 중국해외투자연합회와 북경투자사무소 간의 ‘대북투자 전문 펀드’ 관련 협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중국해외투자연합회는 중국 상무부·외교부 및 학자들과 공동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합영투위가 주최한 북한 투자유치 설명회(광산·도시기반 건설 사업·CBD상업구 BOT건설²⁰⁾·5성급 호텔·온천 레저 단지 등)에 참석하고, 북한 시장동향 고찰, 정부·기업·금융·전

¹⁹⁾ 중국 시양그룹이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500대 기업 중 하나인 시양그룹(민간기업)은 양국 정부 비준 아래 2007년 북한 령봉연합회사와 계약을 맺고 ‘양봉합영회사를 설립하고 황해남도 웅진군 웅진철광에 2.4억 위안(약 3천만 유로)을 투자하여 2011년 4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연간 생산량 50만 톤). 그러나 2011년 9월 북한이 토지임대세 1€/㎡, 공업용수 0.141€/㎡ 등 총 16가지 요구를 부가하면서 쌍방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중국 기업은 2012년 3월 강제추방 당했다. 2012년 4월 북한은 시양그룹에 이전금 명목으로 3,12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8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遼寧西洋集團投資 2.4 億元鐵礦項目遭朝鮮毀約,” 『中國選礦技述網』, 2012년 8월 16일.

²⁰⁾ BOT(build—operate—transfer), 즉 건설-경영-이전 방식을 가리킨다. 정부가 계약을 통해 사영기업(해외기업 포함) 일정 기한 내 특허권을 부여, 특정 공공기반시설 용자건설과 경영을 허가하고, 기업이 경영이익을 통해 투자회수 및 이윤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특허권 만기 이후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정부에 이전한다.

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12년 제1차 ‘중·조 국제경제 합작투자 고위층 포럼’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1월 24일 출발 예정이었던 이번 방북 계획은 북한 위성 발사 문제로 세 차례 연기되다가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소극적으로 타진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현재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 및 기존 시설을 토대로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여 생산성 제고 및 인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투자 부문에서 보면 북한은 ‘경제 희생’이라는 명목 아래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제도 사회주의식으로 ‘속도전’을 진행하려는 북한 엘리트들의 관습적 사고방식이 반영됐을 수 있으며, 또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김정은 체제의 전시 행정이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 환경만 조성하며, 기업이 주요 행위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경협은 무엇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상무부·외교부, 해관총국 등 기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해주면, 주로 기업들이 북한 사회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는 투자의 위험부담을 항상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회수가 빠른 광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설령 다른 항목들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대가를 광물자원으로 지불해주길 희망하고 있다.²¹⁾ 따라서 북한은 실제로 보다 다양한 영역들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 여건이 충분치 않고, 또한 남북 간 교역도 중단된 상황에서서는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개발과 수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

21) 예컨대 중국 뤼디그룹(綠地集團)은 현재 라선특구 7km²에 기반시설 투자를 계획 중이나, 그 투자 대가를 석탄 등 광물자원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

“綠地集團, 招商局等國企組團投資中朝經濟區,” 『搜狐』, 2012년 8월 17일.

(<http://business.sohu.com/20120817/n350885423.shtml>).

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 북한 대중 수출의 대표적 물품은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 제품으로 수출액은 16.47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36.4% 증가함으로써 전체 수출액의 67%를 차지했다.²²⁾ 북한 대중 수출 항목 중 석탄 등 고형연료 수출은 2009년의 2.09억 달러에서 2011년 현재 11.41억 달러로 5.5배 증가했고, 철광석은 0.48억 달러에서 3.23억 달러로 6.7배 증가했다.²³⁾

3) 인적교류

북·중 국경협력 시작 이후의 또 다른 변화는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그 어느 시기에 비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북·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층 왕래, 전략적 소통 및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간 경제협력 강화 등을 합의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졌다. 일련의 고위층 상호방문이 연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국경지역 지방관리들 간의 교류활동도 함께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동북3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2010년 5월 이후로 고위층 인사들의 대중 고찰이 증가되었으며 2011년 이후로는 지방정부 관리들의 실무적 방중이 증가했다. 양국 관료들 간의 의례적인 방문보다는 현실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과 고찰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나진 특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구 기초 관리자들이 2011년부터 중국 대학에서 관리 경험을 학습한 사례다. 중국 상무부 주관으로 약 200명 규모의 나진 특구 및 황금평-위화도 경제구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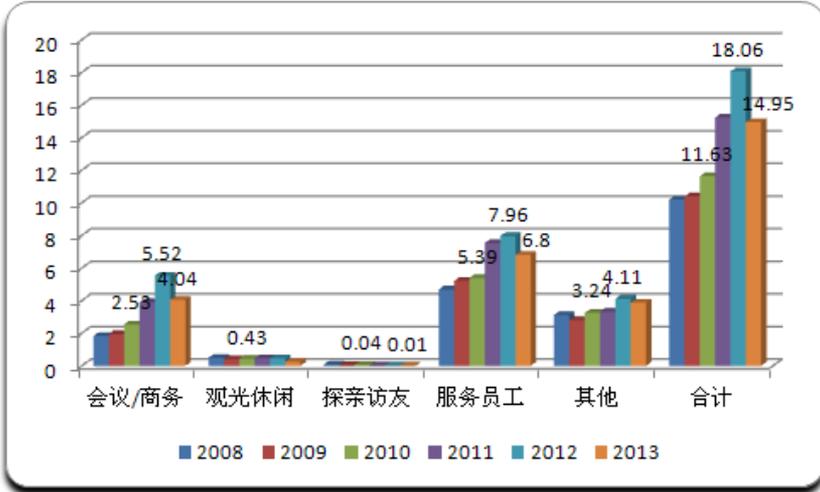
²²⁾ 이상국, “북중 경제교류·협력 동향과 시사점,” 앞의 자료, p.5.

²³⁾ 박윤환, 『2011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비교』,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 p.16.

원들이 중국 지린대학(吉林大學)과 다롄 행정 단과대학(大連行政學院)에서 각각 두 달 간의 학습과 현지고찰을 진행했다. 대학별로 매회 20명씩 5회에 나누어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중국 측에서는 학자, 기업인, 정부관원 등이 강사로 나서서 주로 노동력 시장, 노동력 공급, 도시와 농촌 개혁, 세제 개혁, 개발구 계획과 관리 등 중국의 경험들을 전수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 인적교류는 관리 계층의 방중에서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국가관광국(中國國家旅遊局)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 인원들의 중국 방문자 수는 201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2009년 현재 북한 주민의 중국 방문자 수는 10.39만 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8.12만 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3년 사이에 80%나 증가했다. 2013년 제3분기까지도 14.95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12.4% 증가했다. 특히 여행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 회의·사업(會議/商務) 및 취업(服務員工)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 수가 가장 선명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참조). 회의·사업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2009년의 1.94만 명에서 2012년 현재 5.5만 명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로 늘어났고, 취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 수는 2009년의 5.2만 명에서 2012년 8만 명으로 증가했다. 투자유치·무역 및 취직 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적왕래가 201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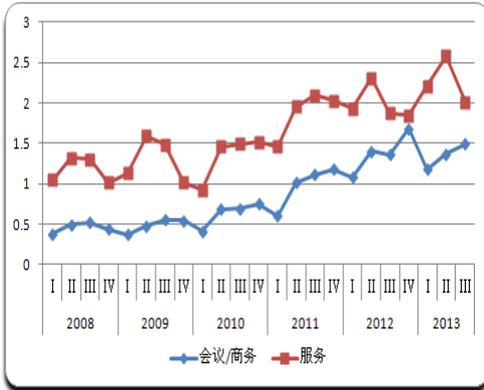
〈그림 1〉 북한 주민 중국 입국 통계 (2008~20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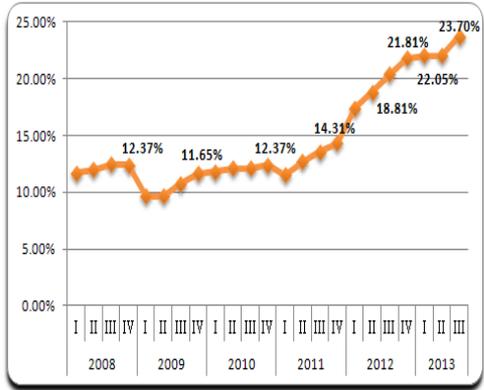
자료출처: 中國國家旅游局 각 연도 통계

여행·친척 방문·기타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인원수가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비즈니스 및 취직·주재를 목적으로 한 입국자들의 분기별 중국 입국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 3〉과 같다. 상기 두 유형의 분기별 입국자 수는 2011년부터 선명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회의·비즈니스(상용비자)를 목적으로 한 분기별 입국자 수는 2008, 2009년 줄곧 5천명 수준에 그쳤으나 2010년 2분기, 즉 김정일 방중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2011년 2분기에 들어서면 분기별 입국자 수는 이미 1만 명 선을 넘었으며, 2012년 4분기에는 이미 1.5만 명을 넘어섰다.

<그림 2> 북한주민 중국 분기별 입국자 수 변화 추이



<그림 3> 입국자 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출처: 中國國家旅游局 각 연도 통계

취업 목적의 입국자 상황을 보면 그 증가세는 보다 선명하다. 2010년 까지 분기별 취업 목적의 입국자 수는 대체로 1만 명~1.5만 명 규모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방중 이후인 2011년부터 분기별 취업 목적의 입국자 수는 약 2만 명 규모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5천 명 정도 늘어났고 이러한 규모는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진출이 대부분 서비스업 및 봉제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입국자가 전체 입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10~12%선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1년 2분기부터 점차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13년 3분기 현재 중국 입국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증가했다.

IV. 북·중 경협 의 과제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2009년 하반기부터 북·중 국경협력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한 협조 관계를 이루며 진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 국내 균형발전 및 지정학적 고려 속에서 북·중 국경협력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민생경제 발전을 통한 체제 안정에 중심을 둔 북한도 이에 적극 동참해 나섰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북·중 국경지역은 상당한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무역 위주부터 시작하여 공동지대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동 개발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관련 법규들도 상당부분 제정 및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 무엇보다 북핵문제 및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정은 여전히 북중경협 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실험 등 한반도 의 지속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정경분리 의 원칙을 고수하고 북중경협 을 강행 했지만, 국제사회 수준에서는 행동 의 정당성 측면에서 수세적 위치에 몰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저지에도 실패했다. 결국 중국은 북 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이례적인 강경자세로 나선 결과 이는 북·중 국경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은 현재 대(對)한반도 정책 순위를 조정하고 비핵화 문제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기에 향후 북핵 변수는 갈수록 북중경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협 방식에서도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북한은 현재 경제 회생을 통한 정당성 확보의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다양한 산업영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운영’의

원칙하에 지역 공동 개발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투자 여건이 충분치 않은 북한 상황을 고려하는 중국 기업들은 무엇보다 투자회수가 빠르고 수익률이 높은 자원 분야에 진출하거나, 또는 다른 분야에 진출했다라도 투자의 대가를 지하자원으로 받으려는 경향이 짙다. 무역의 경우도 대부분 구상무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에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제품이 상당한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하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대중 경험은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추세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불만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북중 경험에 이롭지 않다. 무엇보다 다자협력 구도를 창출해냄으로써 북한의 현 대외 경제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다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열악한 기반시설 및 생산구조도 문제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인식 결여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원초적인 인간의 합리성(또는 이기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서의 확립 및 그에 대한 이행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다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들에 대한 신용도가 상당히 낮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들에게 진정한 시장 개념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V.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중 협력의 관점에서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대북경협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북한은 핵개발 국가이며 비개방적인 폐쇄국가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사업, 사회간접

자본, 제도 환경 등 이익 창출에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가진 국가이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북한 제도개혁과 대외개방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대북경협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일들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1. 북핵 문제 해법: 한·미·중 공조의 선순환 구도 찾아야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한·미·중 3국간의 대북정책 공조체제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관련국들 간의 대북정책은 항상 미스매칭(錯配, mismatching) 국면을 초래하면서 북한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보다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환언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역내 관련국들의 이해차이가 발생하면서 ‘채찍’과 ‘당근’이 엇갈려(동시적이 아닌) 사용되다보니 유화와 강경의 효과는 모두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미·중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국이 각각 우선시하는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전략적 이익들이 상호 만족될 수 있는 선순환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기본 전제로 대(對)한반도 정책을 전개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의 안보 압력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둘째, 대북 협상의 조건을 보다 낮은 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중국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북 설득력도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정책적 능동성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설득에 임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해줘야 한다. 셋째, 한국의 ‘중견자’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현재 명실공히 ‘중견국’으로 부상해 있지만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는 자신의 신분에 부합되는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국제체제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중 양 대국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갈등적 협력’ 상태에 놓여 있는 미·중 양국도 ‘제3자 변수’의 중요성을 갈수록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중 vs 한·미”라는 틀을 깨고, 한국이 미·중 쌍방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대국들에 각인시켜줘야 한다.

2. 대북경협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

앞에서 논의되다시피 2009년부터 급물살을 탄 북중경협은 2012년에 즈음하여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가시적 경제성과가 시급했지만 중국은 민영기업 위주의 대북 투자와 시장운영 기제 도입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일한 협력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수세적 위치에 놓여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경제 분야에서도 다자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관련국 모두에 이롭다. 남북경협이 추진될 경우 북한 시장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나,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대북경협에서 한·중 간 경쟁의 난맥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력 상대가 늘어나면 북한이 한·중 양자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챙기려는 의도가 분명해질 것이다. 결국 북한 내부 상황은 다소 개선될 수 있더라도,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요구하는바, 북한을 국제규범으로 편입시키려는 목표

에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대북경협은 단지 국면 전환을 위한 협력보다 북한의 변화를 목적에 둔 협력이라는 점에서 목적지향성을 띤다. 이러한 경우 경협의 주도권 문제가 자못 중요해진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대북경협에서 전략적 협조관계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북경협의 목표, 원칙, 방법, 절차, 내용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북한 사회 변화를 위한 한국 사회 변화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볼 때 사회적 변화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이었으며, 전방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점진적이었다는 것은 장기간 폐쇄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단일한 이념적 교육을 받은 중국 사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줄곧 사회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리, 즉 계획과 시장, 평등과 성장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상(華商)을 선두로 한 해외 기업의 진입, 유학생 파견, 서구 사상의 유입 등 외부와의 전방위적 교류가 없었더라면 중국 사회는 자체적 진화만으로는 오늘에까지 이르기 힘들었을 것이다. 환언하면 교류가 없으면 변화도 힘들다는 의미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60년간의 개인숭배와 독재이념을 교육 받아온 북한 주민들로서는 왜곡된 신념과 한계적 합리성 외에 그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한국 으로서는 조만간 개시될 정부·민간적 차원의 대북 경협, 인도적 지원, 문화·인문적 교류 역시 험난한 시련과 수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교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능력과 우호적 국내외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국경지역에서 있었던 수많은 갈등 사안들을 극복하면서도 중국 대륙-대만 경협, 북중경협을 오늘까지 이끌어온 중국의 넓은 안목과 깊은 심성을 한국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

■ 접수: 2013년 11월 20일 / 심사 : 2013년 12월 2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6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국문논문

- 김치관. “북, 제한조치 대폭 완화된 투자법을 올해 공표.” 『민족21』, 제120호(2011).
- 박동훈. “김정은 시대 북한 체제개혁의 과제: 포스트 마오 시기(1976-1978)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2013).
- 박윤환. 『2011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비교』.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
- 박희진. “김정일 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북한경제전망: 거점개방과 반개혁의 이중주.” 『KDI경제리뷰』, 2012년 5월호(2012).
- 배종렬. “최근 개정된 북방특구법제의 개혁·개방성: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2년 봄호(2012).
- 유현정.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정비 평가.” 『세종정책연구』, 2012-18(2012).
- 최영옥.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현 실태와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 두만강포럼2013발표논문(2013년 10월 21일).

인터넷 자료

- “韓媒：中國取消朝鮮羅津特區會議或爲制裁朝鮮.”
 〈<http://news.sohu.com/20130214/n366067796.shtml>〉.
- “綠地集團, 招商局等國企組團投資中朝經濟區.”
 〈<http://business.sohu.com/20120817/n350885423.shtml>〉.
- “遼寧西洋集團投資 2.4 億元鐵礦項目遭朝鮮毀約.” 『中國選礦技術網』. (2012.8.16).
- “張成澤訪華受關注 傳要向中國借10億美元.” 『大公報』;
 〈http://www.takungpao.com/news/content/2012-08/16/content_943432.htm〉.
- 『朝鮮投資事務所』; 〈<http://www.cestcenter.com/firm.aspx>〉.
- 『丹東華商海外投資有限公司』; 〈<http://www.cxtzw.com>〉.

신문

- “10억弗 규모 차관 장성택 중에 요청.” 『조선일보』, 2012년 8월 15일.

Challenges and Vision of Economic Coop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Focusing on Enhancement of the Korean-Chinese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Piao, Dong-Xun (Yanbian University)

Abstract

After the visit of Prime Minister Wen Jiabao in North Korea in 2009,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has been developing. However, at presen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likely to reduce the strategic space of China and consequently this has an effect on North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economic cooperation system of “government-lead” and “enterprise-oriented” puts emphasis on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rade and investment excessively rely on natural resources. In particular, with the lack of awareness of North Korea’s market, it impedes a driving force of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In terms of enhancement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Korea and China are necessary to forge a cyclical cooperative relationship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ir own.

Key words: North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South Korean-Chinese cooperation

박동훈(朴東勳, Piao, Dong-Xun)
한국 전남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국 연변(延邊)대학 국제정치학과(國際政治系) 아시아연구센터(亞洲研究中心)의 부교수이다. “2010 : 朝鮮半島局勢變化與美國的亞太戰略,” “중국에서의 한국정치 연구동향과 과제,” “한중간의 실재적 국경과 내재적 국경의 상호작용”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거대분단’의 극복과 이상적 동아시아의 가능성:

‘한중 인문유대 강화’가 지역의 미래에 주는 의미*

장즈창 (중국사회과학원)

국문요약

‘한·중 인문유대의 강화’라는 제안은 한·중 간 고유의 인문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오해를 불식하고 정서적 유대를 증진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한·중 인문유대의 강화’라는 제안이 제출된 것이야말로 목전의 한·중 사이에 존재하는, 나날이 엄중해지는 정서적 소원과 상호 약화된 신뢰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사이의 정서적 소원과 상호 신뢰의 약화라는 현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느 정도에서 그것은 동아시아 내부에 있는 ‘거대 분단’의 증후를 반영한다. 이 글은 동아시아 내부에 있는 ‘거대분단’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거대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론적 틀을 수립하며,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을 조성하는 이념적 기초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중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 미래의 이상적 질서를 위해 이론적·역사적 참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중 인문유대, 동아시아, 거대분단, 중도주의

* 중국어 원제는 “巨型分斷的超克與理想東亞的可能性: ‘加強中韓人文紐帶’對於區域未來的意義”이고, 송가배(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가 번역함.

I. 머리말 - ‘한·중 인문유대 강화’ 배후의 난국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과 믿음의 여정(心信之旅)’이라는 표어 아래 중국을 국민 방문하였다. 한 외신은 이 같은 여정을 “진실한 소통과 상호신뢰 증진의 여정”으로 해석하며, 이번 방중의 근본적 의도가 “중국 지도자와의 개인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시에 중국인의 마음을 얻어 향후 진솔한 대화를 위한 기초를 쌓고자 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같은 상호신뢰의 증진은 새로운 지역 질서 건설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뒷받침할 것이며, 미래 동북아의 지정학적 형세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

이번 방중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한중 양국이 인문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조 기구인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와 동시에 역사연구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조를 강화하여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한·중 인문유대 강화’라는 새로운 제안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정서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더욱 튼튼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 한다.

‘한·중 인문유대 강화’의 제안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한·중 양국은 역사와 문화가 서로 통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양국 간에 ‘인문유대’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중 인문유대 강화’라는 제안을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현재 양국 간에 오해 내지 불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제안의 목적은 양국 간의 고유한 인

1) “朴槿惠訪華加強中韓互信”, 『聯合早報』(싱가포르), 2013년 7월 1일.

문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고 감정을 돈독히 하며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한·중 인문유대 강화’의 제안은 바로 현재 양국 간 감정이 갈수록 소원해지고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이다. 양국 간의 무역액은 1992년 수교 당시와 비교하여 40 배 증가하였고,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활발한 경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오히려 정서적 거리감과 상호간의 오해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양국 간에 잠재되어 있는 인문유대를 새롭게 강조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중 인문유대 강화’라는 제안과 관련하여 양국의 학자들이 깊이 사고하고 엄숙하게 대면해야 할 문제이다.

엄밀히 말해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중국의 대외 관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로서, 다만 중국의 주변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자문화권 혹은 유교 문화권으로 지칭되는 동아시아 지역은 고도의 유사성을 지닌 지역으로, 프랑스의 한학자 레옹 반데르미르슈(Leon Vandermeersch)에 따르면 전근대 시기 고도의 응집력[內聚力을 지닌 지역이다.²⁾ 근대 시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전지구적 제국주의의 억압을 경험하였고, 민족 해방 및 근대화 따라잡기(catching-up)와 같은 유사한 역사적 운명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의 출현은, 문화적 요소와 역사적 운명의 응집성으로 인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야 할 동아시아 지역에

2) (웁긴이 주) Léon Vandermeersch는 그의 저서 『Le nouveau Monde sinisé』(1986)에서 한자문화권은 중국에서 전파된 한자라는 공동의 문화를 기초로 매우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소통과 이해, 신뢰가 왜 결여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역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국제 관계의 시각에서 한중 관계만 놓고 봤을 때, 한국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한국인들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기대 속의 우려’라는 모순적인 심리를 가지는 것은 바로 북한 문제에 기인한다. 수교 20여년 이래 양국의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은 ‘중국 위협론’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중국 위협론이 구체적 사건에서 촉발된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구체적인 사건에 의해 가중되거나 혹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왜 반복적으로 유사한 우려를 낳는가이다. 내가 보기에 역내의 이 같은 ‘기대 속 우려’의 복잡한 심리상태는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가 아닐 뿐더러,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태도를 유도하는 일종의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다.

인문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 및 동아시아 지역의 인문전통과 정신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해의 깊이는 우리가 당대의 현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양국의 관계와 지역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현실을 단순한 인과 관계에 기초해 인식하는 태도에서 탈피하여, 인문학이 응당 대면해야 하는 정서와 정신, 그리고 역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타당한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원대한 상상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한중 양국의 인문학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라 할 수 있다.

II.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 백낙청의 관점에 대한 해석

2008년, 백낙청은 대만에서 했던 '동아시아 화해의 장벽'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동아시아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분단 상황에 대해 논하였다. 분단 상황은 주로 냉전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남한과 북한, 중국 대륙과 대만의 영토 분단을 가리킨다. 백낙청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분단체제'라는 시각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이 강연에서는 나아가 그가 '거대분단(macro-division)'이라는 상황으로 동아시아 내부를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거대분단이란 역사적 연원이 비교적 오래된 대규모의 분단으로, '일본과 그 나머지', 그리고 '중국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거대분단이다.

'일본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탈아입구(脫亞入口)의 국가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탈아(脫亞)는 일본 자신이 위치한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입구(入口)는 선진 지역으로 진입하여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아시아'와 '유럽'은 단순히 지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그치지 않고, 고도의 가치 함축적인 이념 기호가 된다. 이러한 선진과 낙후, 심지어 문명과 야만의 대립 가운데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애초의 소박한 아시아 정서로부터 대륙주의로 탈바꿈하여, 동아시아를 침략 및 식민지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 역사가 1945년 패전으로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다만 일본이 가입하려는 선진 행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것은 일미간의 직접적인 특수 관계를 통해 사실상 계속해서 실현되어 왔다. 일본은 부단히 따라잡기와 학습을 통해 소위 선진적 문명 세계의 역사적 방향을 대표하여 그 대리인이 되었다. 바로 이 같은 이념이 지속적으로 존

재함으로써 일본과 그 나머지 지역의 분단이 사실상 일종의 ‘체제’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체제는 남북한의 분단 체제와 같이 대립 지역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공생 구조는 아니지만, 일종의 이념 구조로서 고착화된 인식론적 ‘체제’이다. 다시 말해 문명과 야만, 선진과 낙후 간의 대립 구조는 이념적 가치 기준에 의해 일종의 잠재적인 사유 양식으로 고착화되었고, 일원론적 보편주의 아래 흑백논리의 이원 대립적 인식론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이념 영역의 ‘분단체제’는 근대사학 및 사회과학을 경유한 것으로, 진보 사관, 실증주의, 주체철학과 민족주의 등의 사상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형성된 결과이다. 또한 이 체제는 일본사회의 이념적 전제일 뿐만 아니라 후발 국가 내부에 만연한 자의식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은 그저 후발 국가의 자의식 분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이 같은 자의식의 분열은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구미 제국주의 정신적 기득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백낙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그 나머지’ 사이의 거대분단은 중국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와 지리 공간의 거대한 규모에 기인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거의 일반적인 민족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규모, 역사, 내적 다원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할 때 중국은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와 같은 개념의 민족국가가 아니며, 또한 같을 수도 없다. 중국이 자신의 고유한 민족주의 특성 등을 지닌 채 일반적인 민족국가의 행동을 취하거나 취하고자 할 때,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갈지 않음’은 곧 심각한 부조화와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만다.³⁾ 다시 말해 중국과 그 나머지의 분단이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특

3) 白樂晴, “東亞和解的路障,” 白樂晴 等, 『白樂晴: 分斷體制, 民族文學』(臺北: 聯經出版, 2010), p.270.

수한 국가 성격과 거대한 지리적 규모로 인해 나머지 국가와 다름, 비대칭, 불균형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국가를 기본 구성단위로 하며 국가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권 평등의 원칙이 준수되는 근대에서, 중국은 자신의 역사와 공간 규모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상 민족국가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타국과 대등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을 완전히 구속할 수도 없다. 사실 이 같은 시각의 이면에는 전통 중국이 중화제국이고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근대 제국주의와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제국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즉 언제나 제국이 될 잠재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민족국가를 기본적인 정치 단위로 하는 근대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중국은 예외, 그것도 위협한 예외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그 나머지 지역의 거대분단이란, 지리 공간 규모의 비대칭, 전근대적 국가 성격과 근대 민족국가 사이의 부적응, 그리고 역사적인 중심-주변 질서와 근대의 탈중심적 국제질서 사이의 부조화라 할 수 있다.

백낙청이 제시한 동아시아 내부의 두 가지 거대분단을 종합해 본다면, ‘중국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 중 나머지 지역은 주로 일본과 한반도이며, ‘일본과 그 나머지’ 사이의 분단에서 나머지만 주로 중국과 한반도이다. 즉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거대분단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는 그 가운데 미묘한 위치에 처해있다. 남한의 경우, 백낙청의 말처럼 친일파와 친미파가 통치계급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점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나머지 지역에 대해 남한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 다른 한편 북한은 그 근대사에서 드러나듯이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 더 근접해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중국과 그 나머지’의 분단이 중일 간의 분열 관계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 점에서 만약 우리가 ‘일본과 그 나머지’ 분단 뒤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중국과 그 나머지’ 분단에 적용한다면, 그

것은 선진과 낙후의 분단, 즉 낙후한 중국과 선진적 일본 사이의 분단이 될 것이다. 중국 내부의 근대화론자들은 만청(晩晴) 시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러한 시각으로 중일 관계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조차 “낙후한 자는 얻어맞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증명하는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중국과 그 나머지’, 특히 일본과의 분단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바로 이른바 선진에 대한 낙후라는 것의 저항이다. 이러한 저항은 또한 ‘일본과 그 나머지’의 분단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중국과 그 나머지’, 특히 일본 및 한국과의 분단을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차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혁명’의 차원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가치 차원을 구성한다. 만약 ‘혁명’의 차원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과 그 나머지’ 분단의 또 다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관의 분단으로서, 전근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분단까지 포함한다.

사실상 바로 이러한 역사관, 가치관,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불일치로 인해 ‘중국과 그 나머지’간의 분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장벽이 되었던 것이다. 본래 전근대 동아시아를 응집시켰던 문화와 역사적 요소는 오늘날 인문유대로 작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단의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유교는 지역문화의 상징적 공유자원으로 1970~80년대 ‘일본 모델’과 ‘아시아 네 마리 용’의 성공 모델을 설명하는 전통 요소가 되었고, 이른바 ‘유교자본주의’론이 등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에 나타난 ‘유교사회주의’의 사상적 동기 역시 ‘중국 모델’의 성공 경험에 대하여 역사적·문화적 근거를 찾기 위함이었다. 동일한 문화 자원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역사적 결과로 해석되는 이러한 상황은, 동일한 문화 전통이라고 다 분단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며, 심지어 현실 속에서 거대분단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상의 사실은 표면적의 유사성으로 인해 감정이 자동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며, 설사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오직 ‘느낌으로서 통하는[感而遂通]⁴⁾ 감통력(感通力)으로 소통의 길을 열고, 느끼고 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그 가운데 깨달은 지혜를 통해 상대방의 역사적 곤경과 고통에 도달할 때, 비로소 감정이 붓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본래 타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바로 타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도덕적 감성에 있다. 따라서 인문유대 강화의 핵심은 감통력을 기르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서로 간의 인식과 이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유가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그것은 인(仁)으로부터 지(智)에 도달하며, 지(智)로서 인(仁)으로 통하는 경지이다. 즉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론의 변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인지합일(仁智合一)의 감통력을 새롭게 갖추어야 한다.

4) (윤희이 주) 『주역(周易)』 「계사 상전(繫辭 上傳)」의 “(아무런 마음과 작위도 없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감응하여 마침내 (사물의 모든 원리에) 통하게 되었다[寂然不動, 感而遂通]”의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Ⅲ.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중도주의’ 지혜와 이데올로기 비판

여기서 다시 한 번 백낙청의 사상적 작업을 통해 거대분단의 극복을 사고해보자. 백낙청은 ‘지혜가 현대 과학 지식에 대해 갖는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지혜는 과학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과학 지식을 조정하고 견제하는 능력이다.’⁵⁾ 즉 지혜는 과학적 인식을 안내하는 도덕 능력이다. 도덕 능력의 인도가 있어야 비로소 과학적 지식은 인간 소외가 아닌 인류의 생활에 대해 진정한 의미가 있는 통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이데올로기적 관념의 속박을 깨부수는 도구이다. 백낙청이 제기한 ‘변혁적 중도주의’는 바로 이 같은 지혜로서,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도주의’ 인식론은 근대 각종 이데올로기의 미혹을 타파하고 거대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갖고 있어, 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른바 ‘중도(中道)’는 불교의 중관(中觀) 사상에서 ‘희론(戲論, 개념 혹은 이론)’의 집착을 깨기 위해 현실을 정확하게 현시하고 인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중도주의’란 어떠한 이데올로기의 집착도 타파하여 이데올로기의 근원적 성질을 환원하고, 이와 동시에 현실의 요구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는 태도이자 능력이다. 그렇다면 중도주의 인식론이란 바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일원론적인 선언을 상대화하여, 동시에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원화된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한다는 것은 결코 그 진리성을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중도주의 인식론에 따라

5) 한국 학자 류준필의 말.

이데올로기적 관념이 낳은 현실의 은폐를 넘어 현실을 본모습대로 현시하고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현실에 대한 유한한 현시 작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유한성으로 인한 시야의 제한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진리성을 통해 일정한 현실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서 중도주의 인식론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점은, 그것이 현실을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주체는 더욱 고차원적이고 전면적으로 현실을 관조함으로써 가치 창조의 능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로써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집착으로부터도 해방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주체는 더 이상 근대철학의 자아 긍정을 통한 자기동일적 주체가 아니다. 그것은 무(無)와 유(有)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존재로서, 가치 창조를 통해 부단히 창조를 거듭하는 기능적 주체이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 영원히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창조를 통해 본성을 다하고(盡性) 하늘을 안다(知天).

중도주의 인식론을 근거로 우리는 일찍이 동아시아 지역을 주도했던 이념 권력을 상대화할 수 있다. 선진과 낙후, 문명과 야만의 근대화 이념 속에서 선진과 문명은 자아를 단순히 부정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고, 노예가 자신을 개조하여 주인이 되는 과정과 같았다. 동아시아에서 일정한 보편성을 지닌 ‘탈아입구’의 따라잡기 논리는 바로 이처럼 내적 긴장을 결여한 채 자아를 단순히 부정하는 발전 모델이다. 중도주의 인식론의 비판적 의의는, 단순한 자아 부정의 따라잡기 이념을 또다시 단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따라잡기식 발전을 제어할 능력을 지닌 주체를 구해내려 한다는 데 있다. 발전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발전시킴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대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전환이 야기하는 역사적 효과는, 서

구가 선포한 보편주의의 일원론적 세계사 발전 모델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시아 혹은 동양은 더 이상 서양 혹은 유럽의 자기 확인을 위한 종속적 타자가 아니다. 또 하나의 직접적인 효과는 서구를 보편주의의 일원적 주도자에서부터 다시 서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서구를 서구로서 대할 때, 동서양 각자의 문명의 발원지에 서서 다시금 대화와 소통을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미래를 위해 더욱 풍성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전환하면, 지역 내의 각국은 더 이상 보편주의적 가치 질서에 따라 역내 질서를 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균형 잡힌 태도로 서로의 발전 모델을 바라볼 것이며, 상이한 발전 모델은 상이한 주체가 각자의 조건에 따라 확립한 자기 발전의 방식임을 알게 될 것이다.

중도주의 인식론은 ‘저항’을 주제로 한 혁명 이데올로기로 비판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일본의 ‘탈아입구’ 이데올로기와 대조적으로 아시아를 기초로 유럽과 제국에 저항하는 담론과 실천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 개념은 본래 유럽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타자라는 점에서, 아시아를 본위로 한 저항은 이상한 논리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유럽이 타자로 설정한 자신을 받아들 이면서 동시에 그 설정의 특정 내용에 대해 저항을 시도하는 것이다. 유럽의 타자적 상상으로서의 아시아와 비교할 때, 이러한 아시아 관념은 유럽의 억압으로 인한 망국멸종(亡國滅種)의 위기의식 속에서 저항을 연 대하는 연합체로서, 일종의 ‘부정적 연합체(negative unity)’이다.⁶⁾ 즉 공동의 적에 대해 형성된 정치 행동의 연합체라는 점에서, 만약 공동의 적

⁶⁾ Rebecca E. Karl, “Creating Asia: China in the World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no.4(1998), p.1103.

이 사라진다면 정치 행동으로서의 아시아도 그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한국 학자 류준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피억압자에 대한 저항 속에 자신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 즉 타자에 대한 부정 속에 자기 부정이 없다면 이 저항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구속되고 말 것이다. 즉 그것은 노예가 주인의 위치에 오르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치 전환적인 창조의 의미를 결여하고 있다. 진정으로 가치 전환적인 창조로서의 저항은 억압자뿐만 아니라 피억압자 자신도 저항의 대상이 됨으로써, 억압과 피억압의 가치 질서를 철저히 전복시켜 억압을 제거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개조를 모색한다. 이 같은 저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의 자각이 필요한데, 바로 저항 중 일관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의 각성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같은 이중의 부정을 통해 형성된 주체는 그 자체로 가치와 문화의 원리이다. 그것은 타자를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으며, 동시에 자신의 성장을 타자의 성장 조건으로 만드는, '이타위자(以他爲自)'의 주체 형성 원리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의 도덕 원리이기도 하다. 주체는 '이타위자'의 도덕적 상호 작용을 통해 부단히 자아 형성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동시에 타자의 형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넓이와 두께를 부여한다. 그 결과 진정한 제물평등(齊物平等)의 가치 질서가 실현된다.

'이타위자'의 주체 형성 원리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파생물로, 근대 주체철학이 민족의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다. 절대적 확실성을 지닌 자아에서 출발한 근대의 주체철학은, 비록 중간에 부정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에는 부정에 대한 부정의 형식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자아의 확실성을 재확인한다. 그것은 폐쇄적으로 고립된 나선형 구조로서, 완정성에서 출발해 완정성으로 끝나고, 잠재적 완정성과

실현된 완성성 모두를 내포한다. 이러한 주체는 신과 같다. 따라서 민족 주체는 신화이다. 또한 이러한 주체나 민족은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전제이다. 반면 ‘이타위자’의 주체 형성 원리는 근원에 대한 부단한 상호 질의 과정(源流互質⁷⁾) 속에서 점차 형성되고 변화하는 주체 의식이다. 그것은 역사의 결과이지 전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시종일관 역사 속에 관찰되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주체가 역사의 전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타위자’의 주체 형성 원리에 따를 때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역사가 바로 주체 형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민족만이 중요할 뿐, 역사는 그저 민족 신화가 상연되는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를 직시할 때, 우리는 역사의 어떠한 사소한 부분도 지나칠 수 없으며, 고의적으로 회피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소한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이해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사를 직시한다는 것은 전근대사와 근대사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두 시기의 단절 역시 역사의 연속성에서 이해할 때 그 진정한 해석이 가능하다. 과감히 조선의 역사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를 피할 수 없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오백년 이상 지속된 왕조는 조선왕조가 유일무이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 성취이며, 우리가 깊이 연구할 만한 풍부한 조선의 역사와 정치적 지혜가 존재한다. 만약 조선왕조를 이해한다면 14~19세기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실질적 변천에 대해 깊이 이해할

7) (윤진이 주) ‘원류호질(源流互質)’은 『문사통의(文史通義)』의 중요한 사학 비평 방법 중 하나이다. 저자 장학성(章學誠, 1738~1801)은 후세의 학자가 근원을 망각하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고대 사학 등을 연구할 때 근원을 추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다원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 상상에 간혀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 사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근대 중국을 깊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중국 근대사 변천의 동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대 현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역사에 진입하는 깊이를 결정한다. 어떤 의미에서 미래 동아시아의 본질은 바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달려 있다. 역사의 지혜는 동아시아 문명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모든 민족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서, 이민족 간의 이질성은 진정한 소통의 불가능성을 낳는다. 폐쇄적인 동질성의 측면에서 볼 때, 민족들은 귀천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평등하지만, 소통 불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민족 간의 관계에는 패권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민족 간의 다원주의적 평등이 추상적인 형식적 평등이기 때문에 민족 간의 규모 및 힘의 실질적 불평등을 없애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족 간의 추상적 평등은 그저 국제관계를 조화시키는 국제법 규범일 뿐, 민족 관계를 조화시키는 정치 규범이 될 수 없다. 근대적 조건 하에 권력 정치(power politics)가 성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족주의는 진정으로 공정한 국제 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 공정한 국제정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 간의 추상적 평등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오류를 제거하고, 철저한 정치적 지혜를 통해 규모와 힘의 차이를 직시해야 한다. 차이는 자연적·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무조건 불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평등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진정한 평등은 추상적인 ‘일률적 평등’에서의 보편적 평등주의가 아니며, 또한 추상적인 ‘자유로운 평등’에서의 다원주의적 평등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같지 않으면서 같은(不齊而齊)’가

치 대등적인 평등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평등성이다. 이러한 평등은 ‘본성에 맞추는(適性)’ 것이 아니라 ‘본성을 다하게 하는(盡性)’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개체가 충분히 발전하고 스스로 주재할 조건을 부여받는지, 또한 외재적 질서가 규정한 ‘본성(性)’의 의미를 수용하고 승인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평등성만이 진정으로 개체의 특수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⁸⁾

나아가 차이를 직시하는 것은 윤리적 요구이자 동시에 정치적 지혜이다. 규모의 차이를 직시하는 것은 작은 자에 대한 윤리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큰 자에 대한 윤리적 요구이다. 큰 자가 자신의 ‘کم’을 직시하는 것은 그 크기의 책임, 그리고 자신의 매개 작용의 کم을 자각하는 것이다. ‘같지 않으면서 같은’ 제물평등(齊物平等)의 세계에서 ‘کم’이란 ‘매개’ 작용이 크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중대함을 의미한다.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주체 형성의 복잡한 조건을 직시하는 것이며, 차이를 직시하는 것은 차이에 따른 상이한 윤리적 요구를 직시하는 것이다. 역사와 차이에 대한 직시는 정리(情理)에 더욱 부합하는 정치질서를 세울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을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낙청의 지혜 창조로 다시 돌아오자. 백낙청은 일찍이 제3세계를 정의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제3세계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내가 보기에 제3세계의 의도는, 또는 제3세계 개념이 제시된 의도는 세계를 셋으로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데 묶어서 하나의 전체로 보자는 데에 있다. 하지만 제1세계 또는 제2세계의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라, 보통 민중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제3세계 관점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느 국가가 어느 세계에 속하는지 다룰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⁹⁾

8) 張志強, “操齊物以解紛, 明天倪以爲量: 論章太炎‘齊物’哲學的形成及其意趣,” 『中國哲學史』, 2012年 第3期(2012).

백낙청에 따르면 제3세계는 세계를 구획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강대국과 다른 시야 및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부터 출발해 세계를 정의한다. 제3세계는 새롭게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가치관이며 정치관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내부의 거대 분단을 극복하고 인문유대를 다시 강화하며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천 효과가 있는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이상적인 동아시아를 건설하고 이로부터 이상적 세계 건설로까지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들이 바로 ‘한·중 인문유대 강화’ 논의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미래에 대해 갖는 의의일 것이다.

■ 접수: 2013년 11월 20일 / 심사 : 201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8일

9) 白樂晴, “全球化時代의第三世界及民族文學概念,” 白樂晴 等, 『白樂晴: 分斷體制, 民族文學』. p.191.

【참고문헌】

외국어단행본, 외국어논문

Karl, E. Rebecca. “Creating Asia: China in the World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no.4 (1998).

Vandermeersch, Léon. *Le nouveau Monde sinisé*.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6.

張志强. “操齊物以解紛, 明天倪以爲量: 論章太炎‘齊物’哲學的形成及其意趣.” 『中國哲學史』. 2012年 第3期 (2012).

白樂晴 等. 『白樂晴: 分斷體制, 民族文學』. 臺北: 聯經出版, 2010.

신문

『聯合早報』(싱가포르)

Overcoming the 'Macro-division' and the possibility of ideal East Asia:
the implications of 'Strengthening of Korea-China Humanities Ties' to the future

Zhang, Zhi-Qia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of Korea-China Humanities Ties" is to get rid of possible misunderstandings, to enhance emotional bond and mutual trust by strengthening the humanities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reflects that the proposal of "Korea-China Humanities Ties" implies emotional distance and weakened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emotional distance and weakened mutual trust is not an accident. In some degree, it reflects the symptoms of "macro-division" within East Asia. This article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effects of "macro-division", constructs epistemological frame through which the "macro-division" is expected to overcome and then carries on critical analysis of the ideological grounds for "macro-division". Furthermore, this article tries to provide theoretical and historical reference for Korea, China and even future ideal order of East Asia.

Key words: Korea-China Humanities Ties, East Asia, macro-division, Centrism

장즈창(張志强, Zhang, Zhi-Qiang)

베이징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서울대학 철학연구소, 일본 도쿄대학 문학부 중국사상문화학 연구실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중국철학연구소 주임(主任)을 맡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朱陸孔佛 現代思想: 佛學與晚明以來中國思想的現代轉換』, “전통과 당대 중국: 전통부흥 현상의 사회문화적 맥락”(『교차하는 텍스트, 동아시아』(창비)에 한국어로 수록됨) 등이 있다.

역자: 송가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서 중국 현대(現當代)문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한·중 비교문학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석사논문은 “韓少功 소설 『爸爸』의 해석적 긴장에 관한 연구”이다.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통일의식은 남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주민 간 통일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통일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3년간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된 조사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2013년에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이다.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점차 악화되는 반면에 북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높다. 남한 주민의 통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 일관되게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였다. 둘째,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더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훨씬 더 기대감

* 이 논문은 “다중전환의 도전과 비판사회학”의 주제로 개최된 2013년 비판사회학대회(성공회대학교 미가엘관, 2013년 10월 26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제대상, 적대대상으로서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호 수용성의 격차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보다 오히려 남한 주민의 배타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오랜 분단체제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정치체제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남한 주민의 북한 문화 접촉 경험 수준은 북한 주민이 남한 문화 접촉 경험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에 대해 남북한 주민이 상이한 인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남한 주민은 북한을, 북한 주민은 미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주제어: 통일의식, 남북관계, 통일이의, 통일비용, 사회통합, 수용성, 배타성

I. 들어가며

통일의식은 남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한다. 전태국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통일의식은 단일적·통합적·조화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 갈등과 긴장을 내포할 수 있다. 통일의식은 현실에서는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통일국가의 이상이나 도덕적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내포할 수 있다.¹⁾ 이와 같은 통일의식의 양가성은 남한 주민이나 북한 주민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한국 정치사회 변화의 측면과 남북 정부 간

1) 전태국,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한독사회학회 엮음, 『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로의 함의』(서울: 한올아카데미, 2011), p. 204.

관계의 변화로 인한 시대·상황적 배경 속에서 함께 맞물려 진행되어 왔다.²⁾ 1970년대~1980년대 기간에는 제한적인 범위의 표본집단,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위주의 통일의식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국민적 차원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식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탈냉전의 도래로 남북한 간의 고위급회담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남북한 간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적 차원의 통일의식 연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적 흐름에 맞춰 통일의식 연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안득기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06년까지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약 23편의 연구성과물이 있는데, 이중 1970년대에 나온 논문은 약 2편 정도이고, 80년대에는 약 3편, 90년대에는 약 9편, 2000년대에는 약 8편 정도이다.³⁾

국민적 차원의 통일의식 여론조사는 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통일연구원과 같은 관 또는 반(半)관민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하지만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이뤄지거나 아니면 정책 현안을 반영하다보니 일관된 설문내용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조사 결과나 데이터도 대중적으로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통일의식조사』라는 제목으로 국민여론조사에 토대한 통일의식 연구 성과물을 내놓고 있으며, 조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내용을

2) 안득기, “북한 및 통일 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권 1호(2007), p.4.

3) 위의 글, p.6.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원 자료를 대중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식을 측정하려는 조사들은 여러 기관들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사들을 통해 발표되는 통일의식은 엄밀하게 보면 남한 중심의 통일의식이다. 통일이 남북한 주민이 함께 달성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면,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이 어떠한지 남한 주민의 통일의식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의식통합을 위한 준비는 역시 반쪽짜리의 불완전한 것이다. 아무리 남한 체제, 남한 사회, 남한 주민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라 할지라도 통합해야 할 대상은 북한 체제, 북한 사회,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어떠한 통일 또는 통합의 준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 체제,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나 이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가장 최근에 북한을 떠나 온 탈북자들을 통하여 비록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상태를 파악해보려는 노력은 현재의 분단된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비교분석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 주민통일의식조사의 경우는 국내 거주하고 있

4) 정은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대북정책 합의기반 강화방안,”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36~137.

5) 정은미·송영훈,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24권 1호(2012), pp.221~254.

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로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에게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의식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여러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은 탈북연도가 다양하게 섞여있는 표본이었던 데 반해,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의 표본은 조사가 이루어진 당해 1년 전까지 북한에 거주하였다가 탈북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이렇게 표본을 제한한 것은 장기간 제3국 경유나 남한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의식의 변형과정을 최소화하며, 경험에 바탕을 둔 의식의 동시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글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조사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2011년~2013년)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2011년~2013년)이다. 전자는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이고, 후자는 국내 탈북자를 통해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파악하고자 한 조사이다. 또한 전자는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었고, 후자는 2008년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조사의 연속성, 설문내용의 일치성, 표본의 동질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에 적합한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로 제한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두 조사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자료에 대한 개요

	통일의식조사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조사
조사 표본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65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가 이루어진 당해 1년 전까지 북한에 거주했다가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조사 시기	2011년 7월 26일~8월 15일 2012년 7월 5일~7월31일 2013년 7월 1일~7월22일	2011년 4월 15일~6월 4일 2012년 4월 6일~6월 2일 2013년 6월 13일~7월 16일
표본 수	2011년 1,201명 2012년 1,200명 2013년 1,200명	2011년 105명 2012년 127명 2013년 133명
조사 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표본 추출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	snowballing

이 글은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통일의식에는 어떤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요인들이 남북한 주민의 통일 의식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통일담론과 통일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변화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 예상시기,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집단적·개인적 이익, 사회문제의 개선), 상대방에 대한 존재인식과 친근감,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접촉경험, 남북 상호이질성, 마지막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인식이다.⁶⁾

II. 통일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⁶⁾ 일부 분석내용의 경우는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만 존재하여 남북한 주민의 의식 비교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용상 통일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경우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7년간의 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 2〉에서 보이듯,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한 주민은 과반을 간신히 넘긴다. 결국 2명 중 1명 정도만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절대다수가 아님을 말해준다. ‘반반/그렇지 않다’와 같은 유보적 태도 역시 20% 이상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늘어 23.7%에 이른다. 이와 같은 남한 주민의 응답 패턴과 달리 북한 주민의 응답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2011년에 95.2%, 2012년 93.7%, 2013년 93.3%로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미미하다. 이러한 남북한 주민간의 의식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일종의 ‘당위성’이 각 개인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오랫동안 남한 국민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으며, 통일은 꼭 이뤄야 할 민족적 과제라는 당위적 의식이 통일의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종의 ‘조건 반사’적인 응답을 이끌어내었던 것이다.⁷⁾ 다시 말해서,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기본 토대가 합리적 사고가 아닌 정서적 당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경우는 어떠한가. 남한 사회에 못지않게 북한 사회에서도 통일의 당위성이 규범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표 2〉에 나타난 남북한 주민 사이의 현격한 격차에 대해 남한 사회에서 통일의 당위

7) 권영승·이수정,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 의식: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제1권 2호(2011), p.2.

8)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숲, 2000), p.105.

성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반면에, 북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통일의 당위성이 건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달리 말해서,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을 현실주의적 또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의식하는 반면에, 북한 주민은 여전히 통일을 규범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의식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이다. 당위적 사고가 아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삶의 열악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에게 통일은 자신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탈출구이자 변혁일 수 있다.

〈표 2〉 통일 필요성 - 남북한 주민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필요함	남한 주민	53.7	57.0	54.8
	북한 주민	95.2	93.7	93.3
반반/ 그저 그렇다	남한 주민	25.0	25.0	21.6
	북한 주민	3.8	5.5	6.0
필요하지 않음	남한 주민	21.3	21.4	23.7
	북한 주민	1.0	0.8	0.8

Ⅲ.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전망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예상 3년간의 데이터 추이를 보면, 남한 주민은 대체로 '20년 이내',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장기적 통일 시기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주민은 '5년 이내', '10년 이내'와 같은 단기적 통일 시기를 예상하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

이 대조적인 결과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북한 체제의 내구성 측면에서 본다면, 남한 주민의 경우는 북한 체제가 적어도 20년~30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은 오히려 북한 체제가 5~10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통일에 대한 열망과 관련하여 보면, 남한 주민은 통일로 인해 발생할 부담이나 남북한의 이질성 문제를 고려하여 단기간 내 통일을 원하기보다는 적어도 20년~30년 정도의 통일 준비기가 있기를 바라는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가능한 빠른 통일이 이뤄져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의 경우 25.8%로 다른 어떤 가능 예상시기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견해가 통일 예상시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의 1/4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현상은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남한 주민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표 3>에 보이듯,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26.9%, 2012년 43.3%, 2013년 44.4%로 변했다. 특히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북한 주민 사이에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통일에 대한 좌절감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통일의 가능 시기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5년 이내	남한 주민	2,5	2,9	3,7
	북한 주민	20,2	11,8	12,0
10년 이내	남한 주민	16,3	14,5	13,3
	북한 주민	30,8	29,1	22,6
20년 이내	남한 주민	26,1	25,9	25,3
	북한 주민	12,5	8,7	8,3
30년 이내	남한 주민	14,0	17,8	13,7
	북한 주민	2,9	1,6	4,5
30년 이상	남한 주민	19,7	19,8	18,3
	북한 주민	6,7	5,5	8,3
불가능	남한 주민	21,4	19,2	25,8
	북한 주민	26,9	43,3	44,4

IV.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

1.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남한 사회에 전체 이익이 된다는 기대감은 절반을 간신히 넘긴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매우 압도적으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4〉에서 보이듯 남한 주민의 경우 3년간의 평균

값이 50.3%인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9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주민의 경우 2011년 100%, 2012년 96.9%, 2013년 99.2%로 절대적으로 기대감이 높다.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남북한 주민 간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다. 3년간의 평균값이 남북한 주민 각각 25.2%와 95.1%이다.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기대 차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격차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반면에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북한 주민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 다수가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남한 주민의 경우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집합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북한 주민에게서는 그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의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통일의식에 대한 양가적 태도, 즉 당위적 인식과 현실주의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두 인식 간의 격차가 크게 되면 결과적으로 통일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을 때 찬반의 여론이 크게 나뉘었던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면서도 '통일세'와 같이 개인의 경제생활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자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한 주민이 통일 편익에 대한 집단과 개인 차원에

서 느끼는 인식의 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자 간의 격차는 2011년 22.9%p, 2012년 25.6%p, 2013년 26.8%p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 양자 간의 격차가 2011년 4.8%p, 2012년 2.4%p, 2013년 3.7%p로 매우 작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주민 간의 대조적인 차이는 북한 주민의 경우 북한 사회 전체는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모두 현재 처해진 경제상황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통일이 북한의 경제성장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남한 주민의 경우는 통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됐을 때 남한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이 경제·사회적으로 부담하거나 감내해야 할 부분(조세부담, 사회혼란 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하여 과연 남북한 주민이 상정하고 있는 통일 이후의 사회체제가 동일한가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한국방송공사(KBS)가 탈북상태가 아닌 중국을 오가는 102명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 57.7%, 중국식 일국양제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⁹⁾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102명 중 단 2명에 불과했다. 남한 사회가 주도하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편익과 북한 사회가 주도하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편익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에게서 나타나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가 예상되는 통일의 방식과 통일 이후의 사회체제와 갖는 상관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⁹⁾ “KBS스페셜 통일 대기획: 제1편 북한 주민 통일을 말한다.”

(<http://office.kbs.co.kr/tongil>).

〈표 4〉 통일로 인한 이익 기대감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값
사회 전체	남한 주민	50.7	51.6	48.6	50.30
	북한 주민	100.0	96.9	99.2	98.70
개인	남한 주민	27.8	26.0	21.8	25.20
	북한 주민	95.2	94.5	95.5	95.07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앞서 살펴본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 남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기 이전에 주요한 사회문제들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이 통일 이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남북한 주민의 응답 태도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남한 주민은 대체로 거의 모든 사회 문제들이 통일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반면에, 북한 주민은 압도적 다수가 설문지에 제시된 사회문제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높은 순서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니 공통점이 나타났다. 〈표 5〉에서 보이듯, 3년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높은 사회문제를 순위별로 보면, 남한 주민의 경우 실업문제(23.8%) > 빈부격차(13.4%) > 이념갈등(12.4%) > 지역갈등(10.10%)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의 경우는 실업문제(85.7%) > 빈부격차(83.1%) > 이념갈등(58.9%) > 지역갈등(51.9%) 순서로 나타났다. 두 응답집단 간의 격차는 크게 존재하지만 통일로 인해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취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지역갈등 문제는 가장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실업문제나 빈부격차 문제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큰 격차는 통일 이후 통일편익의 분배 불평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지역갈등과 이념갈등 문제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격차가 크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대감 수준이 낮다는 것은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지역갈등, 이념갈등 문제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표 5〉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2011년) - “개선된다” 응답률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값
빈부격차	남한 주민	13.1	12.2	14.8	13.37
	북한 주민	82.8	79.9	86.5	83.07
실업문제	남한 주민	25.5	23.6	22.3	23.80
	북한 주민	86.4	80.5	90.1	85.67
지역갈등	남한 주민	10.0	10.9	9.2	10.03
	북한 주민	51.5	49.6	54.5	51.87
이념갈등	남한 주민	13.5	13.5	10.2	12.40
	북한 주민	62.7	53.3	60.6	58.87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이나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같은 측정지표를 통해 통일의식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적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병수는 실용주의적 접근은 통일이 가져오게 될 이익이나 분단이 초래하는 비용을 근거로 통일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통일을 자기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고 지적한다. 또 그는 이러한 경제주의적 사고가 압축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경제로 환원시켜 이

해하는 데 익숙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그는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이라는 말에도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만연된 경제주의적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⁰⁾ 대신 그는 통일의 이익 혹은 손실을 말하기보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통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에 더 방점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미래의 어떤 상태에 대한 득실의 계산보다는 지금 당장의 고통해소가 윤리적 차원에서도 인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한다.¹¹⁾ 결론적으로, 그는 통일이 남북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통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분단 상황이 남북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¹²⁾

이병수의 비판과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이 적다고 생각하고 현상유지를 바란다고 하여 우리 정부가 과연 통일의 노력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분명히 통일의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통일을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한다고 하여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통일 환경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통일 담론이 실용주의적이냐 당위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치지향의 보편성과 실천 과정의 민주성을 담아내고 있느냐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철학』 제21권 2호 (2010), pp.367~372.

11)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pp.372~373.

12)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p.385.

V. 상대방에 대한 존재인식과 친근감

1. 상대방에 대한 존재 인식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들이 혼재하여 있다. 북한은 적대국이면서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일부이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별개 국가와 같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 상이한 성격과 결부된 다중적 이미지는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지향으로 나타나 남남갈등 및 정치적 균열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¹³⁾ 북한을 어떤 존재로 파악하는가는 사실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지닌 이미지 효과가 크다. 박명규·이상신은 국제정치에서 ‘국가 이미지(national image)’는 독립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국가 이미지’로 개념화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을 일반적인 ‘국가 이미지’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이미지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한다.¹⁴⁾

〈표 6〉에 보이듯 3년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우선 남한 주민의 경우 협력대상(44.8%) > 경계대상(19.9%) > 지원대상(16.3%) > 적대대상(14.7%) > 경쟁대상(4.2%) 순서로 북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순서는 3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북한 주민의 경우는 협력대상(59.7%) > 경계대상(14.7%) > 적대대상(13.4%) > 지원대상(9.9%) > 경쟁대상(1.9%) 순서로 남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남북한 주민 공통적으로 협력대상

13)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평화』 제3집 1호(2011), p. 132.

14) 위의 글, p.143.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 주민보다는 북한 주민의 응답률이 더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이 인민들에게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에게 남한은 적대대상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해야 하는 대상의 이미지가 더 우선한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계대상인 점도 공통적이다. 이 유형에서는 남한 주민의 응답률이 북한 주민보다 더 높다. 순서상 차이점은 세 번째에서 나타난다. 남한 주민의 경우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지원대상인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적대대상이 세 번째로 응답비중이 많다.

하지만 응답비중이 아닌 3년간의 응답률 추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남한 주민의 경우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2012년 47.1% → 2013년 40.4%로 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은 2012년 10.9% → 2013 16.4%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1년 사이에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률 감소 폭만큼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증가한 셈이다. 올해 초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을 보는 이미지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2012년 64.6% → 2013년 63.9%, 적대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2012년 12.3% → 12.8%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주민 간 응답률 변화의 이러한 차이는 측정기준 연도의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발생한다. 남한 주민의 경우와 달리 북한 주민의 경우 조사는 2013년에 실시된 것이지만 이들이 북한에 최종적으로 거주했던 연도는 2012년으로 1년여 간의 남북관계 인식에 대한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에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2013년에 남북관계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남한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의 인식이 좀 더 부정적인 쪽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

〈표 6〉 상대방에 대한 존재 인식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값
협력대상	남한 주민	47.0	47.1	40.4	44.83
	북한 주민	50.5	64.6	63.9	59.67
지원대상	남한 주민	16.7	15.8	16.4	16.30
	북한 주민	11.4	5.4	12.8	9.87
경계대상	남한 주민	17.2	21.3	21.2	19.90
	북한 주민	21.0	12.7	8.3	14.00
적대대상	남한 주민	16.8	10.9	16.4	14.70
	북한 주민	15.2	12.3	12.8	13.43
경쟁대상	남한 주민	2.3	4.8	5.6	4.23
	북한 주민	1.9	1.5	2.3	1.90

2.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과제는 사회통합이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 주민들이 각각 상대방 존재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조사 결과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보다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표 7〉에서 보이듯 3년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남한 주민의 경우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이 40.8%인 반면에, 북한 주민(남한 거주 탈북자) 경우는 남한 출신 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이 89.7%인 것으로 나타나 두 응답집단 간의 응답률 격차가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평균값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표면적인 결과는 북한 주민에 비해 남한 주민의 배타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3년간의 응답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이한 현상이 발견된다. 남한 주민의 경우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이 2011년 40.9% → 2012년 39.5% → 2013년 42%로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남한출신 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률은 2011년 92% → 2012년 89.7% → 2013년 87.3%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한 주민의 경우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접촉기회가 많아지고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낯선 대상에서 친숙한 대상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주민(엄밀하게는 남한 거주 탈북자)의 경우 남한 출신 주민이 갖고 있는 배타적 정서를 점차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값
친근함	남한 주민	40.9	39.5	42.0	40.80
	북한 주민	92.0	89.7	87.3	89.67
친근하지 않음	남한 주민	58.9	60.5	58.0	59.13
	북한 주민	8.0	10.3	12.8	10.37

15) 이 응답결과는 질문이 약간의 다르다는 점을 밝혀둔다. 남한 주민의 경우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물었고, 북한 주민의 경우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에게 남한 출신 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물었다.

VI.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질성

오랜 분단체제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정치체제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다시 말해서, 분단은 단순히 지역적인 분리의 경계표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으며, 따라서 분단은 상이한 두 삶의 양식을 지닌 두 사회구성체의 분열적 존립을 뜻하기도 한다.¹⁶⁾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의 과정은 남북한 주민 간 상이한 삶의 양식의 일체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이 도래하기 이전 남북한 모두에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접촉 그 자체를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철저히 취급해 왔다. 하지만 탈냉전과 함께 그리고 대북정책의 변화로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늘어났다. 남한 주민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마스크, 탈북자의 증언, 방북 등을 통해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의 경험이 늘어나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의 형태 또는 친인척의 방문 선물이라는 형태로, 때로는 인맥의 신뢰관계를 통해 남한의 사회문화가 유입되고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회변동이 공식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남한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접촉을 제약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공간의 주요 단속 사항이다.

그렇다면 남북한 주민은 서로 얼마나 상대방의 문화를 접촉하고 경험을 하는지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남한 주민의 북한 문화 경험 정도는 북한 주민이 남한 문화 경험 정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16)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pp.25~26.

육이 남북관계의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기회가 현격히 줄어들고, 마스크를 통해 노출되는 북한문화 관련 정보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북한 관련 정보 접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남한 주민이 북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표 8>에 나타나듯이 남한 주민이 북한 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2011년 31.5% → 2012년 32.3% → 2013년 27.3%로 박근혜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강한 국가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한문화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2011년 76.7% → 2012년 90% → 2013년 88%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만성적 경제침체로 인해 문화 영역에 투입할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줄었고, 또 인민들이 획일화되고 도식화된 북한 문화 콘텐츠에 싫증을 느끼면서 대체 문화소비의 하나로써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한 문화 경험에 대한 높은 응답률은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한류 영향이 점증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문조사의 표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 구성에서 ‘직행탈북자’¹⁷⁾ 비중이 높은데, 이들은 북한에서 거주했던 당시에 이미 남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지역에 거주할 당시에 이미 남한 문화에 대해 친숙해지는 경험은

17) 북한 지역을 떠나 남한으로 들어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탈북자를 일컫는다. 대체로 탈북에서 입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체로 남한이나 중국 지역에 가족 또는 친인척의 인맥을 이용하여 이들의 중개로 미리 설정된 탈북 경로를 통해 신속히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 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남한 주민은 북한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오히려 북한 주민에 비해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경험 있다	남한 주민	31,5	32,3	27,3
	북한 주민	76,7	90,0	88,0
경험 없다	남한 주민	68,5	67,7	72,7
	북한 주민	22,3	10,0	12,0

VII. 남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오랜 분단체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 구조 역시 크게 변화시켰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규정하는 분단체제론의 주장처럼, 남북한 주민의 국제관계 인식에서는 블록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9〉에 보이듯, 가장 가까운 나라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선택은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남한 주민의 경우 10명 중 7명은 가장 가까운 나라로 미국을 선택했고, 북한 주민의 경우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가장 가까운 나라로 중국을 선택했다.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말은 이념, 제도, 생활양식,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다중적 의미를 포함한다. 각각 동맹국의 자리를 이어 두 번째로 가까운 나라에 남북한이 위치한다는 것은 분단체제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주변국 인식이 밀접하게 상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남한 주민이 느끼는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2012년 65.9%에서 2013년 76.2%에 나타나듯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경우도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2012년 70.4%에서 2013년 82%로 증가하였다. 달리 해석하면, 남북관계의 균열은 동맹국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주변국 친밀감 - “가장 가까운 나라” 응답률

(단위: %)

		2012년	2013년	평균값
미국	남한 주민	65.9	76.2	71.05
	북한 주민	1.6	1.5	1.55
일본	남한 주민	6.8	5.1	5.95
	북한 주민	0.8	0.0	0.40
북한/남한	남한 주민	20.6	11.0	15.80
	북한 주민	24.0	12.8	18.40
중국	남한 주민	5.8	7.3	6.55
	북한 주민	70.4	82.0	76.20
러시아	남한 주민	0.9	0.5	0.70
	북한 주민	3.2	2.3	2.75

〈표 10〉은 남북한 당국의 이데올로기가 국민의식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전태국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분단 상황에서 지배층에 의해 생산된 반공주의 이념에 일치시키려는 기본적인 동일화 압력 하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사고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¹⁸⁾ 2년간의 조사 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남한 주민이 북한을 지목한 비율은 52.1%인 반면에, 북한

주민이 남한을 지목한 비율은 4.9%에 불과하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남한 주민의 경우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한 비중이 가장 많은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미국이 6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현격한 결과의 차이는 결국 남북한 당국이 누구를 주적으로 삼아 이데올로기화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남한의 경우 북한을 주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미국을 주적으로 분단체제의 책임을 이들 국가에게 돌렸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안보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한 남한 주민의 응답률 평균값은 25.9%, 북한 주민의 경우 21.3%로 두 집단 간에 응답률 격차가 크지 않다. 더욱이 북한 주민의 경우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중국을 지목한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이 매우 현실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체제 생존을 위해 중국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잠재적 위협성을 갖고 있음을 북한 주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국제관계 인식이 매우 현실적임을 말해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이 공통적으로 중국을 한반도 평화위협 국가로 지목했다는 것은 한민족으로서 중국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공통부분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표 10〉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

(단위: %)

		2012년	2013년	평균값
미국	남한 주민	9.5	4.4	6.95
	북한 주민	66.1	71.4	68.75

18) 전태국, “통일인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p.206.

일본	남한 주민	12.3	16.0	14.15
	북한 주민	3.3	6.8	5.05
북한/남한	남한 주민	47.3	56.9	52.10
	북한 주민	8.3	1.5	4.90
중국	남한 주민	30.5	21.3	25.90
	북한 주민	22.3	20.3	21.30
러시아	남한 주민	0.4	1.3	0.85
	북한 주민	0.0	0.0	0.00

VIII. 결론

다년간의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에 북한 주민이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높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들어 남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남한 주민의 통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통일에 대한 열망 수준이 높은 반면에, 반대로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감소한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 일관되게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이는 것은 통일이 궁핍한 삶으로부터 자신을 탈출시켜 줄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더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한 주민의 경우는 20~3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가장 많고,

북한 주민의 경우는 5~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북한 주민의 예상 시기가 더 빠르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었다기보다 빠른 시기에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비관론의 확산은 통일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며, 이러한 현상이 남북한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 주민이 훨씬 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은 통일이 집단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더 지배적이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절대다수가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남한 주민은 통일로 인해 발생할 부담 증가를 먼저 염려하는데 북한 주민은 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의 남북한 경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이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해 상이한 미래를 그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흥미롭게 남북한 주민 모두 통일 이후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회문제는 실업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북한 주민 모두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임을 보여주며, 남북한 주민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통일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남한 사회가 현재 처해있는 사회문제의 개선이 통일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서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지

원대상이라는 인식은 줄어들었다. 또한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느끼는 친근감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것은 전태국도 지적했듯이,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 연대감과 이질감의 양가적 감정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에 대해 ‘우리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이다.¹⁹⁾ 또한 상호 수용성의 격차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 주민보다 남한 주민의 배타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오랜 분단체제는 남북한 간의 상이한 정치체제의 수준을 넘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탈냉전이 도래하기 이전 남북한 모두에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접촉 그 자체를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철저히 취급해 왔다. 하지만 탈냉전과 함께 그리고 대북정책의 변화로 남북한 주민 모두 상대방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늘어났다. 하지만 남한 주민의 북한 문화 경험 정도는 북한 주민이 남한 문화 경험 정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남북관계의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기회가 현격히 줄어들고, 마스크를 통해 노출되는 북한문화 관련 정보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북한 관련 정보 접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남한 주민이 북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상이한 인식 구조를 형성하였다. 남한은 반공교육을 통해, 북한은 반미교육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서 남한 주민은 북한을, 북한 주민은 미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 모두 2순위로 중국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은 남북한 주민의 역사인식에서 공통성이 존재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인식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안타

19) 전태국, “통일인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pp.224~226.

깝게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남한과 북한을 서로 선택하기 보다는 남한 주민은 미국을, 북한 주민은 중국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분단체제가 만들어놓은 비극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 여론 조사는 정부가 통일·대북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과정 및 사회적 여론의 수렴 차원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이 지나고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은 점점 더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본적 원인은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에서 기인하겠지만,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과연 국민의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기반 구축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3대 목표 중 하나이다.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안에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신뢰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식차원에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통일 이후의 사회와 삶에 대한 기대수준을 통해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조사결과와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국민은 통일로 인해 발생할 편익에 대한 기대감도 낮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상에 대한 기대수준도 매우 낮다.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불신은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한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정권교체 때마다 대북·통일정책이 바뀌고, 나아가 정권 출범 초기에 의욕적으로 표방한 대북·통일정책 또한 실천 영역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솔, 2000.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8.

국문논문

- 권영승 · 이수정. “글로벌 · 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제1권 2호(2011).
박명규 · 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평화』, 제3집 1호(2011).
안득기. “북한 및 통일 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권 1호(2007).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철학』, 제21권 2호(2010).
전태국.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한독사회학회 엮음. 『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남북통일예의 합의』.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1.
정은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대북정책 합의기반 강화방안.”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정은미 · 송영훈.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24권 1호(2012).

The Changes of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Focusing on Analysis of the Surveys, 2011~2013

Jeong, Eun-Mee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includes not only thoughts, ideas, and feelings about reunification, but also the will and desires for reunification. The surveys conducted over the last three years using the sample of North and South Koreans try to examin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changes of and the development of the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and it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In this study, the data of "Unification Attitude Survey" and "Attitude of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 conducted by Institute of Peace and Unif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11 to 2013 are used.

According to the data, first, while the need for reunification by South Koreans has gradually been decreased, North Koreans have shown a strong desire and the need for reunification. Second,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a different opinion about the time for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ns, North Koreans are more likely to expect to unify the two Koreas in the near future. However, North and South Koreans see the once-conceivable prospect of re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s increasingly unrealistic. Third, not surprisingly, the findings

show that North Koreans have higher expectations of reunification benefit. Forth, North and South Koreans recognized each other as a cooperative partner. But, with the antagonistic rhetoric and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reaching unprecedented heights, a hostile attitude has significantly been increase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Fifth, political and social differences have been develope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Finally,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a different view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Note that North and South Koreans are likely to conside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spectively as a nation which threatens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inter-korean relations, reunification benefit, reunification cost, social integration, tolerance, exclusion

정은미(Jeong, Eun-Mee)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공저),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의 사회관계자본의 변화” 등이 있다.

내적통일 관점에서의 독일 통일 이후 중등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에 대한 평가*

김상무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문요약

독일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통합은 성공적으로 이뤄낸 데 비해 사회·심리적 통합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적통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적통일 과제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동독사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본 논문은 내적통일 관점에서 통일 이후의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을 평가하고자 했다. 먼저 통일 이후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관련 학계의 동독사 이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교과서 분석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나지움 역사 교과서 9권의 동독사 서술 부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적통일 관점에서 평가했다.

연구 결과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내적통일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독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독재 체제 안에서도 연대의식을 갖고 나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동독을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하는 경향이 강했고, 동독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적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도 소극적이었다. 이는 독재 사회 속에서도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많은 동독인들의 삶을 소외시키는 접근 방법이다.

주제어: 독일 통일, 내적통일, 동독사 이해, 역사 교육, 역사 교과서

* 이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2년 통일학·평화학 연구기금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I. 머리말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로 통일을 이뤄냈다. 분단된 지 65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이 요원해 보이는 한반도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독일 통일 이후 20여 년의 통합과정에 대한 다양한 결산과 평가들이 산출되었다.¹⁾ 독일은 지난 20여 년의 통일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편에서는 성공적인 역사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²⁾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³⁾ 반면 독일 통일 이후의 전개

¹⁾ Kurt Bohr and Arno Krause, *20 Jahre Deutsche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2. Aufl. (Baden-Baden: Nomos, 2011); Elamar Brähler and Irina Mohr Hg., *20 Jahre Deutsche Einheit, Facetten einer geteilten Wirklichkeit* (Gießen: Psychosozial Verlag, 2010); Die Bundesregierung, *20 Jahre Deutsche Einheit* (Berlin, 2010); Wilhelm Heitmeyer, *Deutsch-deutsche Zuständ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9); Peter Krause and Ilona Ostner Hg., *Leb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Eine sozialwissenschaftliche Bilanz der deutschen Einheit 1990~2010* (Frankfurt; New York: Campus, 2010); Reiner Marcowitz Hg., *Ein neues Deutschland? Eine deutsch-französische Bilanz* (München: Oldenbourg, 2010); Tilman Mayer Hg., *20 Jahre Deutsche Einheit, Erfolge, Ambivalenzen, Probleme* (Berlin: Dunker & Humblot, 2010); Karl-Heinz Paqué, *Die Bilanz, Eine wirtschaftliche Analyse de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0).

²⁾ BMdI,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0* (Berlin: BMdI, 2010); Richard Schroeder, "Deutsche Einheit — besser als ihr Ruf," *Die politische Meinung* Nr. 458 (2008), pp.9-13; Thomas de Maizière, "Die deutsche Einheit als Erfolgsgeschichte," in Dagmar Schipanski and Bernhard Vogel Hg., *Dreißig Thesen zur deutschen Einheit* (Herder Verlag, 2009), pp.241~249; Karl-Heinz Paqué,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land: ein Teilerfol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 (2009), pp.22~27.

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대재앙”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⁴⁾ 통일 이후의 전개 과정을 서독에 의한 동독 사회와 경제의 식민화과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⁵⁾ 다른 한편에서는 성과와 한계를 모두 가진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독일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한다.⁶⁾ 결론적인 평가를 유보하는 경우라고 하겠다.⁷⁾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수의 평가는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의 정치적·경제적·생활수준 영역에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적·심리적 간극은 다른 영역만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⁸⁾

3) Klaus Schröder,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Stamsried: Verlag Ernst Vögel, 2006), p.573.

4) Uwe Müller 저, 이봉기 역, 『대재앙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2006)

5) Stefan Bollinger u. a. Hg., *Zehn Jahre Vereinigungspolitik: Kritische Bilanz und humane Alternativen*(Berlin: Dr. W. Weist, 2000).

6) Claus Ch. Malzahn, *Deutschland 2.0. Eine vorläufige Bilanz der Einheit*(München: dtv, 2010)

7) Edinger와 Halleermann이 대표적인데, 통일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Michel Edinger and Andreas Halleermann, “Wie im Westen, so im Osten?” Einheitsbilanz und Demokratiebewertung 15 Jahre nach dem Ende der DDR,” in Eckhard Jesse and Eberhard Sandschneider Hg., *Neues Deutschland. Eine Bilanz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aden-Baden: Nomos, 2008), p.80.

8) Oscar. W. Gabriel,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in Oscar W. Gabriel, Jürgen W. Falter and Hans Rattinger(Hg.).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Baden-Baden: Nomos, 2005), pp.385~423; Robert Grünbaum, *Deutsche Einheit. Ein Überblick 1945 bis heute. 2 Aufl* (Berli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0); Anna Klein and Wilhelm Heitmeyer, “Ost- und Westdeutsche Integrationsbilan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 (2009), pp.16~21; Peter Krause and Ilnoa Ostner, “Einleitung: Was zusammengehört...,” in dies. Hg., *Leb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Eine sozialwissenschaftliche*

즉 소위 내적통일 문제로 일컬어지는 과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통일을 성취한 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두 개의 분단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⁹⁾ 독일의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¹⁰⁾ 이런 평가들은 공과(功過)를 모두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과(過)에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는 입장들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 독일은 늘 가장 중요한 참조 대상이었고 반면교사였다. 국내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독일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적 전개 과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하면서, 정치적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분단은 계속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¹¹⁾ 비슷한 입장에서 독일 통일을 실패로 규정하거나 부정적인 유산에 주목하기도 한다.¹²⁾ 평가의 준거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Bilanz der deutschen Einheit 1990~2010 (Frankfurt; New York: Campus, 2010), pp.11~36; Johannes, L. Kuppe, "Das vereinigte Deutschland nach Überwindung der Zweistaatlichkeit," in Clemens Burrichter, Detlef Nakath and Gerd-Rüdiger Stephan Hg., *Deutsche Zeitgeschichte von 1945 bis 2000* (Berlin: Karl Dietz, 2006), pp.161~179; Rolf Reißig, "Von der privilegierten und blockierten zur zukunftsorientierte Transformatio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30-31 (2010), pp.20~25; Yve Stöbel-Richter, u. a. "Was bleibt? Erinnerung, Wahrnehmung und Bewertung verschiedener Aspekte der deutschen Einheit im Jahr 20", in Elmar Brähler and Irina Mohr Hg., *20 Jahre Deutsche Einheit, Facetten einer geteilten Wirklichkeit* (Gießen: Psychosozial Verlag, 2010), pp.180~194.

- 9) Wilhelm Heitmeyer, "Leben wir immer noch in zwei Gesellschaften? 20 Jahre Vereinigungsprozess und die Situation gruppenbezogener Menschenfeindlichkeit," in Wilhelm Heitmeyer Hg., *Deutsch-deutsche Zustände, 20 Jahre nach dem Mauerfall* (Bonn: BzfpB, 2009), p.45.
- 10) Uwe Spindeldreier, "Die Chancen des Jubiläumsjahres," *Die politische Meinung*, Nr. 486(2010), p.68.
- 11) 이해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서울: 푸른숲, 2000), p.28.
- 12) 김누리 편, 『통일독일을 말한다 1: 머릿속 장벽』 (파주: 한울, 2006); 이기식, 『독일 통일 20년』 (서울: 고려대출판부, 2011); Kim, Yong-Min, "Deutsche Einheit

유보적인 입장도 있다.¹³⁾ 또 여러 연구자들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⁴⁾ 그러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내적통일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내적통일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적통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만큼 중요한 요소도 드물 것이다.¹⁵⁾ 위에서 서술한 독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을 준비하고, 또한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내적통일 문제에 관한 중요 과제 중 하나는 동·서독인의 상호 이해 및 인정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히 동독인들이 느끼는 동독의 역사와 동독에서의 삶

als ein Muster- und Gegenbild für die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독일문학』, 120집 (2011), pp.309~324; Moon, Taewoon, “20 Jahre deutsche Einheit-Ungleichheit der politischen Kultur-,” 『한독사회과학논총』, 21권 1호 (2011), pp.181~208; 황준성, “독일 통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와 시사점,” 『경상논총』, 25권 4호 (2007), pp.71~88. 김누리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동독인들은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나의 동독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누리 외, 『나의 통일이야기: 동독 주민들이 말하는 독일 통일 15년』 (파주: 한울, 2006), p.273.

- 13) 양민석·송태수, “독일 통일 20년 - 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0권 4호(2010), pp.3~34;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9).
- 14)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파주: 한울, 2010); 설원태, “독일 통일 20주년. 대체로 성공적 평가 속에 주민통합은 진행형,” 『경향신문』, 2010년 10월 2일; 손기웅, 『독일 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서울: 통일교육원, 2010); 염돈재,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조효제, “독일 통일 그 후의 이야기,” 『한겨레신문』 2011.2.26.; 한운석, “독일 통일 20여 년의 성과와 한계,” 『역사와 담론』, 54집 (2009), pp.235~272; 황의서, 『독일 통일이야기』 (서울: 야스미디어, 2009);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서울: 늘봄플러스, 2011).
- 15) BMfVBS,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Berlin: BMfVBS, 2009), p.30.

에 대한 평가절하가 중요하다(물론 여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역사 교육이다. 본 연구는 역사 교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독일 통일 이후 역사 교육에서는 동독의 역사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동독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통일독일의 역사교육은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동독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어떤 주요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 사회에서 전후 복구와 사회 발전에 공헌해온 동독인들의 삶을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평가할 것이다. 학교 역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교과서이므로 역사 교과서들을 분석한다. 제한된 지면관계상, 각 주정부의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 준비 중등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 상급반(Oberstufe) 2012/2013학년 수업용으로 승인된 역사 교과서 9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참고문헌 참조).

II장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역사학을 중심으로 관련 학계의 동독 이해의 관점을 정리한다. 어떤 관점에서 동독사를 이해해야 하는지, 동독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리할 것이다. 이 때 동독인들의 동독사에 대한 이해도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이런 느낌은 주관적일 수 있기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할 교과서에서 무작정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 있는 것이라면 내적통일의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동독사가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토대로 역사 교과서 분석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교과서 분석 방법을 토대로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내적통일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다. 맺음말(I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독일 사례에서부터 한국의 통일교육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한다.

II. 독일 통일 이후 관련 학계의 동독사 이해에 관한 논의와 역사 교과서 분석 방법

1. 독일 통일 이후 관련 학계의 동독사 이해에 관한 논의¹⁶⁾

동독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기반을 둔 냉전과 그에 따른 동독의 구소련 영향권으로의 편입, 이런 배경 하에서의 서독과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분단의 역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즉 동독사는 동독 자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서 대립이라는 국제정세와 서독과의 관계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최근에는 유럽사의 틀 속에서 동독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동독사를 이해하는 관점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사회주의체제 붕괴는 처음부터 예비되어 있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또 동독이 어떻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방법과 속도로 붕괴되었는지에 관찰의

¹⁶⁾ 이 절의 내용은 필자(2005)의 논문 32~35쪽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¹⁷⁾ Christoph Kleßmann, *Zeitgeschichte in Deutschland nach Ende des Ost-West-Konflikts* (Essen: Klartext, 1998), pp.48~49.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¹⁸⁾

통일 이후의 수많은 연구 성과들은 동독 사회가 생각보다 다면적임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동독사를 여러 측면에서 분화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동독이 일당독재국가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권력이 일당-사회주의통일당(SED)-에 독점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유선거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권력 분립도 이루지 못했고 법치국가도 아니었으며, 주민감시와 억압으로 인권과 시민권을 침해한 독재국가였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독재국가의 독재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아무리 사회주의 독재체제라도 사회의 모든 분야를 철두철미하게 장악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²⁰⁾ 거기다 독재라 하더라도 순전히 억압과 폭력만으로는 지배를 관철할 수 없다. 때문에 동독 정권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노동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선진과 선동 등을 통해 체제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 내려 했다. 초기에는 반파시즘과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통해, 중기에는 경제개혁 시도를 통해, 후기에는 복지정책의 확대와 독일 역사의 전통을 동독의 긍정적인 부분과 연결하려 함으로써 체제의 정당화를

18) Konrad H. Jarausch, "Die DDR denken. Narrative Strukturen und analytische Strategien," *Berliner Debatte Initial*, H. 4/5(1995); Jürgen Kocka and Martin Sabow, *Die doppelte Vergangenheit. Der gemeinsame Blick auf die geteilte Geschichte. Funkkolleg. deutschland im Umbruch. Studienbrief 2.* (Tübingen: Deutsches Institut für Fernstudienforschung an der Universität Tübingen, 1997); Rolf Badstübner, *DDR-gescheiterte Epochenalternative. Aufbruch in die Sackgasse oder was sonst? Versuch einer Annäherung.* Hefte zur DDR-Geschichte. Heft 19 (Berlin, 1994).

19)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Partei, Staat und Gesellschaft 1949-1990.* (München: Hanser, 1997), p.632.

20) Bessel, Richard and Jessen, Ralph, "Einleitung. Die Grenzen der Diktatur," in dies. Hg., *Die Grenzen der Diktatur. Staat und Gesellschaft in der DD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pp.7~23.

시도했다.²¹⁾

이러한 독재 아래에서 동독인들은 공식적인 관계나 시스템 이외의 제 2의 사회를 구성하며 삶을 영위했다. 공식적인 경제 외에 암시장이 형성되었고, 공식적인 노동관계 외에 비공식적 노동관계가 생겼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통일된 문화 외에 비공식적인 다원적 하위문화 등이 형성되었다.²²⁾ 이러한 제2의 사회는 동독인들이 정치적 강요에서 벗어나 사적인 관심사에 몰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고, 작업장에서의 비공식적 관계는 그들만의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대다수의 동독 시민들에게 삶은 순응과 거리 두기 혹은 끊임없는 줄타기 과정이었다. 평범한 시민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대중 집회 등에서 당과 국가에 충성을 드러내 보이고, 동시에 사적 영역은 다른 가치와 행동 양식으로 조직했다.²³⁾

위와 같은 내용들이 역사 교과서에 적절하게 기술되기 위해서는 구조사와 경험사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구조사적 접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중심으로 동독사회를 규정한 구조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사²⁴⁾를 통해 동독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동독인들은 독재체제를 어떻게 수용했고, 그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영위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동독의 성공이 가능했고, 또한 왜 붕괴했는지를 알

²¹⁾ Sigrid Meuschel, *Legitimation und Parteiherrschaft, Zum Paradox von Stabilität und Revolution in der DDR 1945~1989* (Frankfurt: Suhrkamp, 1992).

²²⁾ Detlef Pollack, "Die konstitutive Widersprüchlichkeit der DDR. Oder: War die DDR- Gesellschaft homoge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24, no. 1 (1998), pp.110~131.

²³⁾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Partei, Staat und Gesellschaft 1949~1990*, p.586.

²⁴⁾ 경험사는 일상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체험과 의미부여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Dorothe Wierling, "Alltags- und Erfahrungsgeschichte," In Klaus Bergmann u. a. Hg., *Handbuch Geschichtsdidaktik*, 5 Aufl (Seelze-Velber: Kallmeyer, 1997), p. 233.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새로이 구성된 신연방주 주민들의 대다수는(77.9%)는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동독의 역사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²⁵⁾ 따라서 동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역사적 사건과 업적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2. 역사 교과서 분석 방법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공인된 교과서 분석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²⁶⁾ 연구주제와 분석대상에 맞게 적절한 분석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양적 분석 방법과 질적 분석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을 모두 활용한다. 양적분석 방법으로는 공간분석을, 질적 분석 방법으로는 서술여부분석(Präsenzanalyse)과 해석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공간분석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교과서가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주제의 중요성이나 관심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서술여부분석은 특정 주제, 개념, 용어, 사건이 서술되고 있는지, 서술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측면은 서술되고 어떤 측면은 생략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²⁷⁾ 해석학적 방법은 특정 주제가 어떤

²⁵⁾ Sozialreport, *Spezifische Lebenslage, DDR-Vergangenheit und nationale Einheit aus der Sicht der Ostdeutschen, Sozialreport I Quartal, Neue Bundesländer*, 1995, p. 22.

²⁶⁾ Christian Thimme, *Geschichte in Lehrwerken Deutsch als Fremdsprache und Französisch als Fremdsprache für Erwachsene: einer deutsch - französischer Schulbuchvergleich*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1996), p. 92.

²⁷⁾ Peter Meyers, *Friedrich II, von Preußen im Geschichtsbild der SBZ/DD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Geschichtswissenschaft und des Geschichtsunterrichts in der SBZ/DDR*, (Braunschweig: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1983).

전제 아래에서 어떤 의도로 서술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²⁸⁾

본 연구는 통일독일의 역사 교육에서 동독사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의도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이런 연구목적에 맞게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 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독사를 정당하게 이해하고, 내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향
2. 서독과의 대립과 협력관계, 그에 따라 동독사회에 미친 영향
3. 동독사의 전개 과정
 - 3.1. 분단사에서 동독사의 위치
 - 3.2. 동독사 시기구분과 서술의 관점
 - 3.3. 서술 영역과 강조하고 있는 주제(구조적 특징,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 등)
 - 3.4. 역사적 성과와 사회적 업적 인정
4. 동·서독 비교
5. 동·서독사 서술 분량

동독사는 앞에서 보았듯이 동-서 냉전이라는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동독에 대한 영향력 행사(1), 서독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2). 동독사의 전개 과정을 정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단사에서 동독사가 합당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동독사가 서독사의 부록처럼 느껴

²⁸⁾ Wolfgang Marienfeld, *Schulbuchanalyse und Schulbuchrevision: zur Methodenproblematik, Internationales Jahrbuch für Geschichts- und Geographieunterricht*, Bd. XVII, (1976), p.50.

저서는 안 된다(3.1.). 또 동독사를 어떻게 시기 구분하고 각각의 시기를 어떻게 특징짓는지를 보면 어떤 시각에서 동독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잘 읽을 수 있다. 동독사를 이해하면서 서독은 성공의 역사로, 동독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역사로 서술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서술의 관점은 교과서의 동독사 이해 관점을 드러내준다(3.2.). 서술 영역이나 많은 지면을 할당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통해서도 역사 교과서가 동독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동독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과 그 속에서의 동독인들의 삶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3.3.). 내적통일을 고려해볼 때, 동독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업적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서술이 필요하다(3.4.).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이나 업적이 사회주의 독재를 미화하거나 주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는 내용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내적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일방적으로 서독에 유리한 비교는 지양되어야 한다(4).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독사에 종속된 동독사로 여겨저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서술 분량도 동독과 서독에 동일한 지면을 할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동독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서술여부분석 혹은 해석학적 분석을 활용하고, 3.3.의 강조주제와 5번은 공간분석을 사용한다. 서술여부분석에서는 동독사회의 어떤 주제영역들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 등- 서술되고 있고, 어떤 역사적 사실과 정책들이 서술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나 정책 등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해석학적 분석을 통해서서는 그런 사실이나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공간분석을 통해서서는 동독사와 서독사의 서술 분량을 쪽 단위로 계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III. 김나지움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 내용분석

1.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향

〈표 1〉을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동-서 갈등을 별도의 대단원이나 중단원에서 서술함으로써 20세기 후반기를 규정하는 역사적 현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동독은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의 동방진영으로,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서방진영으로 통합되었음을 모든 교과서들이 서술하고 있다. 그 결과 동독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사회로 건설되었고, 인민봉기 진압, 권력교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에 소련의 지원이나 승인을 받아야 했다. ‘1989/90년 평화혁명’ 당시 동독인들의 시위도, 소련군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무력을 통한 진압을 포기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음을 여러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다. TB1은 울브리히트에서 호네커로 권력이 교체되는 것도 소련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소련에 철저하게 종속된 국가임을 강조하고 “위성국가”라고 규정하기도 한다(p.217).

〈표 1〉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향

교과서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향(○)
TB1	■동-서 갈등을 별도의 중단원으로 다룸. 독일분단은 동-서 냉전 결과 중의 하나(p.6); 승전국들의 심화된 대립의 결과가 독일분단이며 승전국과 그들의 세계정치적 관계가 독일의 미래를 결정. 이런 틀 속에서 동독과 서독정부는 내부 전개과정 결정(p.31); 40년 동안 동-서 갈등의 틀이 서독의 외교정책을 규정함(p.38); 냉전이 분단을 야기했다면, 동·서독이 동-서방 양 진영에 가입함으로써 적대적인 국가로 대립하게 됨(p.217).

	<p>○ 동독은 소련의 권력영역으로 공산주의 독재 수입(p.6); 소련의 강압으로 동독공산당과 사민당 통합(p.32); 소련의 보호와 지도 아래 SED는 공산주의 독재 건설(p.73); 당 조직의 모델은 소련공산당(p.74); 1953년 봉기 소련군 진압은 동독 정권의 소련 종속성 보여줌(p.73, 80); 서독이 자발적으로 서방진영으로의 통합을 추진하자 동독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었을 뿐(p.78);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에게 올브리히트 퇴진을 청원하는 편지(pp.107~108); 호네커는 소련의 조건 없는 지도 인정(p.73); 소련 종속적 위성 국가(p.217).</p>
TB2	<p>■ 동-서 냉전의 역사를 별도로 다루지 않음. 동독과 서독의 동방과 서방 진영으로의 통합 서술. ○ SPD와 KPD의 SED로의 강압적 통합(p.244);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련식 모델로 조직화(p.246); 소련군 1953.6.17 봉기 무력진압(p.254).</p>
TB3	<p>■ “세계전쟁의 세기” 대단원 아래 “동-서 갈등과 냉전”이라는 중단원에서 동-서 대립 서술. 두 개의 독일 국가 건설은 반(反) 히틀러연합의 붕괴에 기인(p.381); 서독은 서유럽연합(WEU)과 나토 가입을 통해 서방진영으로 통합(p.391); 동독은 동구권의 상호경제협력이사회(RGW)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으로 동방통합(p.395). ○ 소련의 강압으로 사민당과 공산당 통합(p.366); 동독의 국가, 경제시스템건설은 소련식 모델을 따름(p.390); 정치경제적, 국내정치적 방향은 소련모델을 따랐고, 외교도 소련의 동맹노선 따름(p.395); 소련의 헤게모니가 위협당한다고 판단하면 무력행사도 서슴지 않았음. 1953년 동독인 봉기 진압이 그 예(p.457).</p>
TB4	<p>■ 동-서 갈등을 별도의 단원에서 다루지 않음. 서독은 나토와 서유럽연합 가입으로 서방진영으로 통합되고, 동독은 동구권의 바르샤바조약기구와 상호경제협력이사회 가입으로 동방진영으로 통합(p.250) ○ 소련은 처음부터 동독을 소련식 모델에 따르는 정치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이를 위해 사민당과 공산당을 강압적으로 통합하여 SED 창당(p.258); 동-서 갈등은 동독과 서독의 스포츠 경쟁에도 영향 미침(p.262).</p>
TB5	<p>■ 동-서 갈등을 별도의 단원에서 다루지 않음. 동독과 서독이 각각 동방과 서방진영으로의 통합되었다고 서술. ○ 소련강압으로 SED 창당(p.146); SED모델은 소련공산당(KPDsu)(p.147); 소련식 모델에 따른 사회주의 건설(p.151); 1953년 봉기 진압(p.154); 동독시스템은 소련에 의해 정착됨. 동독은 소련의 보호 아래 있었고, 그런 소련의 보호가 사라지자 국가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음(p.183).</p>

TB6	<p>■별도의 대단원에서 유럽통합과 동-서 냉전 다름. 동독과 서독이 각각 동-서방 진영에 통합(p.423, 444).</p> <p>○소련점령군의 압박 속에 SPD와 KPD는 SED로 통합(p.40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소련식 모델 수용(p.441); 소련군 1953년 6월 인민봉기 진압(p.447); 동독경제의 소련 계획에의 종속성(p.447); 소련 영향으로 동독정권 1989년 동독인 시위 무력진압 포기(p.459).</p>
TB7	<p>■별도의 대단원으로 동-서 갈등 서술. 냉전시기 정치·군사적으로 상이한 권력블록에 가담(p.529). 동독과 서독이 동-서방진영으로 통합(pp.532~533).</p> <p>○국가와 사회질서 스탈린주의적 소련 모형 따름. 1940년대 말부터 소련 점령지역 전체 사회생활이 소비에트화(p.531); 1953.6.17 봉기 진압(p.532); 소련에 의해 지배되고 종속된 국가(p.535); 소련식 모델에 따라 경공업과 소비재공업 대신 중공업구조의 산업구조 형성(p.539).</p>
TB8	<p>■동-서 갈등 별도의 대단원으로 서술. 동독과 서독이 각각 동-서방 진영으로 통합(p.80, 88).</p> <p>○소련점령군의 강압으로 SPD와 KPD 통합(p.60); 소련식 모델에 따른 사회주의 건설(p.88); 1953.6.17 소련군 진압. SED권력은 소련군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p.89); 동독의 5개년 경제 개혁은 완고하게 소련의 7개년 계획에 따름(p.90); 소련과의 친선과 원조조약으로 경제의 소련 종속성 심화(p.137); 1989년 시위 현장책임자 소련의 지원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압하지 않음(p.151).</p>
TB9	<p>■동-서 갈등 별도의 대단원으로 서술. 서독은 나토와 서유럽연합 가입으로 서방진영으로 통합(p.349). 동독은 RGW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으로 동방진영으로 통합(p.355).</p> <p>○SED 창당에 압력(p.309); 소련 모델에 따른 인민민주주의는 소비에트화(p.354); 동방진영으로의 통합은 동독의 경제, 사회, 정치의 소련 종속성 의미(p.355); 국가, 사회, 경제의 소련식 모델에 따른 재건(p.377); 소련탱크 1953년 봉기 진압(p.378); 1989년 동독인들의 시위 때 정치적 협상을 지지하는 온건파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p.391).</p>

2. 서독과의 대립과 협력관계, 그에 따라 동독사회에 미친 영향

교과서들은 아테나워정부 이래로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와는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소위 할스타인 원칙을 토대로 하는 서독의 외교정책과 그에 따른 동·서독의 대립, 동·서독기본조약으로 대표되는 교류와 협력정책, 그리고 그것이 동독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서술하고 있다. 단지 TB4만 양국 상호관계가 동독사회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여러 교과서들은 동독인들에게 서독사회와 복지수준은 결정적 비교준거 역할을 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 서독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서독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심화를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TB5).

〈표 2〉 서독과의 대립, 교류와 협력관계, 그에 따른 동독사회에의 영향

교과서	서독과의 대립(■), 교류와 협력(○), 그에 따른 동독사회에의 영향(▶)
T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십 년 동안의 대립과 차단이 양 독의 존재를 규정했음(p.6); 동독 불인정의 할스타인 독트린(p.38); 동·서독기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동독 국적 불인정(p.101)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63) ▶동독인들에게 서독의 복지수준은 그들의 계획경제 아래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척도로 여겨짐(p.102)
T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독에 대한 차단정책, 할스타인 독트린(p.255)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263) ▶서독 TV와 친척방문은 동독주민들에게 동독당국의 주장과 현실의 간극을 인식하게 해줌. 서독 마르크와 유행에 대한 갈망 지님(p.270); 체제대결의식(p.270)
T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독의 국제법상 불인정의 할스타인 독트린(p.392);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동독 국적은 인정하지 않음(p.407)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서독이 동독의 제2의 교역국가가 됨; 양국 간 긴장완화;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경제, 통행, 환경 관련 합의(p.407) ▶경제성과에 대한 서독과의 비교는 동독인들의 지속적인 불만 야기(p.414)

TB4	<p>■서독의 단일대표권 주장하는 할스타인 독트린으로 동독과의 대결정책 추진(p.252); 동·서 냉전 하에 동·서독의 스포츠경쟁(p.262) ○ 동·서독기본조약 체결과 그 목표만 간단하게 언급(p.254)</p>
TB5	<p>■서독의 유일대표권 주장(p.158) ○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157); 국경이 통행 가능해지고 방문자 증가, 통신 소통 확산(p.167) ▶ 서독 TV시청은 동독인들의 표준이 됨; 양국 사이의 여러 조약들은 국가적 분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결합은 결코 파괴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만들어 줌(p.167); 서독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심화(p.182)</p>
TB6	<p>■할스타인 독트린으로 서독의 유일대표권 주장(p.406) ○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429) ▶ 동독의 생활수준은 공산권에서 최고 수준이었지만, 동독인들의 유일한 비교대상은 서독(p.450); 1970년대 중반 이후 국가부채는 서독의 재정지원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국경지역의 지뢰밭과 자동발사시설을 축소하고 수천 명의 동독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만들었고 서독으로의 이주와 왕래를 자유롭게 만들었음(p.450)</p>
TB7	<p>■양국은 서로 나온 민주공화국이라고 주장(p.529); 1950년대, 1960년대 양국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대립 서술(p.549~550); 동·서독기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의 동독 인정은 거부(p.550) ○ 양독 상호관계를 별도의 단원으로 하여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양국의 관계를 통사적으로 서술(pp.549~552).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서독의 재정지원(pp.551~552) ▶ 서독여행기회 확대, 동독 내의 야당세력 강화, 동독주민들의 서독 이주 권리 요구, 양국 관계 밀접해짐(p.551)</p>
TB8	<p>■동·서독기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동독 국적 인정 안함(p.124) ○ 동·서독기본조약 체결(p.124); 이후 100건 이상의 협약, 합의 체결, 수백만 동독 여행(p.125); 공동의 평화노력(p.143) ▶ 동독인들 서독 방문 가능, 수많은 접촉과 정보교환 이루어짐. 의견 형성, 기대와 희망 생겨남(p.125)</p>
TB9	<p>■동독 불인정의 할스타인 독트린이 1960년대 말까지의 서독 통일정책의 기초(p.385); 상호 국가명을 둘러싼 대립(p.386) ○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내독 간 경계 완화, 교류 강화, 여행과 방문 가능해짐(p.415) ▶ TV시청을 통해 쉬워진 서독 사회와 그들의 생활수준과의 비교를 동독정권이 막을 수 없었음(p.388)</p>

3. 동독사의 전개 과정

1) 분단사 속 동독사의 위치

아래의 <표 3>에 나타난 분단사 서술방식을 보면, 동독과 서독을 포괄할 수 있는 준거에 따라 양국을 함께 서술하려 했느냐 아니면 동독과 서독을 각각 개별적으로 서술하려 했느냐에 따라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TB2를 제외하면 어떤 경우이든 동독사를 서독사에 종속된 역사로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다. TB2는 서독사를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역사로 보고, 동독사를 그 일부로 보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TB4도 서독사는 3단계로 나누어 각각 하나의 소단원에서 설명하고, 동독사는 하나의 소단원에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만큼 동독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B2와 TB3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은 동독과 서독을 분리해서 서술하고 있다. TB3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양국을 포괄하여 두 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 했는가하는 관점에서 서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동독과 서독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교과서들이 동독과 서독을 별도의 사회발전과정을 추구한 다른 국가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TB1, TB6, TB9로 양 독일이 분단 이후 각기 다른 사회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TB7은 분단사 전체를 분단 심화와 그에 따른 체제대결이라는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다. 비록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겪는 동·서독이지만 양국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분단사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3〉 분단사 속 동독사의 위치

교과서	분단사 속 동독사의 위치
TB1	<p>○ “20세기 후반기의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대(大)단원 아래 “연합국 점령 시기와 독일 분단”, “서독: 정치와 경제적 전개 과정 1949~1989”, “동독 1949~1989: 국가와 경제”, “평화혁명에서 재통일로”라는 중(中)단원으로 구성.</p>
TB2	<p>○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유럽”이라는 대단원 아래, “독일 통일이 깨짐”, “양 독일 국가의 형성”, “서방통합으로의 길”, “동방정책의 새로운 대안”, “1989년 독일혁명”의 중단원으로 구성. 이 중 “양 독일 국가의 형성” 중단원 아래의 “서독과 동독의 건국”이라는 소단원에서 동독 건국과정을 서술. “서방통합으로의 길” 중단원의 한 소단원으로 “동독의 붕괴” 서술. “1989년 독일혁명” 중단원에서 “동독 붕괴의 원인” 소단원에서 시기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동독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 서술. -이 교과서는 동독사를 서독사에 종속된 역사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음</p>
TB3	<p>○ 분단 이후의 역사를 “패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간”, “동·서독 건국 과정”, “양국 건설 과정”, “대립에서 공존의 동방정책”, “양국의 시대적 과제”, “평화혁명과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나누고, 동·서독이 각각 국가건설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한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음. 양국의 건설과정은 분리해서 개별 소단원으로, 양국의 시대적 과제는 하나의 중단원 안에서 함께 서술하고 있음. -동·서독이 해결했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단원에서 서술함으로써 두 나라이긴 하지만 전체독일의 역사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p>
TB4	<p>○ “1945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정치적 전개 과정”이라는 중단원 아래 “민주적 새 출발-서방점령지역과 서독(1945-1969)”, “사민주의자들 권력에 앞다(1969-1982)”,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종식에서 독일 재통일까지(1982-1990)”, “사회주의 독일-소련점령지역과 동독(1945-1990)”의 4개 소(小)단원으로 구성. -단원 수로만 보면 서독사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원 이외의 읽을거리(Dossier)를 통해 일상과 스포츠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분량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 그러나 서독은 역사적 전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각각 하나의 소단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비해, 동독은 하나의 소단원 안에서 전체 동독사를 다루고 있음. 이는 동독사는 한 단원에서 설명해도 되는 사회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그 만큼 동독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p>

TB5	○“독일: 분단에서 재통일로”라는 대단원 아래 “공동의 점령정책 좌절”, “새 질서에서 서독으로”, “소련점령지역에서 동독으로”, “ 두 국가 징후의 독일”, “독일 통일”의 중단원으로 구성.
TB6	○“1945년 이후 독일”이라는 대단원 아래, “동-서 갈등과 독일 분단”, “서독의 정치·사회적 전개 과정”, “동독의 정치·사회적 전개 과정”, “독일 통일과 그 결과들”의 중단원으로 구성.
TB7	○“1945년 이후 독일” 대단원 아래 “전쟁종료 1945-새 출발 기회”, “이 중 국가건설”, “독일 1949~1961: 분단의 심화”, “차단과 긴장완화-양 독일 관계사”, “독일 1961~1989: 체제대결”, “평화혁명과 재통일 1989/1990”의 중단원으로 구성. 1949년에서 1961년까지는 분단이 심화되는 시기로, 그 이후의 시기는 체제대결시기로 규정. 분단이 심화되는 시기(1949~1961)에는 “정치 갈등”, “경제 질서와 경제발전”, “사회구조와 남녀관계”라는 소단원에서 각각 서독과 동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양국이 대비되도록 서술하고 있음. 체제대결(1961~1989) 시기에는 서독과 동독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성.
TB8	○“동-서 갈등과 독일분단”, “두 국가-한 민족”, “장벽붕괴와 독일 통일”의 3개 대단원으로 전후사 서술. “두 국가-한 민족” 대단원 안에 11개의 중단원으로 서독사와 동독사 서술. 이 중 6개는 서독사, 4개는 동독사, 하나는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독 관계사로 이루어짐.
TB9	○“붕괴와 새 출발: 독일 1945~1949”, “한 민족-두 역사: 서독과 동독 1949~1989”, “독일 통일: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세 대단원으로 분단의 역사 서술. 이 중 “한 민족-두 역사: 서독과 동독 1949~1989” 대단원 아래에서 “독일 과거사”, “서독의 기초”, “동독의 기초”, “서독역사 1949~1989”, “동독역사: 1949~1989”, “두 국가-하나의 독일”, “동독의 야당과 1989년 평화혁명”의 중단원으로 구성.

2) 동독사 시기 구분과 서술의 관점

〈표 4〉를 보면, 동독사의 시기를 구분해서 서술하는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9권 중 6권은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3권만 동독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기를 구분한 교과서의 경우 그 기점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TB1, 7)이거나, 울

브리히트에서 호네커로의 권력교체(TB4), 1961년, 1971년, 1975년을 기점으로 하는 교과서도 있다(TB9). 가장 많이 다루는 시기는 건국 이후 소련식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건설하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기까지의 시기이다. 다음으로는 호네커로의 권력교체와 경제와 사회정책의 통일,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야당세력 탄압이다. 1960년대의 개혁 시도를 다루는 교과서는 TB1, TB5, TB6, TB7 등인데, TB1와 TB9를 제외하고는 몇 줄부터 1/3쪽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동독은 출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독재국가였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TB1은 단원의 제목을 통해서 동독은 대안이 될 수 없었음을 제시하고 있고, TB3은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TB5는 동독이 정당성이 없는 국가이고, 소련에 철저하게 종속된 국가로 소련의 지지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가임을 기술하고 있다. TB7은 단원 제목을 통해 행운의 민주주의와 좌절된 독재로 체제대결에서 패배한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 명시적인 진술은 없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국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데 TB2는 명확하게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실사회주의는 좌초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체제내재적인 결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부족함을 느끼게 한 점과 지도세력의 지적·도덕적 과실이 결정적이었던 것이다(p.269). 그리고 비록 체제가 잘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붕괴할 수밖에 없었음을 2쪽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pp.269~271).

위에서 다수의 교과서들이 동독사 전개 과정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동독사를 그만큼 변화가 없었던 정적인 역사로 이해함을 읽을 수 있다. 그 바탕에는 각 시기마다의 변화보다는 몇 가지 특징으로 동독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전체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동독이 어떻게 40여 년을 존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관

심보다는, 출발부터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권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표 4〉 동독사 시기 구분과 서술의 관점

교과서	동독사 시기 구분(■)과 서술관점(○)
TB1	<p>■명확하게 시기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독 1949~1989: 국가와 경제” 중단원 아래 베를린 장벽 건설을 기준으로 “새 시스템의 구성과 확대”와 “동독의 안정과 몰락”의 중단원으로 나누고 있음</p> <p>○소단원의 제목이 잘 보여주듯이 동독의 역사를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베를린 장벽 건설을 통해 잠정적으로 체제가 안정되었다가, 이후 몰락하는 역사로 이해하고 있음</p> <p>-단원의 개관에서 “동독-독일의 대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동독사 전체를 개관하고 있는데, 소련에 종속되어 있었고, 여러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국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p.73)</p> <p>-어떤 시기에도 주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독재(p.74);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에게 올브리히트 퇴진을 청원하는 편지(pp.107~108); 소련 종속적 위성국가(p.217)</p>
TB2	<p>■서독사의 일부로 동독사를 다루고 있는 까닭에 동독사 자체의 시기를 구분하지 않음</p> <p>○동독,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없이 건국(p.246); 동독 붕괴의 원인을 2쪽에 걸쳐 자세하게 서술(pp.269~271)</p>
TB3	<p>■명확한 시기 구분을 하지 않음. 전체 전개 과정을 계획적인 사회주의 건설과 동방진영통합, 체제에 대한 도전, 평화혁명과 통일 투쟁으로 구성</p> <p>○동독정부는 결코 전체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1953.6.17.의 봉기와 베를린 장벽 건설이 잘 보여줌(p.390); 베를린 장벽 건설로 동독 탈출 주민은 줄었지만,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은 여전히 낮음; 거대한 선전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적은 미흡하였고, 낮은 생활수준을 여성동등권에 대한 캠페인, 체제순응적인 교육, 스포츠 참여, 대중조직 활동 참여 등으로 해소하려 했지만 성공 못함(p.414); 여성 동등권을 선전했지만 여성을 생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여성에 호의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남성과 동등한 수입도 얻지 못함(p.415); 주민감시와</p>

	<p>야당 세력 억압, 그에 따라 주민들은 사적인 것으로 후퇴하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하위문화 형성으로 대응(p.415)</p> <p>-양국을 대비하는 서술은 서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동독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상들을 열거하고 정권의 노력들이 성과가 없었다는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음</p>
TB4	<p>■“소련 점령지역에서 동독으로(1945~1949)”, “사회주의체제(1949~1971)”, “공고화와 몰락(1971~1990)</p> <p>○ 동독 건국에서 붕괴까지 어떤 정치적 전개과정이 있었는가하는 관점에서 역사적 전개 과정의 진술에 집중(p.258). 그러나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 또 개관부분에서 서독과 동독은 각각 서방과 동방 진영으로 통합되었다고 서술하고, 그에 따라 서독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를 누리는데 비해, 동독 사람들은 1989년 국경이 개방되기까지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았다고 서술(p.250)</p>
TB5	<p>■별도의 시기 구분이 없음.</p> <p>○ 일종의 중단원 격인 “역사에 대한 질문”이라는 코너에서 “동독-Mfs의 국가?”라는 제목 아래 SED의 권력독점과 Mfs의 주민감시 및 통제 기능을 2쪽 이상 자세하게 서술(pp.163~165). 동독이 정당성이 없는 국가임을 드러내고 있음.</p> <p>-동독의 존속은 전후 독일사의 특별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동유럽에서의 소련 지배하의 사회주의의 전초기지 역할 때문(p.171)</p> <p>-동독 시스템은 소련에 의해 정착됨. 동독은 소련의 보호 아래 있었고, 그런 소련의 보호가 사라지자 국가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음(p.183)</p>
TB6	<p>■별도의 시기 구분이 없음.</p> <p>○ 단락별 표제어를 중심으로 보면 사회주의 확산과 SED의 권력 유지 관점에서 동독사를 서술하고 있음.</p>
TB7	<p>■별도의 시기구분 없이 동·서독 분단사 전체를 1949~1961, 1961~1989로 구분하고 있음.</p> <p>○ 서독이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에 기반하고 있는 데 비해 동독의 공산주의 독재는 붕괴 시까지 정치적 정당성 부재(p.529).</p> <p>-체제대결(1961~1989)시기에는 서독과 동독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표제가 서독은 “행운의 민주주의”로 동독은 “독재의 좌절”로 붙여져 있음. 결국 정당성도 없었고, 체제대결에서 패배한 국가라는 시각에서 동독사 서술.</p> <p>-여러 곳에서 서독에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있음을 서술(p.538, 539)</p>
TB8	<p>■별도의 시기구분이 없음. 그런데 “두 국가-하나의 민족”이라는 대단원 아래 “동독: 일당독재로서의 인민민주주의”, “1961 베를린 장벽 건</p>

	<p>설”, “호네커 시대”, “동독의 외적 평가절상과 내적 위기”를 각각 하나의 중단원으로 나누어 서술.</p> <p>○ 서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독은 자유선거라는 정당성을 상실한 국가(p.66); 인민민주주의는 일당이 독재하는 체제임을 중단원 제목이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p.88); 1953.6.17. 인민봉기는 SED 정권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함을 보여줌(p.89)</p>
TB9	<p>■ “사회주의 건설과 내적 위기(1949~1961)”, “개혁과 내적 안정(1962~1971)”,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정(1971~1975)”, “체제위기와 몰락(1975~1989)”</p> <p>○ 소련 종속성(p.309, 354, 355, 377, 378); 1989년 동독인들의 시위 때 정치적 협상을 지지하는 온건파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p.391)</p>

3) 서술 영역과 강조하는 주제

아래의 <표 5>에서 굵은 글씨체는 한 쪽 이상의 분량을 배당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표의 내용을 보면 교과서들이 다루는 영역은 압도적으로 정치 분야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나 일상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다. 정치영역에서 서술하고 있는 주제들은 SED 창당, 탈나치화, 소련식 정당구조 형성, 투표방식, 사법부 종속성, 대중조직, 지배이데올로기, MfS, 동독 건국,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스탈린 우상화, 1953.6.17. 인민봉기, 주민탈출, 베를린 장벽 건설, 1960년대 개혁, 1960년대 내정 안정화, 동독의 국가정체성, 동독의 통일정책(민족문제 이해), 동독 헌법, 호네커로의 정권교체, 체제 공고화, 야당 탄압, KSZE가입의 영향, 1980년대 야당 형성,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 개혁의 영향, SED 내부개혁세력, ‘1989/90 평화혁명’, 붕괴 원인 등이다. 이 중 많은 교과서들이 1쪽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정당구조, 1953.6.17. 인민봉기, 베를린 장벽 건설, MfS, ‘1989/90 평화혁명’ 등이다. 이 중 ‘1989/90 평화혁명’은 여러 교과서가 수 쪽에서 10쪽까지 지면을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주제들은 ‘평화혁명’을 제외하고는

건국 초기 특징들이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체제가 안정되면서 시도한 1960년대 개혁정책에 대해 TB1은 1쪽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TB6도 1/3쪽 정도의 지면에 소개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소유관계 변화, 사회주의 건설, 국유화, 계획경제, 1960년대 경제정책(NÖSPL), 사회와 경제정책의 통일, 결핍경제, 소련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심화, 외국의 신용지원, 국가파산 위기, 1970-80년대 동독 경제성장률, 1980년대 경제 통계 등이다. 이 중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계획경제다.

사회분야에서는 여성취업, 남녀평등권, 교육정책, 청소년단체, 사회 불평등, 환경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 몇 권의 교과서(TB3, 8, 9)는 여성문제에 대해 1쪽 이상의 지면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교육정책을 한 쪽 전체에 걸쳐 서술하는 교과서도 있다(TB1). 일상과 관련해서는 틈새 사회, 소비생활의 궁핍함, 여행, 여성의 삶 등을 다루고 있다. 교과서만 보면 생활의 궁핍함과 사적인 것으로의 탈출이 동독인들의 일상을 특징 짓고 있다.

〈표 5〉 동독사 서술 영역과 강조하는 주제

교과서	동독사 서술 영역, 강조하는 주제
TB1	<p>■정치: 사회주의통일당(SED) 권력독점의 소련식 정치권력 형성, 사법부의 당 권력에의 종속성, ‘국가안전부(Mf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10쪽), 동방진영의 일부가 됨, 1953 위기, 소련이 지시한 신노선, 노동자봉기가 인민봉기로,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완성, 내정 안정화, 만회 없이 추월, 두 번째 베를린 위기 1958~1961, 서독으로의 탈출민 통계, 베를린 장벽 건설, 동독의 국가정체성, 국제적 인정 노력, 1960년대 개혁, 사회주의 모델국가로서의 동독, 울브리히(Ulbricht) 퇴진, 호네커(Honecker) 시대 개막, 현실사회주의, 1970년대 법률 개정, ‘유럽 안전과 공동협력회의(KSZE)’ 가입을 통한 서방국가들에 대한 개방, 1968년 동독 헌법,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에게 울브리히 퇴진을 청원하는 편지, 사회정책과 SED 지배의 정당성, 국경보장을 위한 대책, KSZE 최종안에 대한 동독 외무부의 평가, 1989/1990 평화혁명(7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계획적인 사회주의 건설, 동독 경제의 몰락, 경제개혁 대신 선전, 지불불능 상태의 동독경제, 경제와 사회정책 통일, ■사회: 교육정책 ■일상: 일상생활의 궁핍함
T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동독건국,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1953.6.17. 봉기, 베를린 장벽 건설, 동독의 통일정책(2국가 이론), 현실사회주의, 1989 독일 혁명, 동독붕괴원인, 지배이데올로기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 계획경제, 국가의 무역독점 ■사회: 1980년대 경제상황 ■일상: 서독제품에 대한 갈망, 일상적인 궁핍함과 경제적 의욕상실
T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SED 지배권 강화,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1953.6.17. 봉기, 1960/61 위기와 베를린 장벽 건설, 사회주의 건설, MfS와 야당 탄압, 1989/90 평화혁명(3쪽) ■경제: 국유화와 계획경제 ■사회: 여성정책, ■일상: 사적인 것으로의 후퇴, 청소년 생활상
T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정치체제형성, 동독건국,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정당구조, MfS, 호네커로의 권력 교체, 주민 생활수준 향상 정책, 1989 SED정권 붕괴 ■경제: 계획경제 도입 ■사회: 자유독일청소년단(FDJ), 청소년인정행사(Jugendweihe), 남녀동등권 ■일상: 소비물자 부족, 사적 틈새 공간
TB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SED 창당, 투표방식, 사회주의 건설, 1953.6.17. 베를린 장벽 건설(2쪽), 동독헌법, MfS, SED 권력독점, 동독의 야당, 평화혁명(3쪽), 붕괴의 원인(3쪽) ■경제: 토지 소유관계 변화, 재정문제 심화
TB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소련점령지역에서의 새 출발과 탈나치화, 정당구조, 강요된 SED 창당, 새로운 유형의 정당 SED, 1946년 소련 점령지역 선거 결과, 동독 건국, 1953년 신 노선, 베를린 장벽 건설, 사회구조, 정당구조 개편, 당 권력중속적인 사법부, 비밀경찰의 편재(遍在), 동방진영통합, 1953년 인민 봉기(2쪽), 주민 탈출 증가, 동독 탈출민 통계, 베를린 장벽 건설, 울브리히트 시기의 체제 공고화, 야당세력 탄압, 1989/1990 평화혁명(2쪽) ■경제: 소련점령지역에서의 경제변혁, 계획적인 사회주의 건설 ■일상: 틈새사회

<p>TB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탈나치화, 정당구조개편, SED 창당, 동독 건국, 동독의 국가적 성격, MfS, 마르크스-레닌주의, 1953.6.17 인민봉기,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베를린 장벽 건설, 헌법상의 국가와 정당, 주민 감시체제, 투표 방식, 야당의 형성과 가능성, 체제위기와 외교적 고립, 동독 탈출과 출국 신청, 붕괴원인(2쪽), 평화혁명(3쪽) ■경제: 계획경제(2쪽), 1960년대 경제정책(NÖSPL), 사회와 경제정책의 통일, 결핍경제 ■사회: 동독의 사회 불평등, 남녀동등권, 여성 취업, 여성정책, 교육정책 ■일상: 생활수준
<p>TB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탈나치화, 토지개혁, 학교개혁, 산업개혁, 정당설립, SED창당, 초기 선거 결과, 인민민주주의, 블록정치, '특별한 독일의 길' 이론가 액커만(Ackermann) 자기비판, 동독 국가(國歌), 동독 건국, 1949년 동독 헌법, 새로운 유형의 당, 동독의 국가구조와 SED 지배, 스탈린 우상화, 소련식 모델에 따른 사회주의 건설, 1953. 6. 17 봉기(2쪽), 동독 정치체제, 사회주의 사회의 이론적 전개 과정, 1953년 동독 상황, 동독의 야당, 1961 베를린 장벽 건설(6쪽), 공동의 평화노력, 개혁대신 탄압, 사회주의체제 속의 교회, 사회적 동요의 확산과 야당, MfS의 탄압, 평화혁명(10쪽) ■경제: 1960년대 경제적 안정화, 경제와 사회정책의 통일, 콤비나트 건설, 소련과의 친선과 원조조약으로 소련에의 경제적 종속성 심화, 외국의 신용지원, 국가파산위기, 1970~80년대 동독 경제성장률, 1980년대 경제통계 ■사회: 여성 취업, 환경파괴, 청소년 인정행사(Jugendweihe) ■일상: 사적 틈새공간으로의 탈출, 소비재 부족
<p>TB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SED 창당, 동독 건국, 탈나치화, 동독헌법,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체제(2쪽), 투표방식, 대중조직, MfS(7쪽), 동방진영으로의 통합, 2차 당대회(1952), 불만과 탈출, 1953.6.17 인민봉기, 베를린 장벽 건설, 울브리히트 퇴진, 호네커 선출, 국내정치적 자유화, KSZE의 국내정치에의 영향, 탄압대책 확대, 1980년대 중반 소련 개혁 정책의 영향, 동독 헌법 1968, 1974, 동독의 민족담론, 탈출과 이주, 야당세력, SED 내부의 개혁세력, 1989/90 혁명(10쪽) ■경제: 계획경제(3쪽), 5개년 계획, 과학-기술혁명, 계획과 지도 새로운 경제 시스템(1963), 경제와 사회정책의 통일,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문제 ■사회: 교육개혁(1965), 여성정책 ■일상: 틈새사회, 소비생활(4쪽), 여행, 여성의 삶(2쪽)

4) 역사적 성과와 사회적 업적 인정

동독인들은 전후 복구과정에서 서독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공적으로 복구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어느 교과서도 이런 업적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에 따라서 동구 공산권 최고의 경제수준, 스포츠에서의 성공, 사회정책에서의 성공, 여성정책의 성과, 교육정책의 현대성, 노동권 보장, ‘1989/90 평화혁명’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한계도 지적하는 교과서도 있다(TB2, 3). “평화혁명” 성취를 제외하고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TB5). 동독인들의 역사적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이뤄낸 것이라 하겠다. 교과서들은 분량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 역사적 사실을—일부 예외가 있지만—1쪽 이상을 지면을 배당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동독인들의 중요한 역사적 업적이라는 측면을 기술하는 교과서는 없다. 전부 ‘평화혁명’ 전개 과정의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Ⅱ장 2절에서 우려했던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업적의 인정이 독재를 미화하거나 주변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거둬들여도 될 것 같다.

〈표 6〉 역사적 성과와 사회적 업적 인정

교과서	역사적 성과와 사회적 업적 인정
T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서독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한 결과 동유럽권 최고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됨. 여성 지원 정책과 교육정책의 현대성. 노동권 보장(p.73); 생활수준과 스포츠의 성공으로 사회주의 모델국가로 자부(p.100); 1970년대 경제와 사회정책 성과(p.102) ○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7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이 사회 정책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지불능력 부족(p.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권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했지만 공급 부족과 물건구입을 위한 긴 대기줄이 함께 했고, 일부 여성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지적하고 있음(pp.414~415) ○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3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에서의 성공(pp.262~263) ○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서술하고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음
TB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국가적 업적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 서술 찾기 어려움. ○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3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 두 번째의 경제 권력과 스포츠에서의 성공(p.448); 동독의 생활수준은 공산국가 중 최고수준(p.450) ○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2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독보다 나은 여성의 취업률과 고위직 비율 통계자료(p.548) ○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3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군별 여성 취업비율(p.141) ○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10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TB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국가적 업적으로 인정할만한 내용 서술 찾기 어려움 ○ 1989/90년의 평화혁명을 10쪽 가량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역사적 전개 과정 위주의 객관적 서술

4. 동·서독 비교

각 교과서들이 동독과 서독을 비교하는 주제들과 어떤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을 보면 비교하는 분야는 주로 경제와 여성문제를 알 수 있다. 다수의 교과서가 서독에 호

의적인 자료나 진술을 하고 있는데, TB7과 8처럼 동독에 우호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비교하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교과서들도 있다. TB9는 소비생활과 경제체제의 관련성을 성찰하게 하거나 소비영역의 차이를 통해 양국의 소비생활의 특징을 파악하게 하는 좋은 비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B1은 동독 자체 자료를 제시하고, 그 논리를 평가해보라는 토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해석되지 않은 1차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동독의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하라는 접근 방식은 서독식 해석이 가미된 진술보다 진일보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TB2는 마치 비웃듯이 동독이 유일하게 앞서 있는 분야는 환경오염과 중독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교과서로는 부적절한 서술이라 하겠다. TB7은 소단원의 제목을 서독에 대해서는 “행운의 민주주의”를, 동독에 대해서는 “독재의 좌절”이라 붙임으로써, 서독이 체제대결에서 승리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표 7〉 동독과 서독 비교 주제와 관점

교과서	동독과 서독 비교 주제와 관점
T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독의 백과사전에 실린 서독과 동독에 대한 설명을 제시. 이를 토대로 서독 건국에 대한 서술 내용의 타당성, 동독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설명. 제국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어떤 의도에서 서독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설명,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동독의 존속을 보장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것이 옳은 평가인지 토론하라는 과제 제시(p.106) -동독이 서독과 동독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그런 시각의 허구성을 알게 할 목적의 과제들
T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독 당국이 공식적으로 체제대결을 선전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격차가 컸음.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서 일부지역에서는 유해물질 오염이 서독의 10배 이상이라고 서술(p.270) -환경보존 대책도 시급했지만, 재정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음. 동독이 유일하게 앞서 있는 분야는 환경오염과 중독이라고 비꼬듯이 서술(p.270)
T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인 비교는 없음. 토론주제로 “서독과 동독의 여성상황이 어떤 요소들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서술하라”, “여성의 동등권 측면에서 성과와 제한점을 설명하라”,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여성의 상황이 어떻

	<p>게 개선될 수 있는지 토론하라”라는 과제를 제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에 관한 공식적인 진술을 비교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론하라는 과제 제시(p.422)</p> <p>■양국 건국 이후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주로 1970년대 이후- 직면하게 된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대비하여 서술. 서독에 대해서는 정치적 참여, 테러리즘, 경제위기, 여성문제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pp.411~414). 이에 비해, 동독은 주민들의 낮은 체제수용성, “현실 사회주의 사회”의 공식적 묘사와 실제와의 큰 간격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선전, 교육, 대중조직 참여를 통해 해소하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여성정책도 일면 진보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함. 또 MfS를 통한 주민 감시와 야당 억압에 따라 주민들은 사적인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청소년들은 자체적인 하위문화를 형성했다고 서술(pp.414~415)</p>
TB4	<p>■특정 주제에 대해 동독과 서독을 직접 비교하는 내용은 없음. 단지 중단원 개관 부분에서 서독과 동독은 각각 서방과 동방진영으로 통합되었다고 서술하고, 서독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를 누리는데 비해, 동독 사람들은 1989년 국경이 개방되기까지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았다고 기술(p.250)</p>
TB5	<p>■동·서독을 직접 비교하는 서술 없음.</p>
TB6	<p>■동·서독을 직접 비교하는 서술 없음.</p>
TB7	<p>■1950년대 경제상황을 직접 비교. 동독은 경제상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50~75% 수준(p.538)</p> <p>■TV, 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 소유 비율 비교(p.542) -생활가전제품 소유 비율은 비슷하거나 동독이 오히려 더 나은 상태인데, 서독은 1962년 동독은 1970년으로 비교 연도가 다름.</p> <p>■여성취업률과 자격획득 수준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여성의 취업률과 직업적 상승 기회를 비교하라는 토론과제를 내고 있음(p.548). -여성취업률과 고위직의 여성비율이 동독에 유리한 자료들임.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동독이 진보적이었음을 보여주려고 한 과제임.</p> <p>■1949-1961은 분단이 심화되는 시기로 보고 “정치 갈등”, “경제 질서와 경제발전”, “사회구조와 남녀관계”라는 소단원에서 각각 서독과 동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양국이 대비되도록 서술하고 있음. 1961~1989년 체제대결 시기에는 서독과 동독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행운의 민주주의와 독재의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체제대결의 승자가 서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리고 체제경쟁에서 서독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고 기술하기도 함(p.529).</p>

<p>TB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대 경제상황 비교: 생산성, 임금, 연금, 주택건설(p.139) -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1985년 구매력 비교(p.140) -식료품의 일부와 서비스, 주택은 동독이 구매에 필요한 시간이 짧으며, 산업생산품에 대해서는 서독인들의 구매력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자료 ■각종 직업군에서의 여성 비율(p.141) -동독이 서독에 비해 우월한 자료
<p>TB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소비세계를 자료를 기초로 경제체제가 양국의 소비욕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설명하는 질문과 양국 소비사회를 각인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질문 제시(p.393) -양국 소비세계의 차이를 경제체제와 관련시켜 이해하게 하는 질문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성 있는 소비재 소유 비율(p.396) -서독 우위의 소비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자료 ■동독과 서독의 소비영역의 비율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p.396) -서독은 집세에, 동독은 식료품비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소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로서 양국의 소비생활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여성정책과 여성의 삶 비교: 여성정책과 삶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고, 양국 여성의 삶이 정치·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양국 여성의 생애와 내적태도의 공통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지 비교하라는 과제 제시(p.403) -양국 여성의 삶의 차이와 공통점을 이해하게 하는 질문

5. 동·서독사 서술 분량

분석한 교과서들의 동독사와 서독사에 대한 서술 분량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공동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분단 이전의 시기와 독일 통일 과정과 이후의 역사를, 동·서독 상호관계사는 양국의 대립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서술을 뜻한다. 서독사는 분단 이전 서방국가 점령시기와 서독 건국이후부터 통일 이전까지를, 동독사는 소련군 점령시기부터 동독건국, 그리고 이후 '1989/90 평화혁명'시기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표 8〉 동독과 서독사 서술 분량

(단위: 쪽)

교과서	공동의 역사	서독사	동독사	동·서독 상호관계사
TB1	22	41	56	2
TB2	18	11	7	3
TB3	22	26	20	7
TB4	12	9	8	1
TB5	23	18	24	2
TB6	28	27	27	2
TB7	18	27	27	4
TB8	60	59	51	2
TB9	51	45	50	8

〈표 8〉을 보면 교과서마다 1945년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분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은 교과서는 TB4로 총 30장, 가장 많은 교과서는 TB8로 170장에 달한다. 이 중 서독사를 더 많이 다루는 교과서는 4권(TB2, 3, 4, 8)이다. 반대로 동독사를 더 많이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3권(TB1, 5, 9)이다. 양국의 역사를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는 교과서도 2권(TB6, 7)이 있다. TB1은 동독사를 서독사에 비해 15장 정도 더 많이 다루고 있고, 반대로 TB8은 동독사에 비해 서독사를 8장 정도 더 많이 서술하고 있다. 나머지 서술 분량 차이가 있는 교과서들은 1장(TB4)부터 6장(TB3, 5) 정도이다. 이를 보면 서독사만 일방적으로 많이 다루고 동독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IV. 내적통일 관점에서 본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 평가

9권의 교과서 분석 결과 동-서 갈등이라는 분단사의 배경과 소련의 영향은 모든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다. 동·서독의 대립,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들이, 양국 관계가 동독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1권을 제외하고 모두 다루고 있다. 분단사에서 동독사는 서독사와 거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동독사와 서독사를 분리해서 서술하는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양국은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추구한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동독사는 시기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대부분 동독은 출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독재국가였고, 그래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동독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서술 내용을 보면 정치영역에 대한 서술이 압도적이고, 정치구조, 1953.6.17. 인민봉기, 베를린 장벽 건설, 국가안전부(MfS), '1989/90 평화혁명'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1989/90 평화혁명'에 대해서는 수 쪽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 동독의 역사적 성과와 업적에 대한 인정에 인색하며, 양국의 비교는 경제와 여성문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다수가 서독에 호의적인 자료나 진술들이다. 서술 분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서독을 많이 서술하거나 동독을 더 많이 서술하는 교과서들이 있었지만, 동독이나 서독사의 한쪽만 일방적으로 많이 서술하는 교과서는 없다.

내적통일의 관점에서 이러한 교과서들을 평가해보면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 패전 이후의 분단의 역사를 전체 독일사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길을 가다가 한쪽은 성공하고 다른 한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로 바라보고 있다. 명시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독은 탄생되어서는 안 되었던, 정당성을

상실한 독재국가라는 느낌을 준다. 거대자본과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택한 사람들이 나치독일과는 다른 사회를 건설하려다가 실패한 시도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독이 사회주의통일당(SED)이 권력을 독점한 사회주의 독재국가였다는 사실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 교과서들이 동독사를 시기 구분 없이 몇 가지 주요 특징으로 설명하려 한 것은 모든 것을 당이 장악하고 있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동독이 생각보다 다면적이었다는 통일 이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 영역에 교과서 서술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 보이는 독재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나, 공식사회 이외에 제2의 사회가 존재했고 그곳에 동독인들의 연대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 역시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동독이 민주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고, 비효율적인 계획경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 권의 교과서는 명시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동독사회의 성과와 업적을 인정하는 데에 인색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40여 년을 존속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일부 교과서에 따르면 그것이 소련이라는 거대 권력의 지원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다수 주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체제가 40여 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외부의 강력한 세력의 지원 때문이었고, 그 세력의 지지가 사라지는 순간 동독 사회주의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사회 체제에 충실하면서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수많은 동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통일 독일의 연방의회 의장이었던 볼프강 티어제(Wolfgang Thierse)는 1998년 10월 의회개막연설에서 잘못된 체제 속의 올바른 삶이 존재했고 실패한

체제와 그 속에 살았던, 그리고 모두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⁹⁾ 동독인들을 배제한 방식으로 동독사를 이해하는 한 동독사회를 살았던 동독인들의 소외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내적통일 문제 해결은 동독 사회의 체험을 갖지 못한 세대가 압도적인 다수가 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V. 맺음말

독일 통일은 정치적·경제적 통합은 성공적으로 이뤄낸 데 비해 사회·심리적 통합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적통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적통일 과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동독사에 대한 이해문제이다. 본 논문은 내적통일 관점에서 학교 역사 교육의 동독사 이해교육을 평가하고자 했다.

교과서 분석 결과 동독사를 서독사의 부속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양국에 대한 서술 분량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도 없었다. 그러나 독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독재체제 안에서도 연대의식을 갖고 나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동독을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하는 경향이 강했고, 동독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적 업적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도 소극적이었다. 이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많은 동독인들의 삶을 소외시키는 접근방법이다. 무엇이 40여 년의 일당독재를 가능하게 했고, 그 속에서 동독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가 드러나는 동독사 서술이 될 때 내적통일은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²⁹⁾ Fritz Vilmar Hg., *Zehn Jahre Vereinigungspolitik, Kritische Bilanz und humane Alternativen*, (Berlin: Trafo, 2000), p.235.

본 연구결과는 한국 통일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우선 세습적 독재체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에서는 자신이 그런 체제에 살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고민하고 토론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통일교육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을 성취했을 때, 독일처럼 내적통일 문제로 고심하는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가 타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

둘째, 한국의 통일교육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통일교육은 잘못된 체제에서의 삶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서술하거나 그런 인식을 갖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검토해야 한다. 즉 북한식 개인숭배와 일당독재체제하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체제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지 않은가 주의해야 한다. 체제와 삶을 전혀 별개로 이해하는 관점도 문제가 있지만, 체제와 삶을 동일시하는 시각도 북한인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견해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함께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해방 이후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이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분단사 전체에 대한 범사회적인 토론을 전개하고 합의된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통일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대로를 통일교육에 소개해서 학생들이든 성인학습자든 토론하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분석한 역사교과서

- TB1: Brückner, Dieter. *Buchners Kolleg Geschichte 12, Unterrichtswerk für gymnasiale Oberstufe*. Bamberg: C. C. Buchner, 2013.
- TB2: Schade, Peter and Stark, Hans-Joachim. *Geschichte in der Gegenwart, 10 Aufl.* Troisdorf: Bildungsverlag EINS, 2007.
- TB3: Hans-W. Ballhausen. *Geschichte und Geschehen II, Oberstufe, Ausg. A/B*. Leipzig; Stuttgart; Düsseldorf: Ernst Klett Schulbuchverlag, 2011.
- TB4: Bemlochner, Ludwig u. a.,. *Histoire/Geschichte, Europa und die Welt seit 1945*. Stuttgart;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verlag, 2006.
- TB5: Bahr, Frank u. a. *Horizonte III, Geschichte für Oberstufe, Von der Weimarer Republik bis zum Beginn des 21 Jahrhunderts*. Braunschweig: Westermann, 2006.
- TB6: Willert, Helmut u. a. *Kompendium Geschichte*. Bamberg: C.C. Buchner, 2008.
- TB7: Berg, Rudolf u.a. *Kursbuch Geschich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Neue Ausgabe Hessen*. Berlin: Cornelsen, 2012.
- TB8: Enger, Anton u. a.,. *Zeit für Geschichte, 12, Vom Europa der Nachkriegszeit zur Welt des 21 Jahrhunderts*. Brunachweig: Schroedel 2011.
- TB9: Austermann, Lambert u. a. *Zeiten und Menschen 2*. Paderborn: Schöningh 2006.

국문단행본

- 김누리 외. 『머릿속 장벽.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 파주: 한울, 2006.
- 김누리 외. 『변화를 통한 접근.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 통일 15년』. 파주: 한울, 2006.
- 김누리 외. 『나의 통일이야기. 동독 주민들이 말하는 독일 통일 15년』. 파주: 한울, 2006.
-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파주: 한울, 2010.
- 손기웅. 『독일 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서울: 통일교육원, 2010.
- 염돈재.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이기식. 『독일 통일 20년』. 서울: 고려대출판부, 2011

이해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서울: 푸른 숲, 2000.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서울: 동국대 출판부, 2009.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서울: 늘품플러스, 2011.

황의서. 『독일 통일 이야기』. 서울: 야스미디어, 2009

외국어단행본

Badstübner, Rolf. *DDR-gescheiterte Epochenalternative, Aufbruch in die Sack-gasse oder was sonst? Versuch einer Annäherung*. Hefte zur DDR- Geschichte, Heft 19. Berlin, 1994.

BMdI(Bundesministerium des Inneren).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0*. Berlin: BMdI, 2010.

BMFVBS(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Jahresbericht der Bunde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Berlin: BMFVBS, 2009.

Bohr, Kurt and Krause, Arno. *20 Jahre Deutsche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2 Aufl. Baden-Baden: Nomos, 2011.

Bollinger, Stefan u. a. Hg.,. *Zehn Jahre Vereinigungspolitik: Kritische Bilanz und humane Alternativen*. Berlin: Dr. W. Weist, 2000.

Brähler, Elmar & Mohr, Irina Hg.,. *20 Jahre Deutsche Einheit, Facetten einer-geteilten Wirklichkeit*. Gießen: Psychosozial Verlag, 2010.

Die Bundesregierung. *20 Jahre Deutsche Einheit*. Berlin, 2010.

Grünbaum, Robert. *Deutsche Einheit, Ein Überblick 1945 bis heute*, 2 Aufl. Berli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0.

Heitmeyer, Wilhelm. *Deutsch-deutsche Zuständ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9.

Jesse, Eckhard and Sandschneider, Eberhard Hg.,. *Neues Deutschland, Eine Bilanz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aden-Baden: Nomos, 2008.

Kleßmann, Christoph. *Zeitgeschichte in Deutschland nach Ende des Ost-West-Konflikts*. Essen: Klartext, 1998.

Kocka, Jürgen and Sabow, Martin. *Die doppelte Vergangenheit, Der gemeinsame Blick auf die geteilte Geschichte, Funkkolleg. deutschland im Umbruch, Studienbrief 2*. Tübingen: Deutsches Institut für Fernstudienforschung an der

- Universität Tübingen, 1997.
- Krause, Peter & Ostner, Ilona Hg., *Leb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Eine sozialwissenschaftliche Bilanz der deutschen Einheit 1990-2010*, Frankfurt and New York: Campus, 2010.
- Malzahn, Claus Ch, *Deutschland 2,0. Eine vorläufige Bilanz der Einheit*, München: dtv, 2010.
- Marcowitz, Reiner Hg., *Ein neues Deutschland? Eine deutsch-französische Bilanz*, München: Oldenbourg, 2010.
- Mayer, Tilman Hg., *20 Jahre Deutsche Einheit. Erfolge, Ambivalenzen, Problem*, Berlin: Dunker & Humblot, 2010.
- Meyers, Peter, *Friedrich II, von Preußen im Geschichtsbild der SBZ/DD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Geschichtswissenschaft und des Geschichtsunterrichts in der SBZ/DDR*, Braunschweig: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1983.
- Meuschel, Sigrid, *Legitimation und Parteiherrschaft. Zum Paradox von Stabilität und Revolution in der DDR 1945-1989*, Frankfurt: Suhrkamp, 1992.
- Müller, Uwe 저. 이봉기 역, 『대제양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서울: 문학세계사, 2006.
- Paqué, Karl-Heinz, *Die Bilanz. Eine wirtschaftliche Analyse de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0.
- Schroeder, Klaus, *Der SED-Staat. Partei, Staat und Gesellschaft 1949-1990*, München: Hanser, 1997.
- Schroeder, Klaus, *Die veränderte Republik*, Stamsried: Verlag Ernst Vögel, 2006.
- Sozialreport, *Spezielle Lebenslage. DDR-Vergangenheit und nationale Einheit aus der Sicht der Ostdeutschen, Sozialreport I Quartal, Neue Bundesländer*, 1995
- Thimme, Christian, *Geschichte in Lehrwerken Deutsch als Fremdsprache und Französisch als Fremdsprache für Erwachsene: einer deutsch — französischer Schulbuchvergleich*,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1996.
- Vilmar, Fritz Hg., *Zehn Jahre Vereinigungspolitik. Kritische Bilanz und humane Alternativen*, Berlin: Trafo, 2000.

국문논문

- 김상무. “통일독일의 동독사 이해와 동독사교육에 관한 논의가 남한의 북한 이해 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학연구』, 11권 2호 (2005). pp.29~43.
- 마르틴 자브르. “강제와 동의 - 동독.” 임지현 · 김용우 편. 『대중독재-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서울: 책세상, 2004. pp.265~281.
- 안두순. “독일 통일과 경제통합과정에 대한 평가: 한국 언론에 비친 통일방식과 통일 비용 논의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29권 3호 (2011). pp.1~26.
- 양민석 · 송태수. “독일 통일 20년- 사회 · 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 회과학논총』, 20권 4호 (2010). pp.3~34.
- 한운석. “독일 통일 20여 년의 성과와 한계.” 『역사와 담론』, 54집 (2009). pp.235~272.
- 황준성. “독일 통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와 시사점.” 『경상논총』, 25권 4호 (2007). pp.71~88.

외국어논문

- Bessel, Richard and Jessen, Ralph. “Einleitung. Die Grenzen der Diktatur.” In dies. Hg., *Die Grenzen der Diktatur. Staat und Gesellschaft in der DD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pp.7~23.
- de Maizière, Thomas. “Die deutsche Einheit als Erfolgsgeschichte.” In Dagmar Schipanski and Bernhard Vogel Hg., *Dreißig Thesen zur deutschen Einheit*, Herder Verlag, 2009. pp.241~249.
- Edinger, Michel and Hallermann, Andreas. “Wie im Westen, so im Osten? Einheitsbilanz und Demokratiebewertung 15 Jahre nach dem Ende der DDR.” In Jesse, Eckhard and Sandschneider, Eberhard Hg., *Neues Deutschland. Eine Bilanz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aden-Baden: Nomos, 2008. pp.55~82.
- Gabriel, Oscar. W.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In Oscar. W. Gabriel and Jürgen, W. Falter and Hans Rattinger Hg.,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Baden-Baden: Nomos, 2005. pp.385~423.
- Heitmeyer, Wilhelm. “Leben wir immer noch in zwei Gesellschaften? 20 Jahre Vereinigungsprozess und die Situation geruppenbezogener Menschenbefindlichkeit.” In Wilhelm Heitmeyer Hg., *Deutsch-deutsche Zustände. 20 Jahre nach dem Mauerfall*, Bonn: BzfpB, 2009. pp.13~49.

- Jarausch, Konrad H. "Die DDR denken. Narrative Strukturen und analytische Strategien." *Berliner Debatte Initial*, H. 4/5 (1995).
- Jarausch, Konrad H. "Realer Sozialismus als Fürsorgediktatur. Zur begrifflichem Einordnung der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0 (1998). pp.33~46.
- Kim, Yong-Min. "Deutsche Einheit als ein Muster- und Gegenbild für die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독일문학』, 120집 (2010). pp.309~324.
- Klein, Anna and Heitmeyer, Wilhelm. "Ost- und Westdeutsche Integrationsbi-lan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 (2009). pp.16~21.
- Kocka, Jürgen. "Ein deutscher Sonderweg. Überlegungen zur Geschichte der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 (1994). pp.34~45.
- Kollmorgen, Raj. "Diskurse der deutschen Einhei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30-31 (2010). pp.6~13.
- Krause, Peter and Ostner, Ilnoa. "Einleitung: Was zusammengehört..." In Dies. Hg.. *Leb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Eine sozialwissenschaftliche Bilanz der deutschen Einheit 1990~2010*. Frankfurt, New York: Campus, 2010. pp.11~36.
- Kuppe, Johannes. L. "Das vereinigte Deutschland nach Überwindung der Zwei-staatlichkeit." In Burrichter, Clemens, Nakath, Detlef and Stephan, Gerd-Rüdiger Hg.. *Deutsche Zeitgeschichte von 1945 bis 2000*. Berlin: Karl Dietz, 2006. pp.161~179.
- Ludwig, Udo. "21 und ein bisschen realistischer?" *Deutschland Archiv*, 9 (2011).
- Marienfeld, Wolfgang. "Schulbuchanalyse und Schulbuchrevision: zur Methoden-problematik." *Internationales Jahrbuch für Geschichts- und Geographieun-terricht*. Bd. XVII (1976). pp.47~58.
- Moon, Taewoon. "20 Jahre deutsche Einheit -Ungleichheit der politischen Kultur-." 『한독사회과학논총』, 21권 1호 (2011). pp.181~208.
- Paqué, Karl-Heinz. "Transformationspolitik in Ostdeutschalnd: ein Teilerfol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8 (2009). pp.22~27.
- Patzelt, Werner. J. "Politische Kultur und innere Einheit. Eine Bilanz der Wie-dervereinigung." In Eckhard Jesse and Eberhard Sandschneider Hg.. *Neues Deutschland. Eine Bilanz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aden-Baden: Nomos, 2008. pp.27~54.
- Pollack, Detlef. "Die konstitutive Widersprüchlichkeit der DDR. Oder: War die

- DDR-Gesellschaft homoge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24, no. 1 (1998), pp.110~131.
- Reißig, Rolf.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das Transformations- und Vereinigungsmodell und seine Ergebnisse." In Bahrman, Hans and Links, Christoph Hg., *Am Ziel vorbei, Deutsche Einheit — Eine Zwischenbilanz*, Berlin: Ch. Links, 2005, pp.293~316.
- Reißig, Rolf. "Von der privilegierten und blockierten zur zukunftsorientierte Transformatio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30-31 (2010), pp. 20~25.
- Schroeder, Klaus.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30-31 (2010), pp.13~19.
- Schroeder, Richard. "Deutsche Einheit — besser als ihr Ruf." *Die politische Meinung* Nr 458 (2008), pp,9~13.
- Sieder, Reinhard. "Sozialgeschichte auf dem Weg zu einer historischen Kulturwissenschaft?"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20, no. 3 (1994), pp.445~468.
- Spindeldreier, Uwe. "Die Chancen des Jubiläumjahres. Zwanzig Jahre deutsche Einheit." *Die politische Meinung*, Nr. 486 (Mai 2010), pp.63~68.
- Stöbel-Richter, Yve. u. a. "Was bleibt? Erinnerung, Wahrnehmung und Bewertung verschiedener Aspekte der deutschen Einheit im Jahr 20." In Elmar Brähler and Irina Mohr Hg., *20 Jahre Deutsche Einheit, Facetten einer geteilten Wirklichkeit*, Gießen: Psychosozial Verlag, 2010, pp.180~194.
- Veen, Hans-Joachim "Keine falschen Mythen: Wir haben die innere Einheit schon!" In Heiner Timmermann Hg., *Deutsche Fragen: Von der Teilung zur Einheit*, Berlin: Dunker & humblot, 2001, pp.677~685.
- Weiβ, Konrad. "Zwanzig Jahre danach,"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30-31 (2010), pp.3~5.

기타

- 설원태. "독일 통일 20주년. 대체로 성공적 평가 속에 주민통합은 진행형." 『경향신문』, 2010년 10월 2일.
- 조효제. "독일 통일 그 후의 이야기." 『한겨레신문』, 2011년 2월 26일.

Evaluation of education about history of East Germany in the perspective of inner unity after unification of Germany

Kim, Sang-Mu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Abstract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aspects, the unification of Germany is evaluated as successful.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nd mental integrations have not been enough fulfilled. Therefore, the problem of inner unity has been occurred.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inner unity is how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East Germany.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education about history of East Germany in the perspective of inner unity. At first, the discussions in history and other related majors on the history of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of Germany are summarized. On the basis of it, the analysis methods of textbooks are suggested. Then, nine textbooks for Gymnasium are analysed and its result is evaluated in the perspective of inner un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analysed textbooks is not sufficient to contribute to the inner unity of Germany.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 limitage of dictatorship and the life of people who lived in the society of dictatorship with each other in the spirit of coalition. They have strong tendencies to describe the history of East Germany from the viewpoint of collapsing inevitably. They are also passive to recognize

the historical achievements and results of East Germany. This is a approach method to neglect the people who pursued the meaning of life in the such a sociey of dictatorship.

Key Words: unification of Germany, inner unity, history of East Gerrmany, history education, history textbook

김상무(Kim, Sang-Mu)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직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학교통일교육 인식론: 분석과 계인』, 『진보의 다문화 읽기』(공저), 『주요 선진국의 대학 발전 동향. 이론과 실제』(공저), 『현대교육철학의 다양한 흐름II』(공역서) 등이 있으며,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종교 간 고통에 대한 해석학적 성찰과 유동적(liquid) 종교

김대식 (대구가톨릭대)

국문요약

종교의 근본 이상은 사랑과 평화이다. 그러나 그 바탕을 실현하지 못하고 외려 종교 간의 갈등, 폭력, 살해, 전쟁 등으로 그 진정한 정신을 왜곡, 퇴색시킨다면 인류에게 크나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고통이 아무리 물리적인 성격보다는 심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종교 간에서 빚어진 고통은 그 둘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종교적 고통의 현상을 인식하는 대중들은 종교 안에서 신의 현존보다는 신의 죽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종교의 역기능이다. 이에 대해 함석헌은 종교가 고착되거나 고체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종교 간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유동적 종교'를 역설한다. 거리와 간격의 폭력에서 벗어나 상호 침투와 스میم을 두려워하지 않는 액성화(liquidization)는 종교 간 평화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더불어 유동적 종교가 된다면 신의 죽음에서 신의 있음이라는 탈형이상학의 형이상학의 재건을 가능케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종교 간에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정서적 공감 공동체는 타자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이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에도 맞서지 않고 상호 행복을 생산하는 종교적 상상력을 공유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고통의 수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신앙적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언어, 반성의 언어로 보고 대중들이 종교 안에서 신의 현존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참의 종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고통, 신의 죽음, 편애, 평화, 정서적 유대, 공감, 유동적 종교, 점성적(점액질), 형이상학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각 각의 종교들은 그에 대한 깊은 인식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현재의 종교 간 공존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긍정적인 것인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서 각 종교의 내적인 삶과 교리로 연결하여 생각하면 표면상으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매우 배타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교리와 삶의 실천에 대해 존중하면서 겸허하게 자신의 종교를 객관화하기보다, 종교 그 자체에 갇혀서 타자의 종교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전통과 전통의 대결, 서로 다른 신앙 언어의 차이로 인한 편견 등은 각 종교가 가져야 할 종교의 개성화(individualization)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적어도 성숙한 종교라면 종교와 종교 사이의 고체적(solid) 상태를 유지하여 갈등과 폭력, 그리고 고통을 양산하기보다는 유동적(liquid)¹⁾ 상태를 가지고 서로 점액질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옳바르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종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언제 폭발할지 모를 종교적 폭력과 테러, 그리고 살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보면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통이나 신앙, 그리고 언어와 전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종교가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면, 그 차이들은 차후의 논의로 해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1) '유동적'(liquid)이라는 표현은 지그문트 바우만(Z. Bauman)의 사회학적 개념인 '리퀴드'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논의의 내용과 방향은 다르지만, 필자는 그의 저서 『리퀴드 러브』에서 말하는 유동적, 액상적, 액체적 인간상의 경계를 확장하여 종교의 문제를 비판·구성하려고 하였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인종, 환경, 원자력 등의 문제에 대해 해방적 관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다양한 지구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고, 해방적 이론을 공유해야만 한다. 비록 각 종교가 서로 다르고 유일하다 할지라도, 지구의 상황에 직면해서는 서로 함께(with) 할 수 있어야만 한다.²⁾ 따라서 필자는 먼저 종교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근본 관념을 함석헌을 통하여 추론하여 보고, 종교로 인한 갈등과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에 그에 따른 종교의 부정적 현상으로서 신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를 논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환대와 편애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종교적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법을 개진할 것이다.

II. 유동적(liquid) 종교를 위한 함석헌의 사유 방식

신앙의 근원적 토대, 근원적 신학, 혹은 근원적 철학은 ‘초월자의 일하심’이다. 초월자의 일하심의 현실로 인해서 교회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살아 있는 유기체적 존재와 생명체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함석헌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의 하느님은 영원히 일하는 하느님이요, 예수의 인생도 영원히 일하는 인생이다.”³⁾ 그리스도교의 인간학적 차원에서 인

2) Paul F. Knitter, “Toward a Liberation Theology of Religions”, John Hick and Paul F. Knitter, eds.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Toward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s* (Eugene, Oregon: Orbis Books,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7), pp.178~197.

3) 함석헌, 『함석헌 전집 19 -영원의 뱃길』 (서울: 한길사, 1984), p.30.

간의 활동과 삶의 신앙, 그리고 철학적 근간은 하느님의 자기 활동성과 예수의 자기 행위에 있다. 종교의 신앙적 지평은 생성하는 힘에 의해 자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운동하고 또 운동함으로써 순수성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한다. 교회 안에서, 나아가 삶과 자연, 우주 안에서 일하시는 초월자, 그리고 뜻이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이 현재한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현재성은 ‘뽑힌 자들’(에클레크토이스)이 되는 것이다. 뽑힘, 즉 선택은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뜻에 초점을 맞춘다. 뜻은 자기비판이면서, 자기의 본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뜻은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자 붙들어야 하는 척도이다. “한 번 뽑히고 날 때 나의 의미는 전체에 있게 된다. 저는 맛에 살지 않고 뜻에 살게 된다. 자기는 유한하면서 무한에 참여하게 된다. 비로소 윤리적이 되고 정신적이 된다. 이상에 살고 자기 초월을 하게 된다.”⁴⁾ 뜻을 자기 과업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한을 생각하고 윤리와 정신을 존재 의미의 근거로 보고 자기 초월을 가능케 하는 진리로 산다. 따라서 뜻의 발견은 행위의 자발성을 위한 필연이다. 종교의 토대는 뜻, 곧 바탈(바탕, 근본 본성)을 발견하여 그 뜻을 통하고 교감하며 나누는 데 있다.

함석헌에게 있어 바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 생성하는 마음, 사유의 본체이다. 이른바 유동적 종교, 유동적 철학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그는 인간을 ‘나그네’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의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정한다. 나그네야말로 종교적 삶에서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규정이요,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 나그네, 순례자로서 유동하는 존재는 자신의 행위 규범의 바탈을 찾아서 보편적 인간의 상호작용의 원칙으로 삼는다. 보편적 인간에게 유동하는 바탈은 고유하면서도 생성, 변화하기 때문에 소유적 실체가 아닌 공통된 실체요 통일된 실체를 가능케 하는

4) 위의 책, p.31.

근거다. 따라서 그것은 대상화할 수 없는 인간의 표현성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의 주체적 정신이다.

하지만 바탈은 타자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타자의 바탈로 흘러들어 가는 운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현재적 미메시스적 구원을 이룬다. 나그네의 바탈은 과거로 흘러들어갈 잠재성과 미래로 기투(企投)할 잠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그 실체의 성격상 타자와 함께 점액질적 구원을 무한한 형식으로 취한다. 그래서 함석헌은 “저를 해매는 존재로 보는 순간 돌아가 뵈 길(巡禮)이 시작되고 그 길은 마침내 아버지 품에 이르고야 만다. 그러므로 인생은 언제나 자기를 나그네요 해매는 자로 규정해 서만 제 본 바탈을 찾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 하늘은 바다를 버리고 오른 구름만이 볼 수 있다.”⁵⁾고 단언한다. 그뿐만 아니라 “삶이란 참말 거친 바다에 한바탕 배질이다.”⁶⁾ 여기에서 인간 실존의 유동성과 아방 가르드를 엿보게 된다. 종교가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한, 인생이란 바탈의 자기실현을 위협과 위기가 있음을 직시하게 해야 한다. 유동하는 삶, 유동으로 인한 바탈의 불확정성은 곧 자기 실존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형이상학을 염두에 두고 자기 주체 정신의 유동성과 화해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타자의 바탈 또한 형이상학적 지반 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동정과 미메시스를 인정하면서 타자의 종교적 모범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와 더불어 유동하는 인간, 유동하는 종교는 유동적인 인생의 아포리아에 대해 단지 종교제국주의적 접근을 경계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생이란 그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것이다. 아는 것이 물결의 세상뿐이다. 늘 동요하는 아우성치는 다 보아도 속을 알 수 없

5) 위의 책, p.34.

6) 위의 책, p.35.

는 이 바다뿐이다. 이는 불안한, 언제 빠져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뿐이다. ‘생’은 그 본질상 불안이요 위기다. 이 생이란 배탄 존재다.”⁷⁾ 인생의 아포리아는 자신의 의식을 도구화할 수 없도록 하고, 타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면서 주체는 스스로 자연과 화해하고, 타자와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성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에서 생의 유동성에 따른 불안과 위기는 타자의 이성과 종교로 편입되어 가고 종교적 자기 활동을 통해 이 사태 속에서 마비된 상호주관성을 회복한다. 상호주관성을 통한 유동성 회복의 합리적 원인은 생에 대한 자기의식과 자기 이해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그 자신의 종교 감각조차도 거기에서 깨어나게 마련이다. “인간이 지껄이는 입술을 다물게 되는 시간에 하느님은 입을 여시게 된다.”⁸⁾에서 말하는 인간의 발언 불가능성과 포기 가능성은 초월자의 발언의 현실성이 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신앙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신앙 본질이 고착화(solid)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액성으로서(써) 삶을 생산하는 존재가 단순히 유동적 존재의 유한한 종교가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유동하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없다. 오직 유동하는 주체인 초월자의 언표에 의해서만이 삶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저 실존의 현실성을 초월자에게만 둘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신앙이 들어갔다 하여 익일로 맘이 맑은 물 같아지는 것은 아니요 몸이 천사 같아지는 것도 아니다. 역시 언제나 변함없는 그 부족한 성격이요 그 고통의 사회생활이다. 그렇지만 안심하라는 것이다.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요 주인이 변했기 때문이다.”⁹⁾ 신앙이란 것도 유동(적)이다. 그것의 관계 맺음의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뿐이

7) 위의 책, p.37.

8) 위의 책, p.49.

9) 위의 책, p.51.

다. 실존은 의미로 산다. 그것도 유동하는 의미로 살아간다. 사태에 대해서 위협과 위기, 불안과 좌절이 다가오더라도 유동이 존재의 염려를 희망으로 바꾸고, 없음을 있음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신앙이 완성이나 완벽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유동하는 종교를 통해 종교 이전의 유동하지 않는 존재를 만나고 삶의 사태, 즉 고통의 현실을 이해하게 될 때 인간 실존은 변하게 된다. 따라서 실존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모티프를 종교가 제시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종교와 종교 사이의 상호 유동성을 통해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는, 나그네로서 바탈의 유동성이 실천적 물음의 본질 자리임을 알리고, 상호소통과 유동이 지니는 한계를 직시한다면, 자기 반성적 종교에서 신의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은 유동하는 인간, 유동하는 종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속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존의 근거가 되는 바탈이 고체화되거나 초월의 표상이 되는 종교가 고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종교는 리퀴드, 즉 유동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자기 합리화가 강하고 언표적 진리로 배타성을 띠는 종교는 자기 자신과 타자 모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감으로써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맨다. 종교의 유동하는 철학과 신앙은 유연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상호 침투와 상호 스میم을 존재 본연의 성격으로 받아들인다. 유동성의 종교는 새로운 (정신적) 건축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초월을 향한 건축은 또 하나의 과제일 수 있지만, 신의 있음이라는 형이상학의 토대가 될 것이다. 종교와 인생의 한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가 건설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Ⅲ. 종교 간 고통의 해석학적 의미와 종교의 아스퍼저 증후군

종교가 자신의 본질을 왜곡, 상실하고 전쟁, 테러, 살인, 폭력 등 부정적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종교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 사랑, 자비, 인(仁) 등의 긍정적 가치를 실현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종교의 역기능적인 측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서 인간과 종교는 고통으로 치닫는 역사를 경험하여 왔다. 지금도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과 폭력, 심지어 전쟁이 난무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존 헤이글(J. Heagle)이 말한 것처럼, 모두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혹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아픔, 상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종교적 고통의 현상을 단순히 신앙적으로 승화하기 위한 장치나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인데도, 자신의 신앙을 실험대 위에다 올려놓고 검증하려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통이라는 것을 “뭔가 잘못된 것이라거나 불의의 사건, 혹은 일종의 범죄로 여기는 감수성, 즉 고통을 고쳐야 할 무엇, 거부해야 할 무엇,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무엇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종교적인 관점이 그렇듯이 “고통을 희생에, 희생을 정신적 고향에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¹¹⁾

종교적 불화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등과 전쟁은 분명 비윤리적이며 반인간적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에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갖다

¹⁰⁾ J. Heagle, 이세형 옮김, 『고통과 악』 (서울: 생활성서, 2003), p.21.

¹¹⁾ Susan Sontag,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서울: 이후, 2004), pp.149~150.

들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살해, 타자 살해(altericide)¹²⁾에 대한 어떠한 종교적 해명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타자에게 고통을 주다 못해 타자 살해로 나아가는 것을, 초월자가 인간의 죽음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윤리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증가시키거나 자신들의 고통을 감소키기 위해서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뜻이다. 모든 윤리적 갈등은 결국 나의 행복 증진이나 고통 감소가 다른 사람의 행복 감소나 고통 증진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 행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나의 비도덕적 행위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¹³⁾ 자신의 종교가 중요하고 유일한 것처럼 타자의 종교 역시 동일하게 중요하고 유일하다는 인식을 가질 때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타자의 종교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또한 자신의 종교적 쾌락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타자의 종교적 쾌락을 앗아 가는 것 역시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이요, 온당치 못한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손봉호 교수가 거듭 말하고 있듯이, “쾌락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통은 당하는 것이다. 쾌락은 적극적으로 추구하나 고통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¹⁴⁾ 고통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은 즐기고 싶고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한다. 종교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종교적 기쁨과 쾌락은 향유하고 싶

12) M. Cronin, 이효석 옮김, 『팽창하는 세계』 (서울: 현암사, 2013), pp.88-95. 타자 살해는 반드시 상식적인 개념의 살인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자를 자기와 동일화, 획일화하여 타자 존재 양식의 특징을 완전히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확장된다.

13)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128, 132.

14) 위의 책, p.44.

은 능동적 감각이지만, 고통은 완전히 수동적인 것으로 그야말로 ‘당한다’는 인식과 지각, 그리고 감각이 강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고통은, 설령 그것을 신앙적 성숙과 일련의 자기 신앙의 실험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지 않으며 과정적, 결과적 성격을 띤 수동적 판단이나 인식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통이란 생활세계에서 공동체성을 띠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히브리 민족의 특수한 신앙고백이 아무리 공동체적인 성격, 즉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서 하느님의 아픔에 봉사하라”¹⁵⁾는 명령을 띠고 있다고는 하나, 그 역시 개별적 주체성의 독특한 고통을 대변할 뿐이지 인간 공동체 일반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고통에 있어서는 공동주체성이란 없고, 고통에 관한 한 생활세계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쁨의 공동체는 있을 수 있으나 고통의 공동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통은 외로이 당한다.”¹⁶⁾

나의 종교로 인해 타자의 종교가 고통을 받음으로써 고통의 공동체가 된다면, 자신의 종교는 적어도 스스로 신앙을 합리화하는 비윤리적인 종교임에 틀림이 없다. 타자의 살해를 즐거워하는 가학적 종교(sadistic religion)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악함에 대해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가 타인과 공유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사악함이 빚어낸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하고, 그런 자각을 넓혀나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인 듯하다. 이 세상에 온갖 악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매번 놀라는 사람, 인간이 얼마나 섬뜩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잔인한 해코지를 손수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환멸을 느끼는 사람은 도덕

15) 기다모리 가쥔(北森嘉藏), 박석규 옮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서울: 양서각, 1987), p.74.

16)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p.60.

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물이다.”¹⁷⁾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종교가 갖고 있는 보수성과 그로 인한 과격성에 있다. 보수적, 혹은 근본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종교 공동체일수록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는 배타성 때문에 타자의 살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한다. 그 수단이 폭력, 테러, 살해, 전쟁 등 어떠한 것이든 종교적 광기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견고히 한다. “아마도 미국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사실 그다지 새롭게도 않지만, 과격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이 흔히 미국이 지닌 보수적인 가치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것, 즉 종교 때문일 것이다.”¹⁸⁾ 우리나라의 종교적 과격성과 보수적인 가치가 어울리는 것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과격성이라는 것이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됨으로써 얼마나 편협하고 독선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¹⁹⁾

이러한 종교적 고통을 방과(放過)하고 말 것인가? 종교는 서로 공감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종교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호모엠포티쿠스). 그뿐만 아니라 타자의 종교는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종교적 무지에서 탈출하고 종교적 본질과 실천을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결속시키는 것은 감정이입, 즉 공감이다. 인간은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원하고, 소망하고, 생각하며, 움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공감이야말로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²⁰⁾ 타자의 종교를 자신과 자신의 종

17) Susan Sontag, 『타인의 고통』, p.166.

18) 위의 책, p.202.

19) 위의 책, p.203.

20) Arno Gruen, 조봉애 옮김,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서울: 창해, 2012),

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과 감정, 타자의 종교는 보편적인 인간의 종교이며 동시에 자신의 종교 역시 보편적인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가질 때 이해와 공감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타자의 종교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타자의 종교에 대해서 경직된(solid) 자세, 경계 태세를 갖추는 공격적 자세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자의 종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고통이 말 걸어오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 받는 인간은 나 바깥에 엄연히 서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객관적 혹은 이론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윤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나에게 요구하면서 나의 의무를 일깨우고 나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²¹⁾ 타자는 나에게 의무의 대상이자 돌봄의 대상이다. 타자의 종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외치고 독단과 독선, 그리고 경쟁과 몰이해를 통해서 고통을 남발하지 말라고 말한다. 종교의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자의 종교를 자신의 종교와 분리시키지 말고 현실적이고도 이상적인 전망, 신의 빛 아래에서 사랑의 명령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점이다. 그 무엇보다도 “고통 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인간으로, 고아와 과부의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 얼굴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항의하고 심판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얼굴이다. …… 그러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는 거리를 두고 관조할 수 없다.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것은 레비나스의 지적대로 다른 사람을 나의 의식 속에 의미로 환원시켜 나에게 종속시키는 것이다.”²²⁾

p.84, pp.84-89 참조.

21)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pp.204-205.

22) 위의 책, pp.203-204.

종교로 인한 상호 고통은 피해야 한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호 주관적인 얼굴을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갈등, 폭력, 테러, 살해, 전쟁 등의 부정적 수단을 통해서 타자를 소유하려고 한다고 해도 소유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화해와 일치의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지구적 실천의 동반자를 무한히 유보하고 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타자의 종교가 영원한 약자의 얼굴로 다가올 때 강제적, 강압적 수단으로 외면하면서 평화적 관계를 아예 체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에서 주이상스(Jouissance)로의 비약과 함께 원치 않는 고통의 영원한 제거를 위해서는,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배려, 타자의 고통은 곧 나의 쾌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타자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²³⁾

IV. 현대 종교에 나타난 ‘신 죽음’의 현상

하버마스(J. Habermas)는 종교의 사회적 통합력이 이성의 계몽 과정에서 이성의 능력과 이성의 비판정신에 의해서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한다.²⁴⁾ 인간은 이성의 자기비판 능력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초월자라는 매개자에 의해서 사회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성의 미몽으로부터 깨어나게 하고 해방하는 일련의 이성의 기획은 오늘날 종교로부터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인간 자신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²³⁾ 강영옥, 『고통, 신앙의 단초』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1999), pp.220~221.

²⁴⁾ J. Habermas, 이진우 옮김, “탈현대로의 진입: 전환점으로서의 니체,”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p.112~113.

수 있었다. 더군다나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은 신 관념과 제도, 신학에 의해서 지탱되던 근대를 뒤흔들고 이성을 가진 인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조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는 비단 신 죽음의 선언이 형이상학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전체 영역을 지배하던 의미 체계의 상실이라는 것을 적시한다.

“기독교의 신은 존재자와 인간의 본분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의 신’이란 동시에 ‘초감성적인 것’ 일반과 이에 대한 여러 해석들, 즉 존재자 전체 ‘위’에 내걸려지면서 존재자 전체에게 목적과 질서, 요컨대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과 ‘규범’, ‘원칙’과 ‘규칙’, ‘목표’와 ‘가치’를 대표하는 명칭이다. …… 니힐리즘이란 기독교적인 신의 죽음이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존재자 자체의 역사이다.”²⁵⁾

오늘날 이와 같은 신 죽음의 선언이 다시 한 번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종교가 자기 진정성(self-authenticity)을 상실하고 성직자의 자기 발언은 무책임성과 무도덕성을 드러내며, 희망과 행복의 절대성도 상품화되면서, 종교와 형식상 화해했던 인간의 정신이 비판능력으로 작용하여 현실 종교로부터 해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잘못 유포된 구원의 배타성과 폭력, 그리고 교리적 억압으로 편협한 종교적 실천과 맹목을 생산하는 현상도, 종교에 대한 급진적 계몽주의를 불가피하게 양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몽 과정이 계속되는 한 종교 안팎에서의 신 죽음의 선언은 니체의 근대적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의 식으로, 어쩌면 주체적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개혁적 모티프가 될 수도 있다.

신 죽음의 현상 혹은 신 죽음의 선언이 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담론이 된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니체의 근대 이후에 그리스도

²⁵⁾ M. Heidegger, 박찬국 옮김, 『니체와 니힐리즘』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p.19.

교적인 모든 규범, 가치, 판단 등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곳에 인간 이성
에 의한 삶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의 양상은 사뭇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근대적 이성 중심의 사유를 넘어서 이제는
대중들이 아예 종교 혹은 종교성에 대해 회의를 품고 대놓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대안으로 종교 감각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동시다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의 물꼬가 지
나친 페티시즘으로 이어져 있거나 사적 관심으로 흐르는 모호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교학이 난색을 표명한다. 가장 중요한 논의는 대중들
이 종교획일성 혹은 종교단일성, 나아가 종교가 자신의 종교만을 유일하
게 존재하거나 구원의 독보적인 지위를 점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
는 성숙성을 갖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종교가 맞고
있는 새로운 국면의 니힐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에 대한
하이데거의 생각을 더 들여본다면 다음과 같다.

“니힐리즘은 단지 기독교적인 신이 부인되고 기독교가 투쟁의 대상이 되
고 통상적인 무신론이 설파되는 곳에서 비로소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니체
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의 기독교란 복음과 바울의 서간이 편찬되기 얼
마 전에 한때 모범적으로 수행되었던 것과 같은 ‘기독교적 삶’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서구인과 그의 비본래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과 그것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기독교란 역사적·세계적 그리
고 정치적 현상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²⁶⁾

이러한 하이데거의 논의의 중심에는 바로 현대 사회의 종교의 종언,
즉 신의 죽음이라는 종말 현상이 있다고 본다. 풍부한 종교문화를 향유
하던 근현대의 한국 사회는 지금 종교 내외부의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서
서로 고통의 묵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건전한 종교

²⁶⁾ 위의 책, p.33.

문화를 통해 사회에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정신적인 소비를 가능케 하는 장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종교문화 자체가 그나마 '문화'적 성격으로서 지니는 가능성마저 사라질 것이다. 대중들로 하여금 정신문화를 통해서 향유하도록 만드는 종교가 되지 못한다면 디오니소스적 축제와 카타르시스적 구원의 햇빛은 고사하고 아폴론적 이념의 세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일조차도 불투명하게 될 것이 뻔하다.

형이상학의 종언은 결국 신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형이상학적 가치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은 그만큼 사회가 다변화되었고 정보의 습득이 빨라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대중들의 이성적 판단이 더 이상 초월이나 형이상학적 이념이 아닌 가상 혹은 초과실재(hyperreality)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이상학은 비판적 통찰과 의식의 초월을 지향하고 정신적 삶을 통해 현실과 대결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형이상학의 종언은 인간의 탈정신화, 탈영성화와 다르지 않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형이상학의 종말과 신의 죽음이라는 사건(Ereignis)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²⁷⁾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심지어 종교 간의 갈등과 폭력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형이상학의 종말을 선언하는 또 다른 행위이며, 동시에 종교 안에 신의 살아있음의 흔적을 말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니체가 붓다와 예수를 인류의 정신적 교사나 정신적 영웅이라고 칭송하면서 종교적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지성적 통합과 현실에 대한 존중이다. 종교가 영성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성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실감이 없는 종교, 현실을 등한히 하는 종교는 현대 사회에서 환대받기가 어렵다. 유독 그

27) 위의 책, p.20.

런 점에서, 니체가 비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교는 자신과 타자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증오한다(교만, 자유, 용기, 정신의 자유 등).²⁸⁾

그러한 종교적 태도나 행위는 결국 타자에 대하여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교와 종교 사이의 갈등 자체가 가지고 오는 물리적, 심리적 상처와 고통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들에게도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신의 죽음이라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것을 목도하는 대중들은 실제로 형이상학의 종언과 맞물린 신의 죽음이라는 선언을 반길 수가 있다. 타종교의 고통이 종교적 갈등과 폭력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은 그 사회, 특히 특정종교들 사이에 있는 선형적 구조에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이다. 종교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인류 전체의 상호이해와 평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와 같은 혁명적 이상이 폭력과 살인, 그리고 고통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될수록 종교로 인한 의식의 해방이나 정신의 승화는 불가능할 것이고, 형이상학으로의 복귀,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존중과 종교적 조화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V. 탈형이상학의 형이상학과 종교 평화를 위한 편애의 현상학

저명한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 Beck)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Elisabeth Beck-Gernsheim)은 “세계종교가 서로의 내부로 침투하고 대

²⁸⁾ Peter Berkowitz, *Nietzsche: The Ethics of An Immoralis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 Press, 1995), pp.109~110.

립하는 상태에서 일종의 다-유일신 착종 현상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각 집단마다 서로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집단별 신앙의 다수가 우리 한가운데에서 직접 대면한다. 이 과정은 많은 갈등을 수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까지도 수반한다.”²⁹⁾고 말했다. 종교 간에 폭력과 고통이 내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종교 간의 평화화가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결국 종교 간의 평화란 탈형이상학의 형이상학이 부활하는 난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중세의 형이상학적 위계질서나 지배구조를 답습하고 부활시키자는 의도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의 있음이라는 관계적 성찰의 내용과 윤리적 속고로서의 종교의 진정성을 일컫는 것이다. 게다가 종교 간의 상호 공통된 출발점은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공통된 인간성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인가 하는 해방과 실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는 세계를 파괴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세계를 변혁하는 데에 기여한다.³⁰⁾

그럼 왜 다시 형이상학으로의 전환을 피하는 것인가? 그것은 종교의 근본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조화의 형이상학적 가치들이 종교와 종교 사이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또한 그와 같은 형이상학적 가치들이 종교 간에 삶의 양식, 의사소통의 형식과 질료로 나타날 수 있다면, 거듭 이야기하는 신의 있음이라는 존재론적 선언도 공언(空言)이나 허언(虛言)이 아닌 설득력 있는 보편성으로 밝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종교평화학”³¹⁾이 가능할 수 있기

29) U. Beck and Elisabeth Beck-Gernsheim, 이재원·홍찬숙 옮김, 『장거리 사랑』 (서울: 새물결, 2012), p. 135.

30) Paul F. Knitter, 변선환 옮김, 『오직 예수이름으로만?』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6), pp.309~329.

31) 이찬수, “제3장 대동에서 만나는 종교와 평화,” 서울대학교평화인문학연구단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13), pp.111~143 참조.

위해서는 타자는 적도, 낯선 이방인도 아니라는³²⁾ 이성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타자가 역사적으로 결합이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것 역시 우리 자신과 동일한 역사적 함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사적 정신의 전승을 공유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시각으로 타자의 종교를 재단하고 소외시키려 한다면, 그들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부터 무방비로 배척됨으로써 극단의 폭력 기제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싶어진다. 자신의 종교적 가치나 명법(明法)으로 타자의 종교를 외면하고 그 고유의 전통을 파괴하는 것 또한 종교적 우월함에 빠져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객체화시키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가령 자신의 종교를 붕괴시키고 신앙의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보편적 이성은 종교 평화를 통해서 세계의 보편 정신 혹은 보편적 영성이 사물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비폭력 행위의 목표는 반대자들을 몰락시키거나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회심이 목표이다.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사용되는 비폭력적 방법들은, 비록 그러한 방법들이 별로 유효성이 발휘되지 않더라도, 유린당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높이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폭력의 진정한 능력은 그들이 반대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모습을 통해 더 크게 나타나야 한다. 비폭력은 박해자의 양심에 호소한다. 비폭력은 박해자의 과거와 현재의 죄성을 토대로 박해자를 대하기를 거절한다.”³³⁾

³²⁾ Whalen Lai and Michael von Brück, *Christianity and Buddhism, A Multicultural History of Their Dialogue*, trans. Phyllis Jestic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01), p.245.

³³⁾ John H. Yoder, 김복기 옮김, 『교회, 그 몸의 정치』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1), pp.104-105.

위와 같이 신학자 존 요더(John H. Yoder)가 말하는 종교 평화와 그것을 위한 비폭력의 핵심에는 인간 자신의 내면의 신앙적, 도덕적 보존, 즉 신앙의 내면화의 표출과 타자의 존중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종교의 주관적, 공동체적 내면화와 타자의 존엄성은 점성적 유동성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것은 적대 관계를 극복하는 종교적 반성과 실천의 형식이요, 신의 있음이라는 신앙 생산의 잠재력이자, 신의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유동적 종교, 혹은 유동적 철학은 획일화 부정과 차별의 부정을 위한 잠재성을 담보한다. 마치 액체에 있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및 인력의 거리가 고체보다는 강하고 기체보다는 약한 물질을 의미하듯이, 유동적 종교는 종교와 종교의 거리가 먼 듯하면서 가깝고 가까운 듯하면서 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동적 종교는 어떤 것(상태, 현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이를테면 하나의 종교 혹은 하나의 종교성이 다른 종교 혹은 종교성으로 변할 수 있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종교의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해서 나의 종교(성)를 타종교화하고, 타종교(성)를 나의 종교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유동적 종교 혹은 유동적 철학은 종교의 보이지 않는 중립지대, 종교의 완충지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를 억압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지평에서 자기 이해의 지식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타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방법이다. 또한 자신의 종교를 객관화하고 타종교를 계몽하겠다는 권력의지를 차단하여 스스로 고체화(solid), 고착화된 것은 물론 타종교를 고체화하는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다.

현대의 종교적 이성(성)은 타종교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도구적 이성이자 고체화된 이성이다. 이것은 본래 이성이 자기 이성을 범정에 세워 비판하고 성찰하는 자기비판적 성격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신의

종교를 합리화하고 반계몽주의적 이성비판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이성의 자기 성찰과 함께 타자 인식 또한 요원할 것이다. 역사 이래로 이성의 자기 초월을 향한 열망은 지속적으로 형이상학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우리는 유동적 종교를 통해서 형이상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시도, 그리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적 편애(偏愛)’라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편애라는 말을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편애는 생물학적, 부족주의적 개념을 넘어서 상호 유대를 가지고 서로 돌봐주는 관계라면 혈연이 아니어도 도덕적 감정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를테면 앞에서 말한 공감을 비롯하여 사랑으로까지 말이다. 따라서 편애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다른 공동체와 개인보다 더 편든다는 감정보다는, 상호 돌봄이라는 원칙하에 타자를 우선시할 수 있는 타자 편애의 현상학을 일컫는다. 이것은 특정한 혈연이나 족벌, 부족을 넘어서 인간이 타자와 얼마든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³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다(Deum igitur, inquam, qui habet, beatus est).”³⁵⁾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하느님을 이미 발견한 사람은 모두 자비를 베푸는 하느님을 갖고 있고 행복하다.”³⁶⁾고 덧붙인다. 그가 말하는바 신을 소유한다는 자체는 일반적인 욕망을 일컫는 것이거나, 어떤 가변적이고 사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를 향유(frui)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영원한 존재인 신의 속성은 자비, 곧 사랑이다. 그와 같은 사랑은 독식이 아니라 유대, 연대, 공유이다. 신의 현존이 공유와 공동 구원성을 띠고 있다면 신의 소유로 인한 영원

³⁴⁾ Stephen T. Asma, 노상미 옮김, 『편애하는 인간』 (서울: 생각연구소, 2013), pp.81~85.

³⁵⁾ Aureilus Augustinus, 박주영 옮김,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De beata vita)』 (서울: 누멘, 2010), p.27.

³⁶⁾ 위의 책, p.44.

한 지복(至福)은 특정 종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과 사랑은 모든 이들을 위한 객관이고 신의 무한한 생산과 평등한 의지의 결과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좋은 삶이어야 …… 즉 행복에서 벗어나 좋은 삶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행복까지를 생각하는 삶을 의미한다.”³⁷⁾ 행복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탁석산의 논변을 종교 간의 대화에 대입해보면, 개별적인 종교의 행복, 혹은 개인의 종교관에 입각한 신앙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종교 간의 행복을 추구해야 화해, 평화, 사랑, 이해가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철학자 스티븐 아스마(Stephen T. Asma)는 인간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재산, 명예, 쾌락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라고 말한다.³⁸⁾ 이미 예수(애제자 요한)나 붓다(아난다)도 편애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그는, 편애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에는 욕심과 사심 없이,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으며, 진짜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면 자신의 이익과 악덕에 탐닉하느라고 사회적 유대나 환대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한다.³⁹⁾

마이클 왈쩌(M. Walzer), 찰스 테일러(C. Taylor), 알래스데어 맥킨타이어(A. MacIntyre), 마이클 샌델(M. Sandel)과 같은 공동체주의 철학자들은 특정한 종교 공동체, 혹은 언어적, 의례적, 이데올로기적 공동체가 되면 어떤 특정한 공동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공동체”이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 유대가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전통에 앞선다.” “만약 가톨릭교도나 유대인이 됐는데도 정서적 공

37) 탁석산, 『행복 스트레스』 (서울: (주)창비, 2013), p.241.

38) Stephen T. Asma, 『편애하는 인간』, p.257.

39) 위의 책, p.263.

동체가 없다면 분명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를 찾을 것이다. 가톨릭교도나 유대인이 되는 것은 정서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⁴⁰⁾ 종교와 종교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공동체적 성격은 어떤 특정한 종교인이 되는 것보다 선협적이다. 사랑, 평화, 조화, 공감 등의 정서적 유대는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감정과 욕구로 분출된다. 그래서 서로 수단이나 도구의 파괴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강제와 강압의 의지에서 서로가 신의 필연적 현존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공동 실존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지각은 모든 종교세계와 생활세계에 침투한 신의 현존과 구원을 보는 테어로 나아간다. 그것은 ‘하느님 자신이 종교다원주의자이다. 하느님은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분이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구원한다.’⁴¹⁾는 논리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다. 신은 모든 종교의 정서적 유대감의 공통분모로서 개별자와 보편자의 통일을 유도한다. 구원의 보편성과 신의 사랑의 보편성은 종교의 배타성으로 인한 혼란을 점성적 관계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 주객의 관계를 재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 전통 ‘안에’ 들어갈 용기가 있어야 한다.⁴²⁾ “그리스도교 신학자는 상상력을 갖고 다른 종교들의 신앙에 참여해야 한다.”⁴³⁾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의 종교 전통 안에서 다른 정신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타종교로의 이행은 보다 풍요로운 영성을 가능하게 하면서 세계 종교적 전통을 재생하고(reproduktive) 새로운 창조적 영성으로 도약하는 진리와 선을 생산한다(produktive). 그로 인해 공유된 시공간에서 의

40) 위의 책, pp.274~275.

41) 길희성,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창조적 만남. 보살예수』 (서울: 현암사, 2004), p.14.

42) Paul F. Knitter, 변선환 옮김, 『오직 예수이름으로만?』, p.332.

43) 위의 책, p.356.

사소통적 정서적 유대감은 공동의 생활세계뿐만 아니라 종교 세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구성하게 될 것이다.

Ⅵ. 나오는 말

종교인의 고통은 신앙이 어떻게 개인적·집단적으로 내면화되며, 신앙적 승화의 합리적 장치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적·종교적 정서이다. 설령 종교 간에 벌어지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종교인은 그것을 신앙화, 신정론적 변증화로 객관화시킨다. 종교와 종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폭력, 상처, 살해 등으로 인한 고통은 분자적 충돌의 결과이다. 수많은 분자적 요소들 혹은 분자적 인간, 혹은 분자적 종교가 기체적 상태에서 맞부딪치는 현상들이 종교 간의 고통을 낳는다. 더불어 기체적 상태에서는 아예 종교 간의 분자적 충돌이 산화, 와해될 수 있겠지만 종교 간 연대와 화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유동적 종교는 점성적(viscous) 관계를 유지하면서 담론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점성적 유동성은 거리와 간격이 밀착되어 있는 듯하지만 언제든 자신의 경계를 구성하고 새로운 형질과 현실성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용성과 제3의 물질로의 초월 가능성은 종교 간의 고통이 완충될 수 있으며 형이상학적 고립을 넘어서 스스로 종교 권력화를 반성함으로써 자기 지배와 폭력을 극복함과 동시에 타자 지배와 폭력의 위험을 중(립)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신의 있음이라는 형이상학적 징후를 거론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적 토대주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있음의 흔적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종교 내, 혹은 종교 간 사태에 감각 가능한 기억과

윤곽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미 대중의 비판거리가 되어 버린 종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의 있음은 정서적 유대를 통한 화해, 평화, 대화에 깃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종교와 종교 사이가 소통 가능한 구조가 되어 상보적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소통 공동체, 감정적 공감 공동체는 점성적 친밀감의 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이는 대화적 관계를 통한 진리에 대한 자기개방을 추구한다. “대화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통로”⁴⁴⁾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적 관계의 말살은 독백의 형태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 주제들을 서로에게 대상으로, 그것도 오직 객체로서만 만든다.”⁴⁵⁾ 종교와 종교 사이의 이성적 논의가 성숙한 종교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진리 해명이 되어야 한다. 산적해 있는 종교문제와 신의 부재 현상에 대해 종교는 고통이라는 개인적, 실존적 수사(修辭)에 직면해 있다. 종교 간 폭력, 갈등, 살해 등으로 인한 고통의 수사는 종교 자체의 반성과 폭로로 이어지고, 이는 진리 계시, 진리 현존을 보여주는 종교를 요청한다. 종교 간의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교가 갖고 있는 맹목은 벗겨질 것이고 새로운 통찰은 거리의 소멸이 아닌 거리와 간격의 자율성을 통해 서로 존중함으로써 신의 있음이라는 형이상학을 다시 확보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종교적 편애와 편견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편애를 통한 환대는 고통 받는 이를 없애고 고통 자체(원치 않는 물리적, 심리적 고통)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 받는 이(약자)를 편들어 주는 것을 뜻한다. 편애의 해석학을 통해, 고통이라는 것을 해소하고 서로 종교적 행복을 추구하는 현존제는 상호 배려와 돌봄의 정서적 공감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언어는 타종교에 대한 책임적 언어이다. 고통

44) John H. Yoder, 『교회, 그 몸의 정치』, p.155.

45) J. Habermas, “인문과학의 이성비판적 폭로: 푸코”,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p.294.

이라는 언어가 해석학을 통하여 그 의미가 해명되고 지금 여기에서의 공통적 종교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있는 사회적·공동체적 관계 때문이다. 종교 간의 고통의 언어는 하나의 종교 언어나 철학적 언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신앙 언어이기도 하다. 게다가 고통이라는 신앙의 언어는 개인적 차원의 것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 관계적 차원, 즉 이웃을 향한 언어이다.⁴⁶⁾ 향후 종교가 고통의 언어가 발생하는 장 안에서 종교 간의 갈등, 폭력, 테러, 전쟁, 살해, 고통 등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종교적, “도덕적 괴물”⁴⁷⁾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종교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종교 간의 고통의 해석학은 곧 새로운 반성과 대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함석헌이 말한 ‘참’을 살아내는 종교가 진정한 종교가 되는 길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함석헌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종교가 ‘참’을 유일하게 독점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종교가 ‘참’을 제대로 반영해 내고 있는가가 문제였다. 함석헌은 참된 종교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등의 기존의 이름은 임시방편의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임시방편성은 인간의 유한한 이성이 무한한 영원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한계라는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참된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그 구조였다. ‘참’이라는 영원자를 향한 수직적 상승 운동을 통해 자신을 변혁시키고 그것을 타자의 고통에 연대하는 자발적 사랑을 통해 현실의 역사에서 모두가 자유·평등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수평운동으로 확대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역사 현실 속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했다.”⁴⁸⁾

46) 서공석, “신앙언어로서 신학의 어제와 오늘”, 『신학전망』, 제177호(2012년 여름), p.26.

47) S. Sontag, 『타인의 고통』, p.25.

48) 양현해, “함석헌과 무교회를 둘러싼 종교 사상적 모색”, 『종교연구(한국종교학회)』, 제67집(2012년 여름), p.161.

이와 같이 ‘참’은 곧 참된 종교의 표지이고 유동적 종교가 지녀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서, 그것은 타자의 고통, 즉 종교 간의 갈등, 폭력, 살해, 전쟁 등을 극복하면서 고통이 갖는 종교·정치적 역학 관계마저 완전히 끊어버리는 본질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 접수: 2013년 12월 1일 / 심사: 2013년 12월 10일 / 게재확장: 2013년 12월 10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 강영옥. 『고통, 신앙의 단초』.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1999.
- 길희성.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창조적 만남. 보살예수』. 서울: 현암사, 2004.
-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이찬수. “제3장 대동에서 만나는 종교와 평화.” 서울대학교평화인문학연구원 편.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13.
- 탁석산. 『행복 스트레스』. 서울: (주)창비, 2013.
- 함석헌. 『함석헌 전집 19—영원의 뱃길』. 서울: 한길사, 1984.
- Asma, Stephen T. 노상미 옮김. 『편애하는 인간』. 서울: 생각연구소, 2013.
- Augustinus, Aurelius. 박주영 옮김. 『아우구스티누스 행복론(De beata vita)』. 서울: 누멘, 2010.
- Beck, U and Beck-Gernsheim, Elisabeth, 이재원·홍찬숙 옮김. 『장거리 사랑』. 서울: 새물결, 2012.
- Cronin, M. 이효석 옮김. 『팽창하는 세계』. 서울: 현암사, 2013.
- Gruen, Arno. 조봉애 옮김.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서울: 창해, 2012.
- Habermas, J. 이진우 옮김. “인문과학의 이성비판적 폭로: 푸코.”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Habermas, J. 이진우 옮김. “탈현대로의 진입: 전환점으로서의 니체.”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Heagle, J. 이세형 옮김. 『고통과 악』. 서울: 생활성서, 2003.
- Heidegger, M. 박찬국 옮김. 『니체와 니힐리즘』.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 Knitter, Paul F. 변선환 옮김. 『오직 예수이름으로만?』.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6.
- Sontag, Susan.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서울: 이후, 2004.
- Yoder, John H. 김복기 옮김. 『교회, 그 몸의 정치』.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1.
- Bauman, Zygmunt. 권태우·조형준 옮김. 『리퀴드 러브』. 서울: 새물결, 2013.
- 기다모리 가쵸(北森嘉藏), 박석규 옮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서울: 양서각, 1987.

영문단행본

- Berkowitz, Peter. *Nietzsche: The Ethics of An Immoralis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 Press, 1995.

Knitter, Paul F. "Toward a Liberation Theology of Religions." John Hick and Paul F. Knitter, eds.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Toward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s*.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7.

Lai, Whalen and von Brück, Michael. *Christianity and Buddhism: A Muticultural History of Their Dialogue*. Phyllis Jestice, trans. New York: Orbis Books, 2001.

국문논문

서공석. "신앙언어로서 신학의 어제와 오늘." 『신학전망』, 제177호(2012년 여름), pp.2~29.

양현혜. "함석헌과 무교회를 둘러싼 종교 사상적 모색." 『종교연구(한국종교학회)』, 제67집 (2012년 여름), pp.139~167.

Hermeneutical Reflection of Interreligious Pains and Liquid Religion

Kim, Dei-Seek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e basis ideal of religion is peace and love. However, if the true spirit of religion is faded by religion conflicts, violence, murder, and war, it will bring unimaginable to human beings. No matter how the psychological feature of the pain is bigger than the physical feature, the pain caused by religions includes both of them. The masses who recognize the symptoms of pain in religion will strongly feel the death of God more than the God's presence. This is definitely a dysfunction of religion. Ham Suk-Hun refuses the religion being fixed or solidified, and claims 'Liquid religion' which emphasizes the flexibility between religions. Liquidization, the method that does not fear inter-penetration, is one way to the peace of religion. In addition, if it becomes Liquid religion, the reconstruction of metaphysics of postmetaphysics is possible. Furthermore, consideration and care between religions generate emotional empathy and it recognizes the others as neighbors rather than strangers. They even do not stand against any violence but share religious imagination producing mutual happiness. In addi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rhetoric of the language, the pain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with the social and self-reflective language, but also with the religious language, and the

religion should be the true religion for the people to recognize the God's presence.

Key words: pain, death of God, favoritism, peace, emotional solidarity, empathy, liquid religion, viscous, metaphysics

김대식(Kim, Dei-Seek)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B.A.)와 서강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를 졸업(M.A.)한 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환경과 영성을 연구하여 전현호 신부로부터 박사학위(Ph.D.)를 사사했다. 지금은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등에 출강하면서 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종교연합(URI-Korea)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환경문제와 그리스도교 영성』, 『함석헌의 종교인식과 생태철학』, 『지중해 학성서해석방법이란 무엇인가』(공저), 『생각과 실천』(공저), 『식탁의 영성』(공저), 『영성, 우매한 세계에 대한 저항』, 『함석헌의 철학과 종교 세계』, 『함석헌과 종교문화』 등이 있다.

일본 불교의 평화실현 운동:

조도신슈(淨土眞宗)의 반(反)원전 및 반(反)야스쿠니 운동을 중심으로*

기타지마 기신 (윳카이치대학)

국문요약

전후(戰後) 50년이 가까워지면서 일본 내 여러 불교 교단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침략전쟁에 가담했던 사실에 대한 고백과 희생자에 대한 사죄 및 참회의 결의를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이 결의를 종교 생활 속에서 얼마나 현실화해야 하는지가 모든 불자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이 풍부한 결실을 거두려면 우선 왜 일본의 불교 교단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국가신도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와 협력의 길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의 과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도신슈(淨土眞宗)는 10개의 종파로 이루어져 있고, 2만 개의 사원과 2000만 이상의 신자가 있다. 그런데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와 니시혼간지(西本願寺) 등의 본산(本山)은 신란(親鸞) 성인의 가르침에 반하는 진속이제론(眞俗二諦論)에 근거해 천황제에 적극 협력했다. 조도신슈에서 진속이제론은 종교적 신앙을 정신세계에만 한정하고 신자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국가에 따르게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13세기 신란 성인은 불교의 가르침을 매도하는 살해범조차 자신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생각을 바꾸면 구제될 수 있다고 설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란 성인의 가르침에 입각해 조도신슈의 승려와 신자가 참회의 행동으로 참여하

* 일본어 원제는 “日本佛教の平和實現運動: 淨土眞宗の反原發と反靖國運動を中心に” 이고, 이찬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가 번역함.

고 있는 '반(反)원전 운동'과 '반(反)야스쿠니 운동'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그들의 평화 운동은 일본국 헌법 제9조 및 제20조와 나눌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는 시민운동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이들 운동은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는 불교적 원칙에 근거해, 타자를 평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조도신슈(淨土眞宗), 신란(親鸞), 진속이제론(眞俗二諦論), 전쟁참회, 원전 운동, 반야스쿠니 운동

I. 들어가는 말

메이지 유신으로 구미형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에서 제국주의를 형성하려 했던 세력은 당시까지 국가와 한 몸이었던 불교의 '국교적' 역할을 부정하고 배제했다. 그러면서도 종교를 벗어나기보다는 모든 종교의 상위에 있는 천황의 신권적 절대성을 내세웠다. 그 이유는 근대 국민국가도 하나의 '국가'로서, 절대적인 것에 의한 자기의 정당성과 존속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미의 근대국가가 자기의 절대성을 보증하기 위해 방치되었어야 할 그리스도교로부터 '정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속과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이데올로기도 필요하다. 그 이데올로기는 세속적 측면을 가지면서도 그 세속성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대 일본의 지배자에게 있어서 '국민국가' 형성에 합치하는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였다. 식민지의 획득을 전제로 하는 '구미 근대화 노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민국가'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는 자기를 절대화한 '자민족 중심주의'이다. 막번(幕藩)체제로부터 권력을 찬탈한 '유신정부'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신성화하고 절대화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내부의 대립을 넘어, ‘국민’을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신도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 모든 종교는 완전히 그 지배하에 놓였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사회성을 제거시켜 관심을 마음속에만 한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래 종교는 사회와 정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인간적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신도 체제 하에서의 종교는 사회·정치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분리시켜, 정치체제에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정치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사회와 정치로부터 분리된 ‘마음 속’만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질했다. 일본의 종교 교단은 텐리혼도(天理本道) 등 극히 몇 안 되는 교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국주의·식민주의로 가는 길을 걸었다.

전후(戰後) 50년을 맞이하던 시기에 일본 불교 교단 상당수는 전쟁의 가해 책임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결의를 시행했다. 문제는 그러한 결의를 신앙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해낼 것인가에 있다. 이 구체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려면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에 왜 종교가 체제 협력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하고, 전후 평화 실현의 과제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이 과제를 분명히 해보고자 한다.

Ⅱ. 아시아·태평양전쟁 후 50년과 종교 교단의 자기비판

일본 종교 교단이 침략 전쟁에 협력했던 사실에 대한 고백과 참회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1967년 3월에 나온 ‘제2차 대전 당시 일본 기독교 교단의 책임에 대한 고백’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실로 저희 조국이 죄를 범했을 때 저희 교회 또한 그 죄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파수꾼’의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마음 속 깊은 아픔으로 이 죄를 참회하오니, 주님, 용서를 바라옵니다. 아울러 세계,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있는 교회와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포에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청하는 바입니다.”¹⁾

불교 교단의 전쟁 협력에 대한 고백과 참회는 이보다 훨씬 늦게 ‘전후 50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많이 나왔다. 일본 불교에서는 흔히 연기법요(年忌法要)를 50회기(50回忌, 사후 50년기)로 매듭짓는 습속이 있어서(실제로는 49년째에 법요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몰자의 50회기 법요와 ‘전후 50년 문제’는 어렵지 않게 일체화할 수 있다.

각 불교 교단에서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전쟁 가담 책임에 대한 참회’ 및 ‘평화’의 맹세나 결의가 잇달아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조도신슈 오오타니파(淨土眞宗 大谷派) 전쟁 책임 고백 ‘전체 전몰자 추도 법회에 맞추어’(1987년 4월)

조도신슈 혼간지(淨土眞宗 本願寺) 종회(宗會) ‘평화에 대한 우리 종문(宗門)의 강한 염원을 전국과 전 세계에 철저히 전하겠다’는 결의(1991년 2월)

소토슈(曹洞宗) ‘참사문(懺謝文)’(1992년 11월)

텐다이지(天台寺) 문종(門宗) ‘핵 폐기를 요구하는 종문(宗門)의 호소’(1994년 6월)

또 그리스도교 관계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일본 성공회 ‘8·15 평화에의 호소’(1987년 8월)

일본 침례교 동맹 ‘전쟁 책임 회개’(1992년 8월)

1) 日本宗教者平和協議會 編, 『宗教者の戦争責任懺悔・告白資料集』(東京: 白石書店, 1994), p.7.

다음 인용은 전후 46년을 지내며 ‘전쟁 책임·평화への 業원’을 담은 혼간지(本願寺) 종회(宗會) 최초의 공식 표명문이다. 그 표명문의 특징을 보자.

…쇼와(昭和) 16년(1941년) 12월 8일에 발발한 태평양전쟁은 우리나라와 주변 여러 나라들에 심대한 피해를 남기고, 쇼와 20년(1945년) 8월 우리나라가 세계 첫 피폭국이 되는 비참함을 동반하며 종결되었다. 이런 쓰라린 역사를 딛고서 전쟁 후에는 ‘항구적인 평화를 회구’하는 현재의 일본국 헌법을 채택해 우리나라의 국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중국대륙·한반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전화(戰禍)에 휘말리게 해 막대한 희생자를 낸 전쟁 가운데서도 쇼와 20년(1945년)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3년 후인 헤세(平成) 6년(1994년)에는 이들 전몰자 50회기를 맞는다. … 종문(宗門)에서는 이 50회기를 맞이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화(戰禍)로 쓰러진 사람들과 원폭 피해자 혹은 전쟁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원수와 친구를 평등히 대하는’[怨親平等]의 마음으로 추도하고 원조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책무가 있다. 또 비록 군부를 중심으로 한 압력이 있었다고는 해도, 전쟁 전과 전쟁 중에 결국은 전쟁에 협력했다는 사실과 진속이제론(眞俗二諦論)이라는 교학을 교묘하게 이용해 조도신수(淨土眞宗)의 본질을 잃어버렸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부처님과 조사 앞에서 깊이 참회해야 한다. 이상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1) 총국(總局)은 과거의 전쟁 협력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명하고, ‘세상의 안온, 불법의 흥포’라는 종조의 유지에 부합하도록, 평화를 바라는 염불자(念佛者)의 業원을 전국, 전 세계에 행동으로 보여준다.
- (2) 위 항의 행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모든 종문(宗門)이 합의할 수 있는 법요식과 그 외의 사업계획을 책안한 뒤, 전체 교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종교상의 처치를 제시한다.…²⁾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첫째로,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2) 위의 책, pp.38~39.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이 가해에 대한 인식은 1992년 11월에 소토슈(曹洞宗) 종무총장(宗務總長) 명의로 나온 ‘소토슈 감사문(懺謝文)’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거기에는 “일본의 해외 침략에 갈채를 보내고 그것을 정당화해온 종문 전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고, 또한 “석존의 법맥을 이어받는 것을 신앙의 귀추로 하는 우리 종문이 아시아의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긍정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행했다”는 것, “(일본이) 조선을 속국화해 … 한 국가와 민족을 말소해 버렸는데도, 우리 종문은 그 침병이 되어 조선 민족을 우리나라로 동화시키는 것을 도모하면서 황민화 정책 추진의 담당자가 되었다”는 것, “불교를 국책(國策)이라는 세상의 법에 예속시키고, 게다가 다른 민족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빼앗아갔다는 이중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참회하고 있다.

둘째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희구하는” 현재의 일본국 헌법은 메이지 이래 이어져온 일본의 ‘침략 노선’에 대한 부정 위에서 성립되었다는 지적이 보인다. 셋째는, 혼간지(本願寺) 교단의 전쟁 협력의 사상적 기반이 된 진속이제론(眞俗二諦論)에 대한 지적이다. 혼간지 교단에서 이용한 진속이제론이란 정신적·종교적 세계와 사회적·정치적 세계를 분리해, 전자에 관한 인식을 진제(眞諦)라 부르고, 후자에 관한 인식을 속제(俗諦)라 부르면서, 종교적 진리는 ‘마음 속’에만 담아두고 사회·정치적 차원에서는 “천황제 국가에 복종하라”라는 요구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 “사회·정치적 인식=천황제 국가에 의한 민중 탄압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절대 복종”을 부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진속이제론은 전쟁 협력의 사상적 기반이 된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이다. 셋째는 이에 대한 ‘깊은 참회’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는, “과거의 전쟁 협력에 대한 깊은 반성”에 입각해서 신란(親鸞, 일본 조도신슈(淨土眞宗)의 개조·오키노 주)의 사상을 현대화함으로써 평화에의 염원을 행동으로 보

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성명문에서는 전쟁 후 처음으로 ‘전쟁 책임과 평화에의 염원’을 종회(宗會)라는 최고 결의 기관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결의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일본국 헌법의 항구평화주의”, “우리나라와 주변 여러 나라에 준 심대한 피해와 교단의 전쟁협력”에 대한 참회, “전쟁 협력의 이데올로기였던 진속이제에 대한 지적”, “평화를 향한 염불자의 염원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기술했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분리되기 어렵도록 결합하고 있는지, 명확한 행동을 제기하는 신앙의 시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일본 근대의 걸음을 신앙과 유기적·주체적으로 결합시키는 시각이 희박한 데서 오는 약점이다.

이러한 시각이 희박해진 것은 신앙을 기축으로 하되 종교와 사회·정치적 관계를 분리시키지 않는 자세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을 인간의 사회 정치적 연대와 해방의 시점에서 주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실천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이치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가 사회 정치 인식을 흐리게 하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전쟁 이전의 종교 교단에 공통적이었다. 이런 자세의 근저에 있던 것이 조도신슈의 경우는 진속이제론이었다. 진속이제론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근대 천황제 국가를 옹호하는 기제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전쟁 전 일본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밝히는 것보다도 연결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또 이러한 진속이제론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전쟁 협력에 대한 참회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 및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Ⅲ. 진속이제론과 신란의 사상

1. 진속이제론이란 무엇인가

전술했듯이 조도신슈에서는 근세의 교의 이해에 기초를 두면서 진속이제론을 교단의 신앙과 천황제의 타협을 도모하는 이데올로기로 삼아왔다. 니시혼간지(西本願寺) 교단에서는 1886년 1월에 제정된 “종제”(宗制, 니시혼간지의 헌법)에서 조도신슈의 교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종(一宗, 조도신슈 니시혼간지(淨土眞宗 西本願寺)를 지칭-오키나이 주)의 교지에서는 부처님의 이름(佛號)을 믿고(聞信) 큰 자비(大悲)를 염보(念報)하는 것을 진제(眞諦)라 하고, 사람의 도(人道)를 이행해 왕법(王法)을 준수하는 것을 속제(俗諦)라 한다. 그런즉 타력의 안심(安心)에 머물면서 보은(報恩)의 경영(經營)을 이루는 것이 이제상자(二諦相資, 진제와 속제의 상호의존-오키나이 주)의 묘지(妙旨)이다.³⁾

여기서 진제란 아미타불을 부르는 소리인 ‘나무아미타불’을 믿고, 아미타불의 대자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에 보응해가는 것이다. 즉 ‘진’이란 종교적 세계의 진리를 의미하고, ‘제’란 종교적 세계에서의 진리 인식을 의미한다. 속제란 사람으로서의 길, 즉 인륜을 실천하며 세속법을 지켜가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해진 세속 도덕, 정치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세속 세계의 진리 인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일단 ‘종교적 세계’와 ‘세속적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양자는 상

3) 信樂峻鷹 編, 『近代眞宗思想史研究』(京都: 法藏館, 1988), p.9.

보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속제’의 내용은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조도신슈 오오타니파(眞宗 大谷派))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히가시혼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886년 9월에 제정된 ‘종제사법’(宗制寺法) 제17조에서 ‘진속이제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본종(本宗, 東本願寺)의 교지(教旨)는 일향전념(一向專念)을 종의(宗義)로 하면서 … 일심(一心)으로 아미타여래 일불에 귀의함으로써 왕생 정토의 안심(安心)을 얻는 것이다. 이 일념(一念)이 피어오를 때 왕생의 업이 이루어지기(業事成辦) 때문에, 오로지 칭명염불(稱名念佛—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행위—역주)이라는 한 가지 행위(一行)로 보사(報謝, 은혜에 보답함—역주)를 이루는(經營) 것을 진제문(眞諦門)이라 한다. 황제(皇上)를 삼가 받들어 정책(政)을 준수하고, 세상의 길(世道)을 거역하지 않으며, 인륜(人倫)을 거스르지 않고, 자기의 본업에 힘써 국가를 이익되게 하는 것을 속제문(俗諦門)이라 한다. 즉, 진제로 속제를 돕고, 속제로 진제를 돕는, 진제와 속제의 상호 도움(二諦相依)으로 현실세계와 정토세계(現當二世)를 서로 이익 되게 한다. 이것이 이제상자(二諦相資)의 법문이다.⁴⁾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종제사법(宗制寺法)의 진속이제론도 내용은 니시혼간지(西本願寺)와 동일하다. 단지 히가시혼간지 쪽이 속제에 대해 더 구체적인데, 그 내용은 “천황을 삼가 받들어, 국가가 정한 법률을 지키고, 세상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길을 거역하지 않으며, 천황제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또 진제와 속제는 ‘상호도움과 상호의존’(相資·相依)의 관계에 있다. 진제와 속제는 상호의존의 관계로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이 이제상자(二諦相資)의 내용이 된다.

이 진제와 속제의 ‘상자·상의’ 관계는 결국 궁극성(第一義性)에 대한 물음과 연관이 있다. 불교적 측면에서 보면 궁극성은 ‘진제’에 있는 것이

4) 淨土眞宗本願寺派安藝教區 編, 『淨土眞宗の平和學』(京都: 同朋舎出版, 1995), p.131.

당연하다. 불교적 진리에 근거해야 세속 사회가 인간화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세속을 넘어선 절대 진리에 대해 말하지만, 세속 권력은 아무리 이상적이라도 절대성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를 궁극적인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불법(眞諦)과 세법(俗諦)의 관계에 대해 역사적으로 보면, 10세기의 현밀체제(顯密體制, 종교 세력과 세속 권력의 연합 체제)로부터 15세기 무렵까지는 불법(佛法)의 우위성이 지속되지만, 17세기의 막번 체제(幕藩體制)의 성립을 거쳐 18세기경에는 불법의 우위성이 현실과 이론 모두에서 완전히 붕괴한다. 그에 따라 시가라키 다카마루(信樂峻鷹) 선생이 말하고 있듯이⁵⁾ 근세 조도신슈의 교학에는 ‘속제’가 ‘진제’에 대해서 궁극성을 지니는 권력유착론이 출현한다. 니시혼간지(西本願寺, 조도신슈 혼간지파)의 학생인 쇼카이(性海, 1765~1838)의 『진속이제십오문(眞俗二諦十五門)』에 나오는 “신국(神國) 안에 불법(佛法)이 있다”라는 말이 그것을 의미한다. 근대의 진속이제론은 이처럼 속제를 근본으로 한 권력 유착을 기반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것은 ‘국가 총동원 체제’, 사상적으로는 ‘체제 보좌(翼贊) 체제’로 귀결되고, 결국 ‘전시교학(戰時敎學)에 이르게 된다.

전시교학이란 전쟁기에 초국가주의적 색채를 농후하게 띤 혼간지(本願寺) 교단의 교학⁶⁾이다. 거기에서는 종교상의 초월자인 아미타불과 세속 세계의 최고 권력자인 천황과의 중층적(重層的) 이해가 보인다. 오오니시 오사무(大西修)는 그 구체적인 예로 사사키 요시토쿠(佐々木憲德)의 다음 말을 인용하고 있다.

조도신슈라는 종교의 특질은 두 마음 없이 아미타불에만 귀의한다는 순수

5) 信樂峻鷹, 『宗教と現代社會』(京都: 法藏館, 1984), pp.218~219. 信樂峻鷹는 전(前) 류코쿠대학(龍谷大學) 학장·명예교수이다.

6) 大西修, 『戰時敎學と淨土眞宗』(社會評論社, 1995), p.9.

한 마음에 있지만,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천황의 마음 자체에, 오로지 천황을 믿고 따르는 것에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⁷⁾

이 중층화(重層化)는 다음처럼 천황 지배의 근본성으로 귀결된다. “진종의 신자는 종교적 영역에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천황 각하 일인에 절대 순종하며 모신다.”⁸⁾ 시가라키 선생은 진속이제론의 발생 근거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신란 사후에 진종의 신심(信心)이 점차 세속과의 유착 속에서 파악되고 이해되어 온 필연적 귀결로 근세, 근대에 들어 진속이제론이라는 주장이 생겨나고, 마침내 그 필연적 연장으로서 전시교학이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신란이라는 원점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되돌아가지 못한 채, 오랜 전통적 해석을 그대로 긍정하고 떠맡으면서 쌓여온 그 퇴적 속에서 신란을 파악하는 형태로 조도신슈 교학이 영위되어 오다가, 급기야 이와 같은 전시교학이 태어나고, 다카마노하라(高天原, 아마테라스 오미가미(天照大神)가 지배하는 천상의 나라)와 정토(淨土)가 동일해졌으며, 천황 귀일과 아미타불 신심이 중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⁹⁾

시가라키에 의하면, 진속이제는 신란 사후 교단과 세속 권력의 유착에 의해서 태어났을 만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신란으로 되돌아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신란은 진속이제의 기본이 되는 ‘불법(佛法)과 세법(世法)’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보자.

7) 위의 책, p.12.

8) 日本宗教者平和協議會 編, 『宗教者の戦争責任懺悔・告白資料集』, p.44.

9) 信樂峻鷹, 『宗教と現代社會』, p.223.

2. 신란이 파악한 불법과 세법의 관계

신란(1173~1262년)이 살았던 12~13세기의 사회는 텐다이(天台)·진곤(眞言)·남도 6종(南都六宗)·음양도(陰陽道)·신기신앙(神祇信仰)을 포함해, 밀교(密敎)를 기축으로 통합된 현밀(顯密) 불교 세력과 세속 정치 권력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 체제를 현밀 체제라고 한다. 이 체제 속에서 국가 권력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가 된 ‘체제불교’는 인간 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버리고 도리어 민중 억압이 그 본질이 되었다. 그런 식의 불교는 인간을 속이는 외도(外道, 허위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세속적인 현행 정치 체제의 절대화이며, 이 체제에 무릎을 꿇도록 강제한다. 신란은 『현정토진실교행신증문류(顯淨土眞實敎行信証文類)』의 「화신토문류(化身土文類)」에서 국왕(국가 권력)과 세속에의 굴종 및 국왕 절대화를 『보살계경(菩薩戒經)』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보살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출가한 사람의 법은 국왕을 향해 예배하지 않고, 부모를 향해 예배하지 않고, 육친에게 힘쓰지 않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불도 수행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보살계경에 기술되어 있듯이, “국왕을 향해 예배하지 않고, 부모를 향해 예배하지 않고, 부모·형제·처자를 섬기지 않고, 귀신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¹⁰⁾

신란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세속의 것에 절대적인 것은 무엇 하나 없으니 그런 데서 최종 근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종 근거는 불법뿐이니, 국왕도 불법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건실한 정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란이 중국 정토교를 수립한

¹⁰⁾ 淨土眞宗本願寺派日常勤行聖典編纂委員會 編, 『淨土眞宗聖典』(京都: 本願寺出版社, 1988), p.454. 현대어 번역은 필자.

담란(曇鸞, 476~542)을 칭송하면서 “담란 대사에 대해 양나라의 무제가 대사가 계신 곳을 향해 보살로서 예배했다”고 말한 것은 세속 권력으로서의 ‘왕법’은 ‘불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불법을 무력화해 사람들의 현실 비판의 눈을 흐리게 하고, 결국 ‘왕법·세법’을 절대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이론가·어용학자가 필요하다. 신란은 사람들을 속이는 체제파의 사상가·승려를 귀신이라 부르며 비판하고 있다. 체제이론가가 귀신이라는 말은 그 이론가가 우리 앞에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가 아니라, 도리어 신·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교묘한 말투로 설득력 있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말법(末法)의 세상에서는 불교가 외도가 되고, 불도 수행을 하려는 것을 방해한다. 신란은 국가 권력과 일체가 되어 현 체제에 대한 긍정을 요구하고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 대한 집착심과 자기중심주의를 키우는 ‘외도화한 불교’에서 혼탁한 말법 세상의 현실을 보았다. 이러한 외도화한 불교와 일체가 된 국가 권력 및 왕법에 대한 신란의 시각은 명쾌하다. 그것은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염불과 연관되는 문제로 인해 매우 곤란해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고두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 하지만 염불을 방해하는 일 때문에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염불을 금지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되겠습니다만, 염불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영주(領家)나 장원(長圓) 관리인(地頭) 등의 지배자에 의지해 염불을 퍼뜨린다면 서로 사안(思案)이나 공부(工夫)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 땅에 염불은 퍼지겠지만, 그것도 부처님의 처분에 달려있으니까요 … 이 말법오탁(末法五濁)의 세상에 통상 염불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진작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니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¹¹⁾

11) 淨土眞宗本願寺派日常勤行聖典編纂委員會 編, 『淨土眞宗聖典』, pp.772~773. 현대어 번역은 필자.

여기서 신란은 전수염불(專修念佛)로 인한 인간 주체화의 길을 국가 권력에서 구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불법을 퍼뜨린다면 권력자의 힘을 빌리려는 생각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전수염불은 인간의 주체화와 연대를 낳아 불교세력과 정치권력의 연합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체제를 부정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전수염불을 정지시켰던 것이다. 아울러 염불 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지도자인 호넨(法然)과 제자 신란(親鸞) 등은 1207년 체포되어 호넨과 신란은 유배되었고, 서의(西意)·성원(性願)·주련(住蓮)·안락(安樂) 등 네 명은 참수되었다.

전수염불을 중지하라는 요구는 1205년 고후쿠지(興福寺) 집단에서 나왔다. 그 요구의 중심점은 전수염불이 ‘국토를 어지럽히는 잘못’이자, 불법과 왕법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국가 체제 파괴죄에 해당한다는 데 있었다. 전수염불 중지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조큐(承久)의 난(1221년)으로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가 조정에 대해서 우위를 확립한 이후에도 전수염불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실제로 1219년, 1224년, 1227년, 1234년에도 탄압이 행해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탄압을 당하면서도 신란의 전수염불 집단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것은 가마쿠라에서 염불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교토에 있던 신란이 제자 쇼신보(性信房)가 재판에 임하면서 원칙을 왜곡하지 않고 대처한 것을 두고 기뻐하면서 다음의 편지글을 보낸 데서 알 수 있다.

... 가마쿠라에서 소송하는 모습은 밖에서도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 각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소송의 결말이 내려져 시모우사(下總)로 돌아가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이 일어난 것은 당신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토 염불자와 관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또 이 소송사건은 고인이 된 호넨 상인(法然上人)이 살아계실 때 우리도 여러 차례 들었던 것으로서 딱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 염불을 기리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¹²⁾

전술했듯이 신란은 결코 권력자 힘을 빌려 불법을 넓히려 하지 않았다. 권력자들은 전수염불자의 주체적 삶의 방식과 연대에 공포심이 들어 계속 탄압했지만, 전수염불자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법(佛法)을 세상에 따르게 하지 않았다. 신란의 정치권력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시가라키 다카마루(信樂峻鷹)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란은 정치권력이라는 것을 늘 엄격하게 상대화해 그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늘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적대하는 것은 가차 없이 말살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는데다가, 권력이라는 것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란에게 염불, 신심이라는 것은 늘 그러한 세속의 정치권력, 왕법을 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에게 배례하지 않는 대國王不禮는 사상은 동시대의 도겐(道元)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¹²⁾

신란은 국가권력의 자기중심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국가권력은 자기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전수염불자를 체제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탄압을 계속 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라는 것도 있게 마련이듯이 그러한 정치권력에는 절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왕법’ 및 ‘세상법’에는 보편성과 절대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거기서 최종적 거처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신란이 보건대 전수염불로 집약되는 불법은 세속 권력을 상대화하고 그것을 넘어선다. 따라서 ‘왕법’은 ‘불법’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의 사회적 전개가 왕법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보건대 막번 체제 중기에 태어났고 메이지 유신기에 재편성되어 근대 천황제와 합치

12) 위의 책, p.783. 현대어 번역은 필자.

13) 信樂峻鷹, 『宗教と現代社會』, p.42.

되었던 혼간지 교단의 진속이제론이, 현실과의 투쟁으로 단련된 신란의 사상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혼간지 교단은 진속이제론을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주의 노선에 협력하는 이데올로기적 근거로 삼았다.

그렇다면 같은 교단이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서 참회하고 고백하기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의 및 구체적 행동으로 잘못을 극복하고 인간적 성장을 이루려한다는 뜻일 것이다. 진속이제를 교의적이고 실천적으로 넘어서는 운동은 1960년대 이후 야스쿠니 문제, 원자력 발전 문제, 헌법 9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전 반대 운동과 야스쿠니 문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IV. 불자의 전쟁 책임 참회 및 고백과 평화 실현의 길

1. 진속이제론의 구체적 사례로서의 반원전 운동

조도신슈의 혼간지파와 오오타니파 모두 1886년 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종제’(宗制) 및 ‘종제사법’(宗制寺法)을 제정하면서 진속이제론을 기축으로 명기했다. 그런데 종조 신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진속이제론을 조도신슈 가르침의 요점으로 하는 한, 천황(천황에 체현된 국가)과 아미타불을 일체화하고, 천황제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실제로 일찍이 조도신슈의 학자는 “조도신슈의 신앙 역시 그 신앙을 다 기울여 천황에게 귀일하고 받드는 것이다.”(후겐 다이엔—普賢大圓)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무쪼록 힘차게 염불하면서, 대군(大君)을 위해, 조국을 위해, 성전(聖戰)의 흰 길을 일심으로 돌진해 주십시오.”(우메하라 신류—梅原

眞隆)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다. 천황제 파시즘에 대한 굴복을 합리화하고 협력했던 이론이 근대의 진속이제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 이후 조도신슈 교단은 신란의 입장에서 평화 실현의 길을 걸기 위해 진속이제론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질문해야만 했다. 조도신슈 오오타니파는 1987년에, 혼간지파는 1991년에, 신란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해 전쟁에 협력했던 범죄를 인정하고서 참회하고 있다. 그렇지만 진속이제론은 지금도 사회 속에 살아남아 있다. 그 구체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원자력발전소 입지 논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나가타(永田浩昭, 眞宗 大谷派 法傳寺 주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진속이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에 익지 않은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진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관념적인 영역을 가리키고, ‘속제’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현실적 영역을 가리킵니다.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이원론’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와 현실의 생활을 각각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따로 따로 각각의 진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종교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라고 했을 때 … 만주 개척이라는 것을 ‘국책’이라고 말하면 만주를 개척하러 가는 것이 조도신슈 문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가르침(진속이제론)을 우리의 체계적 교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 체계적인 교의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그 가르침에 대해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문제가 현대 사회의 과제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방향이든지, 교단 입장에서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대로 따라간다고 선언했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 그리고 전후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쟁하러 가서 아시아인들을 짓밟으라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결정해 달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와 현실의 생활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눈다는 그 기본 구조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¹⁴⁾

14) 原子力行政を問い直す宗教者の會 編, 『國策=核燃サイクルを問う—今, 宗教者として』, 第3回 原子力行政を問い直す宗教者の會 六ヶ所 全國集會報告集 (1996), p.19.

조도신슈 교단이 그 교학으로 삼은 진속이제론을 현실 속에서 극복하는 길은 전쟁 협력을 참회하고 평화 실현을 향해 걷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이시카와현(石川縣) 스즈시(珠洲市)의 반원전운동에서 볼 수 있다.

1975년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의 스즈시 시의회는 원전 유치를 결정하고, 간사이(關西)전력·주부(中部)전력은 백만 킬로와트급 원전 4기 건설을 계획했다. 노토반도 지역은 진종(眞宗) 신앙이 독실한 지역으로서, 일찌기 1490년에 그 지역의 슈고(守護)인 하타케야마 요시무네(畠山義統)를 타도해 조도신슈 문도의 영지(領國)를 만들려 한 잇코잇키(一向一揆, 조도신슈 혼간지 교단이 무사, 농민, 상공업자 등을 조직화하여 형성한 종교적 자치 조직—웁긴이 주)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현재 스즈시 시민의 60% 이상이 조도신슈 오오타니파의 신자들로서, 오오타니파 노토교구 제10조·보슈카이(坊守會, 사찰 주지의 부인 모임)는 원전 반대 결의를 하고 ‘조도신슈 오오타니파 노토 반원전모임’을 결성했다. ‘나무아미타불’ 깃발을 세우고 현지에서 싸우는 민중의 반원전 운동이 고조되자, 간사이전력은 1989년에 입지 조사를 중단했다. 이 새롭고 끈질긴 운동은 2003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 계획 그 자체를 동결시켰다.

이 운동의 근간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원전 문제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국책(國策, 世法·王法)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다. 국책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국책으로 정한 침략전쟁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조도신슈의 전쟁 협력 이론인 진속이제론은 신심(신앙)을 마음 속에만 두고 세속의 일은 국가 정책에 따르면서 사회정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이원론이다. 신란이 말하는 신심이란 본래 정신적 세계와 사회 정치적 세계를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다. 신란이 『현정토진실교행신증문류(顯淨土眞實教行証文類, 약칭 教行信証)』에서 말하고 있듯이, 조도신슈 신자들은 국왕불례(國王不禮, 진실

의 길을 걸으려면 국왕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의 입장, 즉 기본 처소는 아미타여래·진여이며, 그 외의 것, 즉 세속적 권력에서 절대적 가치와 의지처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원전의 입지가 강제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토반도 스즈시 사람들은 희생자이다. 그렇지만 원전이 건설되어 이 지역에서부터 방사성 물질이 뿌려진다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전 일본의 침략 전쟁과 원자력 발전 사이에는 공통점도 드러난다. 따라서 진속이제론을 극복하려면 정치적 해방과 정신적 해방을 일치시켜 원전 입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물으며 저지해야 한다. 조도신슈의 승려와 신자들에게 원전 반대 운동은 타력의 신심을 묻는 종교 활동이기도 하다. 진속이제론도 정신적 해방과 사회적 해방을 일치시킨 운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일부의 승려와 신자들에 의해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고령자도 참가하고 있었는데, 다음 인용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스즈시에서 일어난 반원전운동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노파가 가능성을 조사하던 작업자 앞으로 뛰쳐나와 차의 앞을 큰대자로 가로막았다. “끌고 가봐라. 내 생명 하나로 원전이 멈추면, 이것으로 아이나 손자들 얼굴을 대할 수 있거든. 자, 끌고 가봐!” 하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는 작업자에게 합장하면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께 정말 감사해요. 당신들이 원전 문제를 가져다준 덕에 이곳에 있던 소중한 보물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키워 준 바다와 산, 이 보물을 있는 그대로 아이와 손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나의 일이었지. 이제 충분하니까 제발 돌아가 줘요”라는 노인들이 있었다.¹⁵⁾

15) 玉光順正, 『いのちを奪う原發(眞宗ブックレット No. 9)』, (京都: 東本願寺出版部, 2000), pp.17~18.

종교 문제와 사회 문제를 결합시켜서 원전 반대 투쟁에 나선 승려들에 대해 다음처럼 말한 노파도 있었다. “스님들이 오~랫 동안 절의 두꺼운 방석에 앉아 아~무일도 하지 않더니만, 그 오랜 외상값을 지금 여기서 지불하기 시작했구나.”¹⁶⁾ 이 말은 진속이제론으로 전쟁에 협력했던 조도신슈 교단 승려들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원전 입지의 문제를 의식하면서 반대 운동에 나서는 모습에서 신자와 시민이 참회의 구체적 행동을 보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뒤쳐졌던 지역에 대한 개발이 풍요와 편리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인 양 강행되고 있다. 개발이 실제로는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파괴하고 있지만, 국책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있는 까닭에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지역’은 전적으로 객체 또는 타자로 인식되며, 스스로 발전하는 힘이 결여된 비역사적이고 유형적인 존재이다. 또 발전이 지체되면 그 지역은 편협한 공동체로 간주된다. 노토반도 스즈시도 이런 ‘지역’의 전형으로 파악되었기에 원전 입지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노토반도 스즈시에서 원전 반대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원전 입지와 아시아·태평양전쟁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국민을 복종시켰던 국책이었다. 진속이제론이 사람들의 복종을 강제하는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전쟁 협력에 대한 참회는 교의에서나 실제 생활의 실천에서나 진속이제론을 넘어 신란 본래의 사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전술했듯이 스즈시 시민의 2/3 이상이 조도신슈 오오타니파의 신자이며, 승려에 대한 신뢰도 돈독하다. 조도신슈가 이 지역에 문화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전 반대 운동이 이 종단에 의지에 일어난

16) 위의 책, p.21.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물론 원전 입지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원전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한 주민도 결코 적지는 않았다. 확실히 주민에게는 가나자와(金澤)나 오사카(大阪) 등에서처럼 도시적이고 편리하며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생활에 대한 동경이 컸다. 오사다(長田)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가을이 되면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노토 사람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빈곤했을지 모르지만 생활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토 사람들은 대대로 그곳에서 꼭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 가나자와나 오사카, 교토가 갑자기 눈부시게 보이면서 그런 생활 방식이 가난하다는 식의 가치관이 어느 새인가 노토 사람들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¹⁷⁾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의 환상을 극복하고, 대지에 뿌리를 둔 생활을 선택했다. 그것은 ‘진중 오오타니파 노토 원전 반대 모임’의 주장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신란 님에게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받은 것은 모두 여러 세대에 걸쳐 마주하고 살아온 부모형제”라고 배워 왔습니다. 맑은 공기, 맛있는 물, 깊고 푸른 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해산물. 파괴와 오염으로 노토에서 이것들을 잃는다면 무슨 번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차손에게도 남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밖에는 없습니다. 노토에는 원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¹⁸⁾

원전 문제가 인연이 되어 노토반도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를 미끼로 원전 입지를 실현하려는 세력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자신들의 생활이 결코 비참하지 않으며, 자연과 공생하는 데에서 오는 풍요로운 삶

17) 위의 책, p.26.

18) 위의 책, p.26.

에 눈뜨고서 원전 반대 운동에 참가했다. 이 운동은 도로에 몸을 뉘어 검사 차량을 세운 노파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비폭력·불복종 운동에 따른 것이었다. 또 원전 조사 작업원에 대해 예를 갖춰 합당한 노인의 행위에서는 원전 입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눈을 참으로 뜰 수 있게 해준 불·보살로 보는 신앙 체험이 느껴진다. 여기에는 자기 적대자와의 공생의 가능성이 보인다. 노토의 원전 문제는 사람들에게 환경과 생활의 파괴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가져왔다. 그래서 반대 운동도 생겨난 것이다.

그러한 인식과 운동이 크게 발전한 것은 승려와 신자들 속에 옛적부터 조도신수가 뿌리내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원전 입지 문제에만 전쟁에만 국민 생활을 파괴하는 국책이라는 공통점이 들어있으니, 전쟁 협력을 구체적으로 참회하려면 원전 반대 운동을 해야 하며, 이 운동을 밀고 나가는 것이 진속이제론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란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 바로잡는 모습을 『현정토진실교행신증문류(顯淨土眞實教行証文類)』에서 아도세(阿闍世)의 회심 참회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세존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오랫동안 지옥에 떨어져 한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겠지요. 저는 이제 부처를 뵈었습니다. 부처를 깨달을 수 있는 공덕을 얻었으니, 중생의 번뇌를 끊어 악한 마음을 타파하고 싶습니다. ...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틀림없이 중생의 온갖 악한 마음을 타파할 수 있다면 저는 무간지옥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아도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¹⁹⁾

아도세는 여래의 지혜의 빛에 감싸여 부친을 죽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19) 淨土眞宗敎學研究所淨土眞宗聖典編纂委員會 編, 『顯淨土眞實教行信証文類(現代語版)』(京都: 本願寺出版社, 2000), p.296.

는 회심·참회했다. 이전 자기의 생명은 끝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 진실한 인간으로 변한 아도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타파하는 투쟁에 참가한다고 선언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마가다국의 무수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부처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 아도세는 어전의 사(소아과 의사)인 기바(耆婆, Jivaka)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바여,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깨끗한 몸이 되었다. 짧은 생명을 버리고 긴 생명을 얻었고, 무상의 몸을 버리고 불멸의 몸을 얻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 최상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다.”²⁰⁾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조했던 책임을 참회하는 것은 평화와 일상을 파괴하는 상황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참회를 방해하는 진속이제론은, 노토반도의 반원전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으로 넘어서야 한다. 또 그 운동은 적(敵)에게서 여래를 보는 것이고, 공생(共生)의 이치를 여는 것이기도 하다. 원전 입지를 계기로 벌어진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자기 신심 및 신앙의 심화이고, 더 깊은 인간성의 획득이기도 하다. 노토반도 스즈시의 원전 반대 운동은 전쟁 협력에 대한 참회를 좁은 의미의 신앙 차원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고 현실 문제와 결합시켰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진속이제론을 그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전 문제만이 아니라 국책으로 정해졌던 전쟁 자체를 물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각료가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고 헌법 9조를 부정하려는 방향성이 강해지고 있는 오늘날 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 위의 책, p.297.

2. 진속이제론과 야스쿠니신사 문제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세워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침략했던 국가신도 체제는 1945년 12월의 신도지령(神道指令)으로 해체되었다. 1946년에 공포된 헌법 20조에서는 정교분리(政教分離) 원칙이 정해졌고, 제9조에서는 전쟁포기(戰爭放棄)가 선언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후 국가신도 체제가 해체되고 ‘대일본제국헌법’이 부정되었으며 새로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신도의 근본적 종교시설인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는 존속하고 있을 뿐더러, 다시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끄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따라서 승려와 신자들이 진속이제론을 극복하고 조도신슈를 인간 해방의 종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쳐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고도경제성장의 시대인 1960년대에 일본의 국민 총생산은 세계 제2위가 되었고, 자본주의 경제는 국제화를 향해 갔다. 60년대부터 70년대 즈음에는 전쟁 책임의식이 희박해졌고 방위력은 증강되어 갔다. 그런 현실 속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전몰자 추도식(1963년 8월 15일) 때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으로부터 일본의 “평화와 발전 및 성장은 전몰자의 희생 덕분”이라는 발설이 나왔다. 여기서도 국가가 전몰자와 유족에 대해 사죄한다거나 “두 번 다시 불합리한 죽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은 결코 들려오지 않았다.²¹⁾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 야스쿠니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고도 경제성장기였던 1960년대 후반은 전쟁 책임과 침략의 역사를 망각하면서 방위력을 증대해가던 때였다. 1969년 6월 30일 자민당은 ‘야스쿠니신사 법안’을 제61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했다. 다나카 신조(田中伸尙)에 의

21) 田中伸尙, 『靖國の戦後史』(東京: 岩波書店, 2007), p.87.

하면, 이 법안의 목적은 “야스쿠니신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 내각 총리대신이 관할한다는 데 있었다.” 그 내용은 “국가와 천황을 위해서 전몰한 사람들을 신(神)으로 기리면서 야스쿠니신사가 가지는 영령현창(英靈顯彰)이라는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관철시키는 것이었다.”²²⁾ 법안의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전몰자 및 국사(國事)로 순직한 사람들의 영령에 대한 국민의 존송의 뜻을 나타내고자, 그 유덕(遺德)을 사모하고 위로하며 그 사적(事績)을 기리는 의식 행사 등을 열어 그 위업을 영원히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³⁾

이러한 목적에는 메이지 유신 이래의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도리어 전쟁이 정당하다는 전제가 들어있다. 그런 까닭에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은 영령=신으로 모셔지고 영령으로 칭해진다. 그들의 사적(事績)은 의식행사(국가신도의 종교의식)를 통해 칭송되고 현창되어 그 위업이 영원히 전해진다. 그래서 그 영령=신을 본받아 그것을 계속해 가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히시키 마사하루(菱木政晴)는 국가 신도의 교의를 ① 성전(聖戰, 자국의 전투 행위는 항상 옳바르니 그에 참가하는 것은 숭고한 의무이다), ② 영령(英靈, 그러한 전투에 종사하다 죽으면 신이 되니, 그 때문에 죽은 이를 제사지낸다), ③ 현창(顯彰, 영령을 모범으로 하고 그것을 본받아 이후에도 이어간다²⁴⁾)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법안은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

조도신슈가 일본의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말은 종단 스스로 이 국가신도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베 오사무(神戸修)는

22) 위의 책, pp.101~102.

23) 위의 책, p.102.

24) 浄土真宗本願寺派安藝教區 編, 『浄土真宗の平和學』, p.98.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⁵⁾

국가 신도란 내용 면에서 “천황은 신이다=신이 통치하는 일본은 신국이다 =신국이 벌이는 전쟁은 성전이다=성전의 희생자는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부를 국체사상(國體思想), 후반부를 야스쿠니사상(靖國思想)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과 조도신슈 교학의 모순을 유사하게 지양시킨 것이 소위 ‘전시교학’(戰時敎學)이다.

우선 ‘천황은 신이다’라는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주장했다(고베 요약, 이하도 고베의 요약을 따랐다). “조도신슈에서 말하는 신(信)과 행(行)은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일으킨 것이자 동시에 천황에게 바친 것이기도 하다.”(普賢大圓, 『真宗の護國性』, 1943年). 다음에 ‘일본은 신국이다’라는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주장했다. “일본 국가란 추상적인 전체가 아니고, 일본 신화의 중심인 현신인(現神人) 천황을 받들어 하나에 이르는 구현이다.”(위와 같음). … 또 ‘일본이 벌인 전쟁은 성전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의 전쟁은 천황의 이름으로 벌인 것이기에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 싸움에 참가하는 것은 자타 모두 생명을 살리려는 대승불교의 정신과 일치한다.”(梅原眞隆, 『興亞精神と佛教』, 1939年). 게다가 ‘성전의 희생자는 명령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환상섭화(還相攝化, 정토에 태어난 자가 현실 세계로 되돌아와 사람을 구제하는 일)란 칠생보국(七生報國, 일곱 번 태어나고 변화해 국가와 천황에 봉사)하는 것이다.”(戰時敎學指導本部, 『皇國宗教としての淨土眞宗』, 1944年)

이 야스쿠니신사 법안에 대해서 1967년 7월에는 그리스도교 교단이

25) 神戸修, “佛敎徒にとって日本國憲法9條とは何か,” 『念佛者9條の會ニュースレター』 No. 16 (2013년 11월 15일), p.14.

반대 성명을 내었고, 1968년에는 전일본불교회에서도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1969년 2월에는 조도신슈 혼간지총회가 전 회원 만장일치로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 반대결의(靖國神社國家護持反對決議)’를 했고, 3월에는 혼간지파 총장이 반대했으며, 조도신슈 오오타니파 총장은 국가호지 법안 반대 의사를 정부에 표명하는 요청을 했다. 1969년에는 전국 30곳에서 야스쿠니 법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법안은 1969년 8월 5일에 폐안이 되지만, 이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합계 5회에 걸쳐 다시 제안되었고, 다시 폐안이 되었다. 자민당은 국민의 비판이 강해지자 1975년에 법제화를 단념하기에 이른다. 야스쿠니신사 법안이 실현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나카 신조(田中伸尚)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의 국가호지 법안은 네 가지 벽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첫째는 그리스도교인, 불자 등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끈질긴 반대 운동이 고조됐기 때문이고, 둘째는 나고야 고등법원이 처음으로 정교분리 소송에 대해 위헌 판결했기 때문이며, 셋째는 모든 야당의 반대까지 더해져 74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함으로써 참의원의 보수와 혁신이 백중세가 되자 그 영향으로 야스쿠니 법안을 심리하는 내각위원회가 ‘보혁역전’(자민 9, 야당 10)된 정치 상황의 변화 때문이었다. 그리고 넷째 벽은 참의원 법제국의 견해였다.²⁶⁾

야스쿠니 법안의 좌절 후 야스쿠니 추진파는 공식 참배(公式參拜) 노선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런 분위기를 축적시켜 최종적으로는 야스쿠니 국가호지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쟁 전에도 황족이나 공적 신분을 가진 이가 그 신분을 가지고 참배하는 경우를 정식 참배(正式參拜)라고 부르면서, 일반 참배와는 구별해왔다. 이 정식 참배를 ‘공식 참배’라

²⁶⁾ 田中伸尚, 『靖國の戦後史』, p.139.

는 말로 바꾸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참배할 때의 지위와 신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을 철저히 시도한 것이 1985년 8월 15일에 행해진 나카소네(中曾根) 수상의 ‘공식 참배’였다. 나카소네 수상은 수상이라는 자격으로 참배했고, “다마쿠시료(玉串料)와 교카료(供花料)의 실비를 공비로 지출했다”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 참배’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긍정하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이라는 정치·사상적 배경 속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그 의도는 1985년 7월에 개최된 가루이자와 세미나(軽井澤セミナー)에서 했던 연설에 나타나 있다. 거기서 나카소네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느 국가에서든, 가령 미국에는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고, 소련에 가도 무명전사의 무덤이라든가, 나라를 위해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감사를 바치는 장소가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라에 목숨을 바치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게다가 헌법에 위반이 되지 않게, 바꾸어 말하면 정교분리, 즉 종교와 정치의 분리의 문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서(야스쿠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⁷⁾

당연한 일이지만,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 참배’는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 참배에 대해 자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항의와 유감의 성명 등이 나왔고, 종교계에서는 전일본불교회, 신슈(眞宗)교단연합,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가톨릭주교협의회, 일본침례교연맹, 신일본종교단체연합 등에서 항의, 반대, 요망사항 등이 나왔다.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공식 참배’는 일본국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는 일치하고 있었다. 또 여러 지

27) 菱木政晴, 『浄土真宗の戦争責任(岩波ブックレット)』(東京: 岩波書店, 1993), p.28.

방 법원에 이 ‘공식 참배’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었고, 오사카 고등법원의 공소심에서는 “동(同) 참배는 헌법 2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 활동 부분에 저촉된다는 혐의가 강하고, 동(同) 조항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²⁸⁾ 후쿠오카 고등법원의 공소심에서도 “수상의 참배가 제도적으로 계속되면 위헌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²⁹⁾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를 계기로 혼간지파에서는 1984년에 결성된 ‘반야스쿠니연대회의’가 본격적으로 활동했고, 혼간지파의 승려 스가와라 류켄(菅原龍憲) 선생은 1986년 1월 ‘신슈유족회’(眞宗遺族會)를 결성했다.

야스쿠니 문제의 큰 고비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야스쿠니신사 법안을 둘러싼 투쟁(1969~1975년)이고, 둘째는 1985년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이며, 셋째는 2001년 여름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이다. 이 해 6월에는 신슈(眞宗)교단연합, 신슈(眞宗)유족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성공회, 일본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등에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 성명서와 그와 관련한 요망서가 나왔다. 고이즈미 수상의 참배의 특징은 ① 이미 1991년 1월의 ‘수상의 공식 참배는 위헌’이라는 센다이(仙台) 고등법원의 판단 및 1992년 7월의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② 아시아 각국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⁰⁾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종래와는 다른 매우 중요한 운동을 일으켰다. 이 점에 대해서 다나카 노부마사(田中伸尙)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8) 小泉首相靖國神社參拜違憲九州・山口訴訟團 編, 『參拜したら違憲』(東京: 明石書店, 2004), p.197.

29) 위의 책, p.241.

30) 田中伸尙, 『靖國の戦後史』, ‘はじめに’.

세 번째의 ‘야스쿠니 문제’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민중 차원에서 국민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질문의 단편이 나왔다는 점이다. 2002년 9월 까지 재일 외국인이나 재한·재미 전몰자 유족들을 포함한 약 2000명이 국가·고이즈미 수상·야스쿠니신사 등을 피고로 전국 6개의 법원에 ‘고이즈미 수상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소송(小泉首相靖國參拜違憲訴訟)’을 제기했다. 야스쿠니 문제로 민중이 ‘국민’의 경계를 넘어, 공동원고가 되어 위헌 소송을 일으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스가와라 류켄(菅原龍憲, 2001년 8월 부친의 합사 철회를 야스쿠니신사 측에 요구한 조도신슈 혼간지파의 승려) 씨도 원고로 참여해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야스쿠니소송이 ‘아시아소송(アジア訴訟)’이라고 명명된 것은 상징적이다. 이런 식으로 야스쿠니 문제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계속 방치해 온 전쟁 책임·전후 책임이 추궁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³¹⁾

이 가운데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고이즈미 수상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모두 211명으로, 불교의 승려 또는 신도(55명, 유족 6명 포함), 그리스도교 신부, 목사 또는 신도(74명, 유족 2명 포함), 특정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80명, 유족 2명 포함), 재일한국인(2명) 등 다양하다. 원고 가운데는 전후 태생도 있었다. 1955년 태어난 정토진종 승려 소토메 다쿠야(外海卓也) 선생은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석존께서는)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평화의 실현, 각자의 마음의 평화(안심)를 확립하는 길을 걷는 것이 불교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혼간지 교단도 적극적으로 전쟁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문법전도(聞法傳道)를 계속하면서 가을의 피안회(秋の彼岸會)에 모든 전몰자 추도 법요를 권유하고 있다. 피고인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는 그러한 나의 노력을 모욕하고 방해하는 것이다. 불교의 평화 정신을 폄훼할 뿐만 아니라, 불도를 살아내려는 나의 신심도 손상시켰다.”³²⁾ 원고인 조도신슈 다이호지(淨土眞宗 大法寺)의 주지

31) 小泉首相靖國神社參拜違憲九州·山口訴訟團 編, 『參拜したら違憲』, p.199.

인 오마츠 류쇼(大松龍昭)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석존은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하니’ ‘불살생’하라고 가르치신다. 그것이 전쟁을 부정하는 원리이다. 신란은 ‘살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음을 자각하고서 그 어리석은 나를 반드시 구제하려는 원을 세우신 아미타 불의 본원에 귀의했다. 그런 가르침을 거역하고 전쟁에 협력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斬鬼する). 대학원에 진학해 ‘야스쿠니 문제 학습회’에 입회해 이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것은 야스쿠니의 주술적 속박(呪縛縛)으로부터 해방되는 ‘신앙의 회복’이었다. ... 나카소네는 헌법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고이즈미는 감정론으로 강행했다. 국민에게는 헌법보다는 감정 쪽이 이해하기 쉬운 만큼 악질이다.”³³⁾

이러한 진술서에는 분명히 신앙에 기초를 두고서 조도신슈의 전쟁 책임을 묻고 참회하는 방식으로 야스쿠니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 불자로서 평화를 목표로 하는 운동은 결코 종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인, 특정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재일한국인도 포함해, 타자와의 연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담고 있다. 거기서 아시아의 평화 실현으로 향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생겨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9월에 걸쳐 후쿠오카, 마츠야마, 오사카, 도쿄, 지바, 나하 등 6개의 지방 법원에서 제기된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소송’에는 “원고가 일본인만이 아니라, 재일외국인, 그리고 이희자(李熙子, 1959년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부친의 합사 취소를 요구했다)씨와 김경석(金景錫,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 회장)씨 등 UNGUN 재판의 원고를 포함한 한국의 유족들 수백 명이 경계를 넘어 합류했다. 지금까지의 정교분리 소송의 스타일을 완전히 넘어섰다.”³⁴⁾

32) 위의 책, p.126.

33) 위의 책, p.132.

34) 田中伸尙, 『靖國の戦後史』, p.229.

2004년 4월의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는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헌법 20조 제3항에 반한다”라고 판결했다. 조도신슈의 전쟁 책임·참회의 구체적 행동은 이처럼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본인의 운동을 넘어서 아시아 사람들과의 연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 조도신슈의 반원전을 위한 대응도 이러한 아시아의 평화 실현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실천을 통해 이 싹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3. 반원전 운동과 야스쿠니 문제 대응 방식의 공통점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은 조도신슈의 근본경전인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에서 법장보살이 아미타불이 되기 위해 세웠던 48가지 서원과 통한다. 법장보살의 서원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무삼악취(無三惡趣)의 원(願)’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내(법장보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나라에 지옥이나 아귀나 축생이 있다면, 나는 결단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전쟁, ‘아귀’는 기아, ‘축생’은 반성 없는 자기중심주의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세운 서원은 전쟁으로 인한 살인과 기아를 없애고 반성 없는 인간을 가려냄으로써(紓す)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법적 기반은 “전쟁 포기(戰爭放棄)·전력 불보지(戰力不保持)·교전권(交戰權)의 부인(否認)”이라는 헌법 9조에 있다. 두 번째의 서원은 ‘불갱악취(不更惡趣)의 원(願)’(두 번 다시 위 세 가지의 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서원)으로서, 항구적 평화의 실현을 의미한다. 세 번째의 서원은 ‘실개금색(悉皆金色)의 원(願)’(모든 사람을 금색, 즉 최고의 평등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서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의미한다. 네 번째의

서원은 ‘무유호추(無有好醜)의 원(願)’(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게 하겠다는 서원)으로서, 평화가 실현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이것들은 일본국 헌법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로서 평화 실현의 법적 조건을 말한 것이다. 이것들의 법적 조건을 실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역사인식과 윤리이다. 그것은 ‘육신통(六神通, 불보살이 가진 불가사의한 여섯 가지 힘)에서 잘 드러난다.

육신통의 첫째는 ‘영식숙명(令識宿命) 원(願)’(역사적 과거를 다 아는 서원)이다. 이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생겨난 역사적 과거를 다 아는 서원으로서, 헌법 9조와 20조를 생각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는 ‘영득천안(令得天眼)의 원(願)’(보통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약자와 타자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서원)이고, 셋째는 ‘천이요문(天耳遙聞)의 원(願)’(보통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약자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서원), 넷째는 ‘타심실지(他心悉知)의 원(願)’(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서원), 다섯째는 ‘신족여의(神足如意)의 원(願)’(고뇌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가지는 서원)이다. 여섯째는 ‘불빈계심(不貧計心)의 원(願)’(자기 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되는 서원)이다.

여기까지 제시된 열 가지의 서원에는 법적 정비, 역사 인식과 윤리,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진술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후의 서원에 기술되어 있지만, 그 해방의 존재 방식은 열 가지의 서원이 헌법 9조 및 그것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헌법 20조—신교(信敎)의 자유·국가신도와 국가의 유착에 대한 부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 협력에 대한 참회를 기초로 한 조도신슈 승려와 신도의 반원전 운동과 반야스쿠니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서원의 실천이다. 그뿐만 아니라 열 가지 서원의 정신을 타종교는 물론 특

정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평화 운동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V. 결론

조도신슈가 침략전쟁에 가담해 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패전 당시 한반도에는 132개의 혼간지파 절이 있었고, 중국에는 115개의 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원은 패전과 함께 모두 폐사되었다.³⁵⁾ 이것이 침략전쟁과 하나가 되었던 비불교적인 조도신슈의 모습이었다. 근대의 조도신슈는 신란의 가르침에 반하는 진속이제론을 기초로 불교 본연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식민지주의와 일체가 되어 아시아 침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전쟁 협력에 대한 반성적 실천의 구체적인 예로서 조도신슈 승려와 신도가 참가한 반원전운동과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대응 양상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응은 헌법 9조와 20조를 시민의 생활 속에 살게 해주는 운동이기도 하다. 헌법 9조의 ‘전쟁 포기·전력 불보지·교전권 부인’은 불교의 ‘불살생’과 직결되는 것이다. 석존은 불살생을 추상적으로 설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살생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하는 살생 행위(전쟁)도 멈추게 하는 실천적 행위를 중시한 것이다.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ダンマパダ(Dhammapada, 法句經)」 129)라는 석존의 요청은 비상한 현실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박해온다.

35) 『憲法9條は佛のお願い』, p.135.

진속이제론을 극복하는 길은, 13세기 일본에서 신란이 보여준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민중 해방의 길을 현대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만일 신란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그 속에서 경전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면, 그것을 결코 과거의 일로 두지 않고, 현실의 문을 열어가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바일 것이다.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트헤이트와 투쟁하며 태어난 상황신학(Contextual Theology)은, 모든 인종이 공생하는 민주적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설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처럼 조도신슈도 반원전 운동이나 반야스쿠니 운동을 통해 타자와 연대하고 공생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평화 실현을 결합시켜 진속이제론을 불식시키는 길을 걷고 있다. 조도신슈는 이후에도 아시아의 평화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접수: 2013년 12월 11일 / 심사: 2013년 12월 20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20일

【참고문헌】

외국어단행본

- 大西修. 『戰時教學と淨土眞宗』. 東京: 社會評論社, 1995.
- 菱木政晴. 『淨土眞宗の戰爭責任(岩波ブックレット)』. 東京: 岩波書店, 1993.
- 梅原眞隆. 『興亞精神と佛教』. 京都: 本波本願寺教務部, 1939.
- 普賢大圓. 『眞宗の護國性』. 東京: 明治書院, 1943.
- 小泉首相靖國神社參拜違憲九州・山口訴訟團 編. 『參拜したら違憲』. 東京: 明石書店, 2004.
- 信樂峻鷹. 『宗教と現代社會』. 京都: 法藏館, 1984.
- 信樂峻鷹 編. 『近代眞宗思想史研究』. 京都: 法藏館, 1988.
- 玉光順正. 『いのちを奪う原發(眞宗ブックレット No. 9)』. 京都: 東本願寺出版部, 2000.
- 日本宗教者平和協議會 編. 『宗教者の戰爭責任懺悔・告白資料集』. 東京: 白石書店, 1994.
- 田中伸尚. 『靖國の戦後史』. 東京: 岩波書店, 2007.
- 淨土眞宗教學研究所淨土眞宗聖典編纂委員會 編. 『顕淨土眞實教行信証文類(現代語版)』. 京都: 本願寺出版社, 2000.
- 淨土眞宗本願寺派安藝教區 編. 『淨土眞宗の平和學』. 京都: 同朋舎出版, 1995.
- 淨土眞宗本願寺派日常勤行聖典編纂委員會 編. 『淨土眞宗聖典』. 京都: 本願寺出版社, 1988.

기타

- 神戶修. “佛教徒にとって日本國憲法9條とは何か.” 『念佛者9條の會ニュースレター』, No. 16 (2013년 11월 15일).
- 原子力行政を問い直す宗教者の會 編. 『‘國策=核燃サイクル’を問う—今, 宗教者として』. 第3回 原子力行政を問い直す宗教者の會 六ヶ所 全國集會報告集, 1996.

Japanese Buddhism and Its Peace Realizing Movement, Focusing on Shin Buddhism(淨土眞宗)

Rev. Kitajima, Gishin (Professor Emeritus at Yokkaichi University)

Abstract

As Fifty Years Post-war came near, many Buddhist Orders resolved to admit the cooperative responsibility for the aggressive War against the Asia and Pacific areas and to confess their sins to the victims. It is up to us, as Buddhists, to decide how to actualize these resolutions in our religious lives. At first, in order to enrich the realiza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asons why Japanese Buddhist Orders collaborated with the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State Shintoism in the process of nation state building.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grasp explicitly the present issue of peace realization that we are facing.

In Shin Buddhism(淨土眞宗), with ten factions, more than 20,000 temples and over 20 million followers, all Religious Orders cooperated with the Imperial System on the Combined Theory of Religious and Secular Truth (眞俗二諦論) that was against St. Shinran (親鸞聖人), forcing followers to obey blindly the State, and to confine religious faith to their minds only. In the 13th century, St. Shinran once said that even those who have committed homicide and reviled the Buddhist teaching shall be saved if they realize

their sinfulness and turn their thought towards Buddhist goals.

In this essay, I explain Anti-Atomic Power Generation Movement in Suzu City (珠洲市) and Anti-Yasukuni Shrine Movement in which priests and followers of Shin Buddhism have participated to practice repentance for their sins. Their peace movement is not only a religious one but also a citizens' campaign that is inseparably connected to Article 9 and 20 of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they have based their movement on the Buddhist principle that says, "You shall not slay, you shall not cause to slay," to respect others as human beings.

Key words: Shin Buddhism(淨土眞宗), St. Shinran(親鸞聖人), Combined Theory of Religious and Secular Truth (眞俗二諦論), Confession to War, Anti-Atomic Power Generation Movement, Anti-Yasukuni Shrine Movement

기타지마 기신(北島義信. Kitajima, Gishin) —————

오사카(大阪) 시립대학 대학원에서 문학연구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신슈(眞宗) 다카다파(高田派) 정천사(正泉寺) 주지를 맡았고, 현재 일본 오키아이치(四日市) 대학의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淨土眞宗と平和』(2003), 『親鸞復興—自己中心の世界を超えて』(2004) 등이 있다.

역자: 이찬수(Yi, Chan-Su) —————

서강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불교학과 신학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비교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남대 교수, (일본) WCRP평화연구소, 중앙학술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종교로 세계 읽기』, 『한국 그리스도교 비평』, 『일본정신』,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종교근본주의』(공저) 외 다수의 책을 썼다.

【서평】

폭격은 제노사이드다:

폭격의 역사로 본 대량학살의 구조

* 김태우, 『폭격-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파주: 창비, 2013.

강성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폭격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다. 이라크전쟁 개전과 시작된 미 공군의 압도적 위력의 폭격. 그 강렬함은 단지 ‘대량’이어서가 아니라 CNN 방송 등에서 시각화된 ‘초정밀’ 무기체계의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방송에서 목격한 전쟁은 피와 살이 튀는 참혹함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매끈한 스펙터클이었다. 그런데 그 시각의 사각은 무엇이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알자지라 방송이 그 사각을 시각화했다. 정밀폭격의 결과 파괴된 것은 시장과 민간인들이었다. 특히 머리가 반쯤 날아간 이라크 소년의 처참한 모습을 클로즈업한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당시 미국은 이를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로 규정했다. 이 용어는 “정당한 군사목표가 아닌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비의도적 혹은 우발적으로 입힌 상해 혹은 손해”를 의미하는 군사적 용어였다.

『폭격』의 저자인 김태우가 책 서두에서 ‘부수적 살인’이라는 동영상을 언급했을 때, 그 기억이 오버랩 되었다. 미군 아파치헬기 조종사들이 바그다드 근처 소도시의 일상을 살아가는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 기총소사를 한 후 그 장면을 보며 농담하고 웃는 모습, 이를 두고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임무였음에 틀림없다”(김태우, 2013:16, 이하 쪽수만 표기)고 강조하는 저자. 이를 두고 가만히 곱씹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것이다. 조종사들의 행동은 결코 평범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충격적 모습인데, 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왜 ‘부수적 살인’일까?

‘부수적’, 즉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조종사들이 민간인들을 무장한 적으로 오인했다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조종사들의 오인이 아니라 일방적 간주였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이는 분명 저자가 앞서 조종사들의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임무”라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미군 조종사들의 행위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백년에 걸친 인류 공중폭격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비행에 성공하자마자 공중에서 지상을 폭격하는 자멸적 꿈에 빠져들게 된 역사”(20)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차 대전 시기 군사정책으로 채택된 대량폭격은 조종사 개인의 (선/악) 성향을 뛰어넘는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저자가 10년 넘게 한 길로 정진하면서 분석한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의 실체는 그러한 차원에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 ‘실체’란 그가 엄청난 높이로 쌓아올린 자료 더미를 꼼꼼히 분석하며 구성한 실증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사실들 속에서 건져 올린 대량폭격의 구조적 실체가 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폭격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면서 설령 전술적인 정밀폭격이 추구된다

하더라도 폭격은 구조적으로 대량학살을 배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폭격에 대한 이론적 성찰은 군사적 폭격이론을 넘어서 제노사이드(genocide)¹⁾ 이론, 더 나아가 폭력론의 지평과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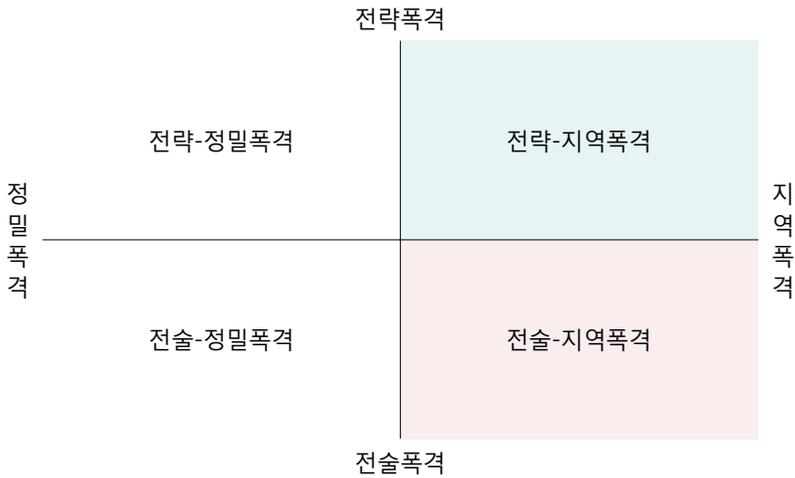
2.

책 1장의 폭격의 역사는 ‘개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저자는 양차 대전의 폭격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도에서 달았을 것이다. 동시에 이 장은, 아마 그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책 전체를 읽어나가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관이라 할 만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장은 ‘폭격의 유형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책 속에서 제시된 압도적으로 수많은 사실들 속에 매몰되지 않은 채 다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는 공군이론의 창시자들을 검토하면서 전술폭격과 전략폭격, 그리고 정밀폭격과 지역폭격의 개념들을 추출한다. 전술폭격은 제공권 장악을 통해 지상·해상부대의 작전·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중폭격을 말하지만, 전략폭격이란 적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 적의 주요 도시, 생산시설, 전력·교통·통신시설, 정치·군사의 중추부를 파괴하는 공중폭격을 의미한다(28). 또한 정밀폭격은 주요 군사·산업시설에 대한 제한된 공중폭격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

1) 제노사이드는 통상 ‘집단살해’, ‘대량학살’의 의미에서 사용되지만, 본래는 그러한 물리적 파괴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삶의 토대 및 사회적 양식에 대한 사회적 파괴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물리적인 대량학살은 제노사이드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이 주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맥락은 삭제되어 제노사이드는 의도성을 가진 집단살해로 축소되었다. 강성현, “제노사이드와 한국현대사: 제노사이드의 정의와 적용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8 (2010); 역사학연구소 편, 『한국 민중사의 새로운 모색과 역사쓰기』, 서울: 선인, 2010, pp.225~227.

해, 지역폭격(또는 목표구역폭격)은 군사용도시설과 주변 민간주거구역 등 시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군사 목표로 간주하고 무차별 폭격하는 것을 말한다(29, 35). 이 개념들을 활용하면 다음의 표를 만들 수 있다.



〈표 1〉 폭격의 유형화

제2차 세계대전은 전략폭격으로서의 지역폭격이 무차별적으로 실시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략-지역폭격이론의 창시자들이 의도했듯이, 폭격의 주요 대상은 후방의 적 국민, 즉 (비무장) 민간인들이었다. 1940년대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도시에서 전략-지역폭격으로 엄청난 양의 소이탄이 대량 투하되었고, 그 불바다 속에서 민간인들, 그 중에서도 여성, 아이, 노인 다수가 학살되었다. 특히 함부르크(1943.7.27.), 드레스덴(1945.2.13.), 도쿄 폭격(1945.3.9.)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사망한 민간인은 각각 약 5만 명, 3만 5천 명, 10만 명이었다.

이 대량폭격은 일반의 법-윤리 감각에서 볼 때 비인간적인 범죄였고, 조직적인 전쟁범죄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폭격으로 인한 대량학살은,

마크 셸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잊혀진 대학살(Forgotten Holocaust)’이 되었다. 연합국이 추축국의 대량폭격을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문제 삼게 되면, 그것이 연합국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만이 유일무이한(unique) 대학살로 단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현대성과 문명-폭력의 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토대의 절반을 인류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꼴이 되었다. 물론 나머지 절반의 토대가 전후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 세계인권선언,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 등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성찰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당시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보면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

3.

냉전의 형성과 한국전쟁의 발발은 그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저자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전쟁 내내 한반도 전역에 미공군의 공중폭격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한의 민간인들이 감내해야 했다. 공중폭격과 관련한 정확한 인적 피해 통계가 없지만, 북한 지역의 민간인만 최소 28만 2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385), 남한의 경우 전체 집계는 없지만,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²⁾

한국전쟁기의 공중폭격이 특징적인 것은 전략-지역폭격뿐만 아니라 전술-지역폭격 개념의 무차별 폭격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개전 이후 유엔군이 지상전에서 급격히 밀리자 B-29 중폭격기를 동원해 지상군 근접

²⁾ 공중폭격과 관련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부분 통계는 있다. 공보처 통계국이 집계한 1950년 6월 25일~9월 28일 서울시 ‘공폭’으로 인한 인명 피해 통계가 그러하다. 이 통계는 미 공군에 의한 이른바 ‘용산폭격’의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지원작전을 벌였다. B-29 98대를 동원해 가로 5.6km×세로 12km 직사각형 구역에 무차별 폭격한 왜관의 ‘용단폭격’(1950.8.16.)이 대표적 사례다(231~233). 그 결과는 유엔군 스스로 인정했고 북한군이 조롱했듯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헛방’이었다. 대신에 그 지역에 있던 두 개의 마을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인근에 있던 피난민들도 불바다에 휩싸인 채 사라져갔다. 아군 지상 지원 작전이든, 적군 차단 작전이든, 이와 같은 ‘맹목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쓰러져갔다. 오폭은 전선의 아군도 비껴나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리역과 조차장을 비롯한 남한의 주요 역과 조차장,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용단폭격’ 신화의 실체다.³⁾

그런데 아군을 포함해 우방 국민에 대한 이 같은 대량 폭격과 학살은 정말 의도적인 것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갖고 있고, 이를 보여주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폭격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논쟁, 특히 정밀폭격에 대한 저자의 세심한 검토는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은 민간인 피해를 가능한 제한하고자 정밀폭격을 의도했지만, 폭격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높은 오폭률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미 공군도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 공군이 성공 사례로 자랑하는 흥남폭격(1950.7.30.-8.3.)만이 민간 피해를 제한한 거의 유일한 예외였다.

전술적이든 전략적이든 간에, 혹은 정밀폭격을 의도했더라도, 대량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특히 민간인 대량학살이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 학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배태된 학살이었다는 저자의 주장은 ‘폭격의 구조’와 그 한계를 분석하는 대목에 이르면 더욱 빛을 발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은 군사목표만을 향한 정밀폭격

3) 1950년 7월 11일 전북 이리역의 폭격 때 많은 지역민들이 투하되는 폭탄들을 ‘빠라’ 폭탄일 거라 생각해 그 상황을 즐겼다고 한다. 당연 오폭의 결과는 끔찍했다.

정책을 원칙적으로 수립했지만, 당시 전략폭격작전과 전술항공작전의 통제시스템 한계와 항공기의 기계적 한계로 그 원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전략폭격의 경우 순수 군사시설과 민간인 인구밀집 구역이 서로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저고도 ‘육안폭격(visual bombing)’이 아닌 초보적 수준의 레이더에 의지한 구름 위의 ‘맹목폭격(blind bombing)’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당시 B-29기의 목표물 적중률은 기계적 한계로 인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았다. “폭 10m, 높이 200~300m의 대형건물을 ‘파괴폭탄’ 하나로 적중시킬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우며, 최소한 100~200발의 대량폭격을 가해야만 50~60%의 적중률”(145~146)을 갖는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 정밀폭격을 의도했다는 말은 사실상 기만에 가깝다.

전술항공작전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쟁 초기 급격히 밀리는 지상전 상황으로 미 공군은 근접 화력 지원을 위해 전술항공 통제반과 공중통제관 ‘모스키토’가 목표물을 유도하는 전술항공통제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초기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는 이내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표적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전술항공통제반이나 모스키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무선통신 상황도 열악했으며, 급변하는 전황 속에서 폭격선(bombing line)이 요동쳤고, 빠르게 비행하는 전폭기 안에서 주간에 이동하는 적 병력과 차량을 찾아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186).” 특히 전술 폭격기 F-80기(슈팅스타)의 항속거리는 매우 짧아서 목표 지역에 약 10-15분 정도 머물 수 있었는데, 이처럼 불안정한 무선 환경의 전술항공통제시스템과 연료 부족의 압박감이 더해지면 숨어 있는 군사적 표적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177). 그럼에도 임무는 완수해야 했기에 ‘적 병력’, ‘위장 병력’, ‘지원 세력’, ‘적 병력 집결지점’, ‘적 은폐 의심지역’ 등으로 일방적으로 간주된 표적에 갖고 있는 모

든 폭탄을 투하해 소진하고 기총소사를 가했다. 그 표적은 바로 민간인, 특히 ‘흰 옷을 입은’ 피난민이었으며, 일반 촌락과 마을이었다. 심지어 아군(유엔군)을 향한 오폭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저자는 당시 기능주의적 전쟁기제로 육성된 당시 미 공군 조종사들에 눈을 돌려 그들의 전시 행동양식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공군 조종사들은 육군·해군 장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학력이었으며, 기초교육과 훈련 과정에서도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지식이 배제된 채 조종 기술과 역량만을 요구받았다. 그 결과 전폭기 조종사들은 실전에서도 통제 시스템 상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르거나 무감각하게 임무 구역 내에 폭탄을 소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91).”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전쟁수행을 위한 일종의 부속품으로 육성”된 그들도 사실은 인간이었다는 점이다. 저자는 조종사들에 대한 다양한 인터뷰 결과물을 활용해 그들이 민간지역을 무차별 폭격한 것이나 민간인, 피난민 공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정당화 방식을 탐구한다. ‘임무위스키’의 이야기, 자신의 전투행위를 일종의 ‘소명’으로 간주한 목사 출신의 조종사 딘 헤스의 이야기, 민간지역과 민간인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하는 ‘언어 꼬리표’ 등 조종사들이 인간으로서 제노사이드적 폭격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들, ‘복종 범죄’ 연구자인 켈먼과 해밀턴 식으로 말하자면, ‘권위화’(권위 및 지시에 대한 복종), ‘일상화’(복종에 따른 폭격 행위를 일상적이고 기계적이며 고도로 프로그래밍된 작동으로 전환), ‘비인간화’의 과정을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비인간화’와 관련해 저자는 앞서 폭격의 대상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을 논의한 바 있다. 미 공군은 유럽에서와 달리 왜 일본에 대해 전략-지역폭격 정책을 고수했는지, 그리고 1948년 독도폭격사건을 분석하면서 “아시아인을 향한 미군의 인종주의적 편견”에 주목하고 있다. 미군은 “일본 놈들을 해충으로 여긴다”는 남서태평양지구 연합군 총사령관의 말은

나치가 유대인을 바라보았다는 시각 그 자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5년 후, 독도폭격사건 후 2년 후에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미군의 인종주의적 편견이 여전히 강력했을 것이라는 저자의 판단은 더욱 본격적으로 분석해야겠지만 일단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 설명은 왜 폭격이 제노사이드적일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준다. 저자가 분석한 폭격의 구조 자체가 바로 제노사이드 메커니즘, 즉 제노사이드의 제도적 메커니즘, 심리적 메커니즘,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인 것이다.⁴⁾

이렇게 볼 때 저자가 “중국군 참전과 유엔군의 패퇴”(7) 이후 미 공군의 폭격이 정밀폭격에서 무차별적인 초토화 폭격으로 이행했음을 논하는 대목은 다소 일면적이다. 워싱턴 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그리고 극동공군과 제5공군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런 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노사이드적 폭격의 피해를 다 받아내야 했던 민간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러한 시기 구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요 대도시와 일부 주변 마을에서 38선 이북과 적 점령지역 전체로 무차별적인 네이팜탄 폭격이 확산되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쟁기 3년 내내 폭격으로 애초부터 주민들에게 ‘후방’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맥아더의 발언처럼 폭격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사막화된 구역”(316)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았더라도 지옥 같은 삶을 연명해야 했다. 1950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검토된 원폭 투하 가능성과 1952년 7월 이후 소위 ‘항공압력전략’이 야기한 대량 파괴와 민간인 살상도 이런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4) 실제 제노사이드 이론가이자 사회학자인 레오 쿠퍼는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연합군의 함부르크, 드레스덴 폭격을 제노사이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eo Kuper, 1981,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p.46.

4.

2013년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핵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해이기도 했다. 2013년 4월 미국은 B-52와 B-2 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섬들에 모형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⁵⁾ 1951년 9-10월 허드슨항 작전으로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B-29가 북한 지역에 모형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중폭격에서도 원폭 투하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파괴 방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종전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합리화하고 일본 민간인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정당화했다. 그리고 한국전쟁기 수많은 제노사이드적 폭격과 원폭 투하 계획 역시 북한과 공산진영의 잔학행위가 더 악랄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합리화했다. 더 나아가 공식 미공군사에서 한국전쟁기 폭격은 오직 한국인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389).

미 공군 폭격으로 수많은 자국민 인명 피해, 물질 피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1951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듯이, 당시 한국정부의 인식과 평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자유를 위한 전쟁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숭고한 희생이었다. “강한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적 논리로 미공군의 대민폭격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사실상 봉쇄했다(389).”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작금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2010년 ‘뉴라이트’가 주도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종 종합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당시 한국이 공격을 받은 측이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긴박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군사적 필요가 민간인 보호 규범 준수보다 더 컸다(391)”고 판단하였다. 미 공군

5) 브루스 커밍스, “핵 그림자에 덮인 한국의 정전체제,” 『창작과 비평』, 제41권 4호 (2013), p.349.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대량학살을 ‘부수적 피해’,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것만 두고 판단하자면 60년 동안 변한 것이 거의 없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

강성현(Kang, Sung-Hyun)

서울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다.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공저),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공저), 『전장과 사람들』(공저), “한국의 국가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등이 있다.

원고 집필요령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평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3.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필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필자명, 영문요약문, key words, 필자 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4.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5. 논문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6.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7.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8.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년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8.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298~299.
9.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1>, <그림 1>)를 부여하고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10.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pp.20~28.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p.20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3~36.
- 최중태 · 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3~36.
-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 · 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서울: 일신사, 1994), p.15.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pp.6~51.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575~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3~36.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247.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체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p.10~15.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脱北청소년들,” 『조선일보』 (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 url을 명시할 때 세미콜론으로 연결, 웹페이지 내에서의 인용위치를 명시하는 것 등은 불필요

11.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 (1) 바로 앞 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향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p.22.
 - Suh, *Kim Il Sung*, p.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p.270.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577.

12. 참고문헌 작성

- (1) 일반적으로 국문, 영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3)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에서의 심표 대신 마침표가 사용되고 괄호가 제거된다.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2행부터는 들여짜기를 해야 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pp.107~128.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575~583.

『통일과평화』 윤리규약

I. 저자(투고자) 연구윤리와 책임

1. (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평화』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2. (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3. (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한다.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7. (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편집위원의 윤리규약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임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III. 심사위원의 윤리규약

1.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안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IV. 윤리위원회와 제재

1.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2. (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

-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
- 4. (연구윤리규정 위반내용 공개)
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